

# 동북아 4국의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과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 봉영식 · 한석희 · 유영철 · 박재적 · 최원기

# 동북아 4국의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과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봉영식·한석희·유영철·박재적·최원기

## 동북아 4국의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과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인 쇄 2014년 12월  
발 행 2014년 12월  
발 행 처 통일연구원  
발 행 인 최진욱  
편 집 인 국제전략연구센터  
등 록 제2-02361호 (97.4.23)  
주 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전 화 (대표) 900-4300 (직통) 901-2527 (팩스) 901-2543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기획·디자인 (주)현대아트컴 (02-2278-4482)  
인 쇄 처 (주)한디자인코퍼레이션 (02-2269-9917)

ISBN 978-89-8479-782-6 93340  
가 격 9500원

© 통일연구원, 2014  
통일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정부간행물판매센터:  
• 매장 : 734-6818 • 사무실 : 394-0337

# 동북아 4국의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과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본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b>요약</b>	vii
<b>I. 서론</b>	1
<b>II. 미국의 대외전략과 한반도</b>	5
1. 미국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9
2.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미 통일외교 전략	19
<b>III.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반도</b>	37
1. 중국의 대외전략, 지역전략, 그리고 한반도 전략	39
2.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중 통일외교 전략	54
<b>IV. 일본의 대외전략과 한반도</b>	69
1. 일본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71
2.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일 통일외교 전략	86
<b>V. 러시아의 대외전략과 한반도</b>	93
1. 러시아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95
2.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러 통일외교 전략	116

<b>VI. 한반도 통일 편익과 우려:</b>	
<b>아·태지역 군사·안보적 세력균형의 관점에서</b>	125
1. 아·태지역 군사·안보 질서 개황	127
2. 아·태지역 군사·안보적 세력균형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 분단 비용과 통일편익	130
3. 한국주도 통일에 대한 세력균형 차원에서의 우려와 대응 논리	137
4. 친화적 세력균형으로의 공진	143
<b>VII. 한반도 통일과 아·태지역 경제협력</b>	145
1. 한반도 통일과 아·태지역 경제협력	147
2. 아·태지역 경제협력의 현황	149
3. 아·태지역 경제협력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	159
4. 아·태지역 경제협력과 한반도 통일외교의 과제	171
5. 통일외교 전략의 시사점	173
<b>참고문헌</b>	175
<b>최근 발간자료 안내</b>	183

## 표 · 그림 목차

〈표 II-1〉 남한 핵무기 개발 찬성 이유	25
〈표 II-2〉 세대별 한미관계 불평등 인식	28
〈표 II-3〉 통일 이후 한국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될 국가	32
〈표 II-4〉 중국의 이미지	34
〈표 IV-1〉 오바마-아베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주요내용	74
〈표 IV-2〉 국가안전보장전략과 신방위계획대강 및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주요 내용	77
〈표 IV-3〉 일본의 ‘대아세안(ASEAN)외교 5원칙’	80
〈표 IV-4〉 일본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83
〈표 IV-5〉 북일 스톡홀름 합의의 주요 내용	85
〈표 V-1〉 러시아의 정책 우선순위	96
〈표 V-2〉 극동지역 자원 보유 현황	99
〈표 V-3〉 한-러, 한-중 공동성명 내용	113
〈그림 V-1〉 정권별 정치경제적 상황	95
〈그림 V-2〉 러시아 석유 · 천연가스 매장지	101
〈그림 V-3〉 러시아의 경제성장률	107
〈그림 VII-1〉 아 · 태지역 FTA 증가 추세	150
〈그림 VII-2〉 Trans-Asia 철도 네트워크	156
〈그림 VII-3〉 통일한국의 교통물류 인프라	168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을 향한 한국인들의 의지와 주도적 역할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이므로 통일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한국의 독자적인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가 필요하다. 특히 한반도 통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한반도의 분단 및 통일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동북아 4개국의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그리고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과 입장을 파악하고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을 세우고자 한다. 이와 함께 보다 거시적이고 심도있는 통일외교 전략 수립을 위해 동북아 경제협력의 관점 및 아·태지역 군사, 안보적 관점에서 한반도의 분단 및 통일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다.

미국은 한국의 주요무역국이자 안보동맹국가일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의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는 국가이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미국은 한반도 통일을 통해 핵위협 제거, 한미안보협력의 강화, 경제적 이익의 증대, 그리고 민주주의 확산과 인권 증진이라는 편익을 얻을 수 있다. 동시에 미국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 가능성, 한미 동맹관계 재정립으로 인한 주한미군 규모 조정 가능성, 한국의 중국 경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은 주요 쟁점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인식을 미국에 설명하고, 미래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한국과 미국의 안보협력 프레임에 맞춰 진행하여 통일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 지지와 협력을 얻어내야 한다.



중국은 시진핑의 집권 이후 ‘중국몽’을 제시하면서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 형성, 주변국과의 협력적 환경 형성, 그리고 남북한 지역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한국과의 관계가 강화되고 한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중국은 완충지대 전략의 대상을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주도 통일을 위해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사드 미사일 배치 문제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한국은 심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경쟁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기 보다는 ‘국익’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결정을 내리고 중국을 설득해야 한다.

일본은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약화에 대응하여 미일동맹 강화를 통해 미국과 전략적 역할을 분담하면서, 중국 견제를 위해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다. 동시에 이러한 전략을 기반으로 미일관계에서 일본의 정책 수행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일본의 전략적 위상 및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통일한국의 친중화, 통일한국의 핵무장, 통일한국과 일본의 적대적 경쟁관계 형성, 통일 전후의 대량난민의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은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통일 이후에도 자유, 인권, 시장경제, 법의 지배 등과 같은 가치를 존중할 것을 강조하고, 대일 공공외교를 통해 일본 국민들에게 한반도 통일이 일본에 주는 편익을 알려야 한다. 또한 통일한국은 핵보유를 하지 않는다는 ‘비핵 외교’를 통해 신뢰를 구축하고, 통일 대비 한미일, 한일 안보대화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급변사태 시 발생하는 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합동 대응 및 훈련이 필요하다.

러시아는 2000년 푸틴 집권 이후 ‘강한 러시아의 건설’을 내세워 근

린 국가들에 대한 영향력 강화, 집단 안보체제 건설, 군사력 강화, 극동 및 시베리아 개발 등의 세부전략을 설정하고 있다. 특히 푸틴의 '신 동방정책'은 러시아와 한국의 협력 및 관계 개선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한국과 러시아는 역사 및 영토 문제로 불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없으며, 경제적으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 따라서 한러군사협력 강화, MD 체제 편입에 대한 신중한 고려, 남북러 3각 경제협력 추진을 통해 한국 주도의 평화통일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를 얻어내야 한다.

제6장 한반도 통일 편익과 우려에서는 개별 국가에 초점을 맞춘 앞의 장들과는 달리 보다 거시적인 아-태지역 군사, 안보적 세력균형의 관점에서 한반도의 분단 및 통일이 초래하는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다. 만약 통일한국이 심화되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 사이에서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면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 지역에서 규범 계약적(normative contractual) 질서를 태동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동시에 한반도 통일이 역내 안보질서의 발전적 공진을 견인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상존한다. 이러한 관점 아래, 6장은 한반도 분단의 비용과 통일의 편익, 그리고 미국과 중국 등의 한국 주도 통일에 대한 우려를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응 논리를 전개한다.

제7장 한반도 통일과 아-태지역 경제협력에서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관점에서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을 분석함으로써 통일외교 전략의 시사점을 찾는다. 한반도 통일은 단기적으로는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비용 및 역내 참여국들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정책조정 비용을 발생시킨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통일 이후 역내 주요국 간 경제적 경쟁을 격화시킬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통일은 안보적 불안

---

해소, 거대시장의 탄생,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 및 경제적 연계성 강화 등의 정치·경제적 편익을 제공한다. 이러한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행기 북한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외교적 노력,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역내 경제협력의 활성화, 그리고 통일 이후 변화된 한반도의 경제적 여건에 맞는 새로운 동북아 지역협력 모델 구축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주제어:** 통일외교, 통일편익, 주변 4국의 통일인식, 분단비용

# **Northeast Asian Countries' Foreign and North Korea Policies and South Korea's Strategy of Unification Diplomacy**

*Bae, Jung-Ho et al.*

For the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n People's strong willingness and capability that can lead the whole process are strongly required. Moreover,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not only concern South and North Korea, but also include other international players. Therefore, in order to lay the groundwork for the unified Korea as well as to maintain a stable system after the unification, it is important to gain understandings and support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It is especially significant to identify how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and Russia, those that are closely related to Korean Unification, perceive Korea's division and unification. Based on this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obtain the support and cooperation from these four Northeast Asian nations. Hence, this research aims to devise Korea's unification strategy by discerning the national positions of the United States, Japan, China and Russia on their foreign policy and North Korean policy. At the same time, in order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and profound unification diplomacy strategy,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costs and benefits of the division and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military, security and economic aspects.

**Keywords:** Unification Diplomacy, Unification Benefits, Four Neighboring Nations' Perspectives toward the Unification, Division Costs

# I. 서론

---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한반도에는 동북아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교차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부상에 따라 동북아 지역의 전략환경에 전환기적 변화가 초래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는 한층 더 교차하고 있다. 즉, 한반도 통일문제는 남북 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국제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동북아 4국들의 이해와 지지, 협력을 확보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이를 위한 통일외교의 전개는 너무나도 중요하다.

본 연구서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에 중요한 전략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북아 4국들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에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을 연구한다.

본 연구의 제 1차 년도인 2013년도에는 동북아 주요 국가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입장과 인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즉,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2013)』에서는 ‘소논문형 설문조사’ 형태를 통하여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일·중·러의 인식을 ▲ 분단비용과 통일편익, ▲ 통일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 통일한국의 가치 등의 측면에서 분석하였고,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미·일·중·러의 긍정적, 부정적 인식 등을 살펴보았다.<sup>1</sup>

그러므로 본 연구서는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2013)』의 분석을 기반으로 도출된 미·일·중·러 각각의 국가들의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고려하면서,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에 대해 연구한다. 본 연구서에서는 먼저 미·일·중·러의 대외전략과 대북 전략을 각 국가별로 분석하고, 주요 쟁점들을 고려하면서 한국의 통일

<sup>1</sup> 배정호 외,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 6.

I
II
III
IV
V
VI
VII

외교 전략에 대해 연구한다.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에 대해서는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일·중·러의 우려와 경계를 가능한 극소화시키고, 나아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긍정적 기대에 부응하는 전략을 연구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는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 또는 태평양 지역 차원에서 어떠한 경제적, 안보적 영향을 미치고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 연구한다.

## II. 미국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은 통일기반조성을 위한 자조 노력의 강화와 한반도 평화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의 조성이라는 두 개의 축이 가동될 경우에 가능하다. 독일의 사례를 보면 통일의 내적 조건 성숙과 외적조건 성숙 간의 선순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냉전 기간 서독의 역대정부는 정당 간 정책노선의 차이가 있음에도 몇 가지 기본원칙을 일관되게 추진했다. 예를 들어 기본법 23조(기본법 적용 대상 지역)와 116조(국적조항)를 정권교체에 상관없이 유지했으며, 분단에 따른 인간적 고통의 완화와 동독 주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통일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강조하면서, 동독과의 교류·협력을 추진했다.<sup>2</sup> 대외적으로는 친미·친서방 정책 노선을 추진하면서, 동독의 종주국인 소련 고르바초프 정권의 탈냉전 신사고(New Thinking) 정책이 불러온 새로운 유럽의 안보환경을 이용했다.

1952년 맺어진 독일조약에 따라 독일 통일에는 2차 세계대전 전승 4대국의 동의가 필요했다. 반면 한반도 통일에는 외부의 법적 장애요인은 없다. 이론상으로 한반도 평화통일은 남북한 정부의 합의에 따라 주변국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그러나 한반도 통일이 단지 내적 조건의 성숙만으로 성사될 가능성은 대단히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독일의 경우와 비교할 때 남북관계의 정상화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이다.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계속된 북한의 도발과 북한 정부의 철저한 주민통제와 이념교육으로 인해 남북 주민 간 불신과 적대감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동독과 북한은 집권층의 체제수호 의지가 전적으로 다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자구적 노력만으로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

<sup>2</sup> 염돈재, 『독일통일의 과정과 교훈』 (서울: 평화문제연구소, 2010), p. 6.

또한 남북관계의 정상화를 달성한다하더라도 한반도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과제가 남는다. 남북한이 한반도 통일에 합의해도, 주요 열강들의 동의와 지지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글로벌 4강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각축을 벌이는 지정학적 요충지다. 분단 상태인 한반도 정세의 미래는 글로벌 열강 간 세력균형 변화에 달려있다. 한편으로 한반도 정세의 근본적인 변화가 열강들 사이의 세력균형과 전략적 경쟁구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정상화가 통일의 필요조건은 될 수 있지만 충분조건이 되기에는 부족하다.

독일이 1989년 10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후 1년 만에 통일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은 서독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의 동의와 지원이 수반됐기 때문이었다. 2013년 미국 씨니랜드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오바마(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이 만나 중국의 ‘신형대국화전략’과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의 조화를 논의했다. 이 때 두 열강의 대외정책에 있어 중요한 실험무대로 한반도 정세가 논의됐다. 이 사실은 한국 통일외교의 성공이 글로벌 열강들의 세력경쟁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려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통일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확보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 예로 미국은 독일 통일과정에서 이에 대해 소극적 혹은 부정적이었던 영국, 소련, 프랑스를 설득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를 통한 유럽집단안보 보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한 미국의 역할 없이 과연 독일통일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을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미국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동맹국가로서 한국의 안보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또한 주요 무역상대국이자 양자자유무역협정체결국으로 한국의 경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미국과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시장경제, 인권국가라는 공통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글로벌 패권국가인 미국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정책을 정확히 분석하고, 한반도 통일에 관한 미국의 우려를 파악해 이를 해소하는 과정은 통일외교의 성공을 위한 기본조건이다.

## 1. 미국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 가. 미국 신국방전략의 핵심 요소

미국 오바마 행정부 2기의 대외전략은 신국방전략(New Defense Strategy: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이다. 미국은 작금을 ‘전환의 시기’로 정의하고, 글로벌 재정위기로 인한 재정 건전성 위기를 극복함과 동시에 미국의 지구적 리더십을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sup>3</sup>

신국방전략의 핵심은 선택과 집중이다.<sup>4</sup> 대(對)중동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과 국방비 및 군사력 감축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여, 인도양을 포함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귀환해 중국에 군사적 우세를 유지한다는 전략이다.

신국방전략의 첫 번째 핵심은 미군 지상군 감축이다. 오바마 행정부

<sup>3</sup> The White House, “Sustaining U.S. Global Leadership: Priorities for 21st Century Defense,” (January 3, 2012).

<sup>4</sup> 김현수, “미국의 신국방전략과 한국의 대비 전략,” 『국가전략』, 제18권 2호 (세종연구소, 2012), pp. 177~178.

는 집권 1기부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한 대부분의 병력을 철수 중에 있다. 연장선상에서 미 국방부는 지난 2012년 1월에 발표한 신 국방전략을 통해 향후 이전과 같은 장기적인 대규모 작전은 수행하지 않을 것을 천명했다. 하지만 이슬람 국가(Islamic State, IS)와의 내전으로 이라크 상황이 악화되자, 2014년 8월 미국은 공습을 통해 이 지역에 또 다시 제한적으로나마 군사적 개입을 하게 됐다. 다만 2014년 8월 19일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 내전 상황으로 인해 2016년 말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완전히 철수한다는 계획이 변하는 일이 결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sup>5</sup>

신국방전략의 두 번째 핵심은 국방비 감축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 국방비 규모를 2차 대전 이전 수준으로 감축하는 계획을 진행해왔다. 부시 행정부 이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2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한 결과, 1990년대 약 3천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던 미국의 국방비는 2011년 6천8백70억 달러, 2012년 6천4백60억 달러 수준으로 빠르게 팽창했다.

역사상 미국은 관례적으로 전쟁이 끝나면 과대 성장했던 군사력과 국방비를 감축해왔다. 그러나 이전과 달리 이번 미국의 군사력·군사비 감축은 그 어느 때보다 급속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2008~2009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로 미국경제가 크나큰 위기상황에 빠져들며 미국이 정치·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었다.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 2008년에 터진 금융위기로 인해 오바마 행정부 집권 첫 해인 2009년 미국 경제성장률은 -2.4%를 기록했다.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금리인하와 채권매입을 통한 양적완화정책으로

---

<sup>5</sup>- *New York Times*, August 19, 2014.

경기부양을 했다. 한편 미국의회는 증가하는 미국의 재정적자와 국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2011년 8월 예산통제법(Budget Control Act of 2011)을 의결했다. 2021년까지 10년간 약1조 1천억 달러 규모의 지출을 자동삭감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국방비는 삭감이전에 비해 약 8.5% 줄어든 4천540억 달러로 낮아질 것으로 추산됐다. 2011년 8월 스탠다드 앤 푸어스(Standard and Poors)는 미국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했다. 미국경제의 회복에 대한 비관적이거나 신중한 분위기가 전반에 흘렀다.

2012년 재선에 성공한 오바마 대통령은 양대과제를 놓고 씨름해야 했다. 미 정부에는 아이젠하워 행정부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의 지출만이 허용됐고, 대규모 경기부양책 없이 경기회복과 9%를 넘나드는 장기 실업율을 해소해야 했다. 다행히 2009년 1조4127억 달러까지 불어났던 연방 재정적자 규모가 2013년 6795억 달러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는 곧 ‘작은 정부’, ‘책임 있는 정부’를 외치는 공화당의 공세에 직면하였다. 2012년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의 의료보험개혁안에 반대하며 이와 정부지출 삭감을 연계해 민주당 정부를 공격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부자 증세(고소득층 소득세·상속세율 인상), 장기실업수당 연장과 중산층 이하 세액공제 유지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공화당은 총력을 기울였다. 공화당의 무기는 연방정부 부채 한도 증액 거부를 통한 연방정부 폐쇄로 대(對)국민 업무 마비를 이끄는 것이었다. 거의 두 달이 걸린 공화당 대 민주당의 대립은 ‘재정절벽(budget cliff)’ 위기를 초래했다. 미국이 사상 초유의 국가 디폴트(채무상환 불이행) 위기에 직면한 것이다. 그러나 2013년 1월 양당이 극적으로 타협하면서 미국은 국가부도사태를 겨우 면할 수 있었다. 현재 미국경제는 지속적인 회복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오바마 행

I
II
III
IV
V
VI
VII

정부가 가까운 미래에 집권 6년 동안 어렵게 구축한 재정합리화와 경제회복노선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모험적인 외교안보정책을 구사할 확률은 높지 않을 것이다.

신국방전략의 세 번째 핵심은 중동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미국 안보전략의 지리적 중심을 이동하는 전략이다. ‘아시아 중시 정책 (pivot to Asia)’, 혹은 ‘재균형(Rebalance) 전략’으로 불리는 이 전략의 목적은 다수의 아시아·태평양 국가와의 동맹과 협력관계를 통해 지역의 안정을 도모하면서 미국의 주 경쟁국가로 부상한 중국을 적절히 견제해 미국과 동맹국이 상호이익을 얻는 것이다.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태국 등 오랜 미국의 동맹국과의 관계를 견고히 발전시키면서, 인도와 아세안(ASEAN) 국가와의 안보협력강화를 통해 남중국해(South China Sea)와 아시아 대륙에서의 중국 군사력 팽창과 세력과시를 견제하고자 함이다. 미국은 이를 위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과 동아시아정상회의(East Asia Summit)에서 꾸준한 대외활동을 해왔다. 또한 아시아 지역의 각종 영토분쟁 - 중일 간 조어도(釣漁島, 일본명: 센카쿠/중국명: 닌오위다오) 분쟁, 중국-베트남, 중국-필리핀 간 남중국해 분쟁-에 대해서는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는 태도를 유지했다.

마지막으로 오바마 행정부는 핵 비확산에도 큰 정책적 비중을 두고 있다. 집권 1기 초반인 2009년 프라하 선언을 시작으로 2010년 워싱턴, 2012년 서울, 그리고 2014년 헤이그에서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해 ‘핵 무기 없는 세계’의 실현을 이룬다는 것이다. 미 정부는 그간의 성과를 2016년 제4차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매듭짓는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 나. 전환 시기 미국의 대외전략

2014년 후반 현재 미국의 대외전략은 아시아, 중동, 유럽에서 여러 도전에 직면해있다. 먼저 아시아에서는 재균형 전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공조 체제 구축이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천명한 이후, 미국은 한국과 더불어 아시아 최대 동맹국인 일본이 더 큰 안보적 책임을 지면서 미국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길 기대했다. 마침 2012년 집권에 성공한 아베정권은 ‘강한 일본’과 ‘적극적 평화주의’ 슬로건을 내걸고, 미일양자협력에서 일본의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안보협력분야에서 일본의 참여를 증대하는 정책을 추구했다. 아베정부는 집권 후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rans-Pacific Partnership, TPP) 참여를 선언하고,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약속했다. 한편 일본은 2014년 4월 1일 ‘무기수출 3원칙’을 ‘방위장비이전 3원칙’으로 수정했다. 일본의 군사장비 수출이 국제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할 것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무기수출 금지에서 조건적 허용으로 정책 노선을 변경했다. 2014년 7월에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각료의결의 형식으로 이를 재해석하는 결정을 내렸다.

미국은 아베정부의 적극적인 안보정책 변화를 크게 반기는 입장을 보였다. 2014년 4월 방일 중 오바마 대통령은 현직 미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중국과의 조어도(센카쿠/다오위다오) 분쟁에 있어서도 분쟁 시 미일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일본의 편에 설 것을 천명했다.

미국과 일본의 이해가 가까워지며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공조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한국의 움직임은 더딘 편이다. 한국은 과거사와 영토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I

II

III

IV

V

VI

VII

않는 한 안보협력분야를 포함한 한일관계의 근본적인 개선이 어렵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2013년 12월 아베총리의 야스쿠니 신사참배, 2014년 고노담화문 검증 등 일련의 사건을 고려할 때 상호신뢰에 기반한 한일안보협력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미국은 공식적인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체제가 부재한 현재, 미국-호주-일본 간의 삼각안보협력을 우선적으로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로 우크라이나 사태, 시리아 사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력충돌 등 유럽과 중동의 안보상황이 크게 악화된 상태다. 야누코비치(Viktor Yanukovych)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014년 2월 러시아의 압력을 의식해 유럽연합과 협력협정 체결을 보류하던 중 사임했다. 이후 친러시아 무장세력이 자치공화국 청사와 의사당을 점거하고, 15만 명의 러시아 군 병력이 우크라이나 인접 국경지대에 배치되면서 크림 자치공화국은 혼란에 빠졌다. 결국 우크라이나 정부와 동부 지역의 친(親)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내전에 돌입하였다. 7월 말레이시아항공 MH17편 여객기가 분리주의 반군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에 의해 격추된 후 우크라이나 사태의 악화는 정점에 이르렀다. 그러나 9월 전격적인 휴전 합의로 6개월 간 계속된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동부 지역 분리주의 반군 간 교전이 잠정 중단됐다.

2014년 6월에는 이스라엘 극우 민족주의자가 팔레스타인 10대 소년을 납치해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가자 지구 내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교전이 발발한다. 내전은 양측을 합쳐 약 2천200명이 넘는 희생자를 낳고서야 양측이 8월말 무기한 휴전에 합의해 일단락됐다.

오바마 행정부 제1기부터 10년간 지속된 이라크 전쟁의 종식을 대



선공약으로 삼았다. 그러나 2014년 1월부터 급진 수니파 무장세력 IS가 정통 칼리프 체제국가를 복원하겠다고 시작한 전쟁으로 미국이 아직도 이라크전쟁의 악몽에서 헤어나지 못했으며 기나긴 중동전쟁의 수렁에 빠질 위험에 처해있음이 드러났다.

이라크는 전면적인 내전 상태에 빠졌다. IS는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서쪽지역인 팔루자와 이라크 북부지역을 장악하고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했다. 이라크 제 2도시인 모술과 이라크, 시리아, 요르단의 국경 지역도 IS의 수중에 들어갔다. 미국은 9월 IS세력에 대한 종합적인 군사전략을 선포하고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했다. 다만, 국내 여론을 고려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전쟁 때와 달리 지상군 파병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상전은 이라크 정부군 및 쿠르드 자치정부군이 이끄는 것이다. 동시에 서방 동맹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아랍에미리트연합 등의 중동국가로부터 군사·경제·인도적 지원을 받아 시리아와 이라크에서의 군사활동을 수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오바마 2기에 들어 유럽과 중동의 안보상황은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되면서, 아시아 재균형 전략이 국가 차원의 관심과 적극성이 실종되며 다분히 정치적 언사(rhetoric)로서 계속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여기에 미국 외교전략의 중심인 국무부 수장이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힐러리 클린턴(Hillary Clinton) 장관에서 중동평화와 안정을 외교정책의 중심과제로 추진하는 존 케리(John Kerry) 장관으로 바뀐 것도 한몫했다. 거시적 비전과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제시하며 정부 내 관련 부처 간의 입장조율을 주도할 리더십이 부재하게 됐고,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추동력이 사라졌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한반도 안보상황과 통일 문제 역시 미국의 외교안보 우선

I
II
III
IV
V
VI
VII

순위에서 밀려난 상태이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실험에도 미국은 전략적 인내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은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담한 전략을 새롭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미국의 한반도 전략과 한국주도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인식은 미국이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체제 구축과 악화일로의 중동·유럽 사태의 해결이라는 양대과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결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 다. 미국의 대외전략과 한미동맹

미국의 새로운 대외전략은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지역안보전략의 핵심기제 중 하나인 한미동맹의 전략적 가치와 의미를 변화시켰다. 오늘날 미국은 한미동맹을 비단 한반도 지역의 안정화라는 협소한 차원의 양자동맹이 아니라, 양자군사동맹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인식하면서 지구적 차원에서 큰 전략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동맹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과정에서 한미동맹은 북한의 군사위협 대응이라는 전통적인 목적에 더해 한국과 미국의 공동가치를 구현하는 세계평화 유지의 수단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최근까지 미국 정부는 한미동맹의 목적과 성격을 협소한 양자동맹의 틀에 국한할 것인지 아니면 지구적 차원의 가치동맹과 지역안보의 틀에서 정의할 것인지에 대해 유동적인 입장이었다. 예를 들어 2011년 미 의회의 논의를 보면 최근까지 미국은 한미동맹의 성격변화에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었다.

당시 미국 국내정치는 연방정부 재정적자 감축 협상을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포퓰리즘 경쟁이 극단으로 치달아 국내정쟁과 여론

몰이가 벼랑 끝에 이른 상태였다. 당시 상황의 예산 삭감 규모에 만족하지 못하는 공화당의 보수파 의원들이 중심이 돼 주한 미군기지 이전과 일본 후텐마 미군기지 이전 계획 등 동북아 미군기지 재편계획의 전반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한편으로는 미국에 대한 국제 안보 위협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국방 예산이 크게 줄면 미군의 규모와 전력, 작전 능력이 제약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2013년부터 2021년까지 약 1조 2천억 달러 규모의 미연방정부예산 감축을 결정했고, 그 결과 2016년부터 향후 5년간 매년 5백억 달러의 국방예산이 줄어들 예정이었다. 워싱턴 일각에서는 미국 군사력의 전진 배치기지가 국방예산삭감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며, 그 중에서도 주한미군 무기의 현대화 계획과 한미연합작전수행능력 제고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sup>6</sup>

미 의회에서는 동아시아 미군기지 재편과 현대화에 동맹국의 분담금 증액이 수반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예를 들어 2011년 5월 칼레빈(Carl Levin, 미시간 주), 존 맥케인(John McCain, 아리조나 주), 짐 웹(Jim Webb, 버지니아 주) 상원의원은 공동 명의로 당시 로버트 게이트즈(Robert Gates) 국방장관에게 동북아 미군기지 재편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공동명의 서한에서 3명의 상원 의원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기지 재편 계획을 ‘현실성이 결여되고, 실행이 불가능하고,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unrealistic, unworkable, and unaffordable) 계획’이라고 비판했고, 주한미군의 임무를 ‘지역방어(local defense)’로 규정할 것을 촉구했다. 서한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미국-독일 간 군사협력을 구분했다. 독일과 일본 등 타 지역에 주

<sup>6</sup> “USFK Most Vulnerable to Budget Cuts,” *The Korea Times*, August 24, 2014.

둔하는 미군의 역할을 ‘영구주둔(permanent posturing)’을 전제로 하여 ‘주둔 지역과 그 이상의 영역에서 다중의 역할을 수행(multiple contingencies throughout their regions and beyond)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도발행위와 전쟁 억지(deterrence)로 규정하고 이러한 지역적 전략목표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주한미군이 재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회의 압력에도 오바마 행정부는 한미동맹을 가치동맹으로 격상하고 한미동맹, 미일동맹, 미호동맹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대한반도 안보 전략을 추진해왔다. 한국과 미국은 2009년 6월 16일 발표한 ‘한미동맹 공동비전 선언문’에서 한미동맹을 군사동맹뿐만 아니라 비핵화, 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가치동맹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양국의 합의는 2013년 5월 7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과 2014년 4월 26일 서울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에서 ‘한미동맹은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거듭나고 있음’을 확인하면서, 한미동맹이 “안보협력을 넘어서 정치·경제·문화·인적교류 분야에서의 폭넓은 협력을 바탕으로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해왔다”라고 정의했다. 또한 한미양국은 ‘한미동맹 공동비전에 기초하여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는 한편 비핵화, 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즉, 가치동맹으로서의 한미동맹을 한국과 미국이 지향하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데 핵심적인 수단으로 정의했다.

2014년 4월 서울 정상회담 후 발표한 ‘한미관계 현황 공동 설명서 (Joint Fact Sheet)’ 또한 한미동맹을 “오늘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핵심축(linchipin)이 됐으며, 더욱 포괄적인 범세계적 동반자 관계로 진화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한미 양국은 공통의 가치와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양자, 지역, 그리고 범세계적 차원에서 포괄적인 전략동맹을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관련 국제공조, 시리아 국민들의 심각한 인도적 문제 대처, 아프가니스탄의 재건과 안정화 지원, 핵안보, 핵안전조치, 핵테러방지 및 대응 역량 강화, 대량살상무기 및 관련 물질 확산방지, 해적퇴치, 인도적 지원과 재난 구호 등에 있어 한미동맹이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기여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여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분단과 한국전쟁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현재 한미동맹은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의 현안에서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수단이자 지역안보, 세계안보의 중심축으로 진화했다. 동맹의 중심임무가 전쟁과 도발방지 수단에서 한국 주도의 한반도 평화통일 유지 수단으로 변한 것이다. 향후 한반도 평화통일이 실현될 경우 한미 양자동맹이 중심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절대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해 본다.

## 2.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미 통일외교 전략

### 가.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인식

미국은 열강 중 유일하게 한국 주도의 평화통일을 공개적으로 지지해왔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인식은 분단과 통일의 손익, 통일과정과 미국의 국익 부합성, 그리고 통일한국의 가치라는 세 가지 기준을 놓고 분석할 수 있다.<sup>7</sup> 분단과 통일의 손익 측면에서 한반도 통일

로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익은 군사안보 분야에 있다. 미국은 매년 수십억 달러의 국방예산을 들여 동북아시아와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사사태를 대비하고 있다. 남북 간 군사대치상황이 계속되는 한, 한반도에서 미국과 중국 등 강대국 간의 안보딜레마와 군사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2만 8천여 명의 미군이 한국에 배치되어 있다. 2012년 한 해에만 주한미군 유지비용으로 약 27억 달러가 쓰였다. 동맹국에 대한 안보공약을 지키기 위해 자국의 젊은이들을 북한의 도발과 전쟁가능성에 노출시키는 정치적 부담도 분단과 통일의 손익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또한 북한의 핵확산 위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 역시 미국에 심각한 안보위협이다. 2013년 2월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후 오바마 행정부는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에 10억 달러의 예산을 추가하여 지상발사요격미사일(Ground-based interceptors, GBI) 14기의 추가배치를 결정했다. 이로서 미국은 알래스카 포트 그릴리에 배치된 26기의 GBI와 캘리포니아 밴덴버그 공군기지에 배치된 4기의 GBI에 더해 2017년까지 총 44기의 요격미사일을 배치하게 됐다.<sup>8</sup> 만일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미국은 북한 안보위협으로 발생하는 이러한 유형·무형의 군사안보 비용부담을 덜게 된다.

통일과정과 미국의 국익 부합성 차원에서 볼 때, 통일한국의 핵무장, 한미동맹의 와해, 그리고 통일한국의 중국 경도현상은 남북통일에서 미국이 장기적으로 우려하는 위험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핵발전소의 안전운영과 기술선도, 1991년 한반도비핵화선언, 그리고 2011

7. 배정호 외,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 pp. 6~9.

8. "U.S. Is Bolstering Missile Defense to Deter North Korea," *The New York Times*, March 15, 2013.

년 세계핵안보정상회의 개최 등을 통해 핵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이라는 국제규범을 가장 충실히 준수해온 모범국가이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통일한국이 핵무장할 가능성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미국의 일부 안보전문가들은 통일한국이 국내 강경민족주의자들의 영향으로 핵무장 유혹을 떨치지 못할 것으로 우려한다.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후 한미동맹의 존재목적이 약화되고, 통일한국이 한미동맹 관계의 재정립을 요구할 가능성도 미국의 주요 우려사항 중 하나이다.

또한 통일한국이 중국과 한층 가까워지고 미국과 멀어지는 정책을 선택할 경우도 미국으로서는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목표는 한반도 통일 후 지역안정과 더불어 한국, 일본과의 양자동맹관계를 유지·강화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대대적 수정, 주한미군 규모축소 및 주둔조건 변경을 요구하며, 중국과 함께 역사문제를 둘러싼 대일본 정책에 공동보조를 취한다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지역 안정을 위한 국제 시스템을 형성하고자 하는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전략은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한반도 통일 과정이 점진적이고 평화적이 아닌 급변사태와 물리적 충돌을 통해 이루어질 경우, 한반도 지역의 안정을 꾀하며 북한 내 대량살상무기의 사용 및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북한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Bruce Bennett)과 제니퍼 린드(Jennifer Lind)는 북한급변사태 발생 시 북한군과 주민이 물리적으로 저항하지 않는다는 가장 낙관적인 시나리오 하에서도 한미가 주도하는 인도적 지원, 난민수용, 행정개편 등의 안정화정책이 성공하려면 약 30만에서 40만 명의 병력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sup>9</sup>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을 즉각적이고 안전

<sup>9</sup>- Bruce W. Bennett and Jennifer Lind, "The Collapse of North Korea: Military Missions and Requirements," *International Security*, Vol. 36, No. 2 (Fall 2011),

하게 확보하는 문제는 미국에게 최우선 과제이다. 또한 북한에서 군사 반란이 일어날 경우, 이는 한반도 안보상황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한미 연합군이 북한 내 핵무기 및 핵시설을 확보하는 데에도 큰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 한반도 안정화 과정이 늦어질수록 전환기 통일 정부의 정통성과 신뢰 확보가 어려워지고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유발될 위험성이 커진다.

마지막으로 통일한국의 가치라는 기준에서 볼 때 한반도 통일은 미국에게 핵위협제거, 한미안보협력의 확대와 강화, 경제적 이익증대, 그리고 민주주의와 인권 증진이라는 네 가지 주요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첫째, 통일한국은 미국이 글로벌 전략의 우선순위로 꼽는 북한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 폐기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통일 후 한미동맹은 북한 군사위협과 도발 억지라는 협소한 임무로부터 벗어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정이라는 확대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셋째, 무역과 개발에 따른 경제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군사위협이라는 안보리스크 때문에 한국에 더 많은 경제협력과 투자 기회를 갖는 것을 포기했다. 교역의 3분의 1이 아시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미국에게 한반도 통일은 이러한 경제적 기회비용을 제거하고, 한반도 북부지역에 새로운 시장을 확보해 투자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인구 7천만 명이 넘는 통일한국은 미국에 있어서도 매력적인 시장이 될 것이다. 넷째,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통일한국은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미국적 가치 확산에 기여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미국이 기대하는 한반도 통일 후 발생할 위험과 편익이 미국의 국익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

pp. 84~119.



## 나. 주요 쟁점에 대한 한국의 인식

미국은 통일한국에 대해 크게 세 가지 우려를 한다. 첫째, 통일한국이 미국의 대량살상무기 비확산정책에 반하는 입장으로 자체 핵무장을 강행하는 경우이다. 둘째, 통일한국이 한미 동맹관계의 재정립과 주한 미군 규모 조정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통일한국이 중국과 한층 가까워지고 미국과 멀어지는 정책을 선택하는 경우이다. 세 가지 주요 쟁점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인식을 미국에 설명하고, 한국의 기본입장이 미국의 이익과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담보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 국가의 외교안보정책은 대중여론에 따라 결정될 수 없는 국가안위와 직결된 전문분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이 주권재민의 원칙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의 통일·안보·외교에 관한 정부의 정책이 완전히 국민여론과 유리되어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점에서 통일한국과 한미관계와 관련된 이슈들에 대하여 한국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 한국의 외교국방정책과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볼 때, 통일한국에 대한 미국의 우려는 기우에 불과해 보인다. 통일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시도할 수 있다는 예측이 그 첫 번째 경우이다. 아산정책연구원(ASPI)이 실시한 연례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이 자체핵무기를 소유해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2010년 응답자의 55.6%, 2011년 62.6%, 2012년 66.0%가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연례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62.9%로 소폭 감소했다.<sup>10</sup> 여론조사 결과만을 놓

I
II
III
IV
V
VI
VII

고 본다면 한국 국민 다수가 자체 핵무장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여론은 남북이 군사 대치 중인 상태에서 북한만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소유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013년 여론조사에서 한국인의 74.1%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위협을 느낀다고 대답했고, 73.3%는 한국군 단독으로 북한 전쟁도발 가능성을 억제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 반면, 북한이 핵으로 남한을 공격할 경우 미국이 대한안보공약을 준수하여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전체의 54.0%에 불과했다.<sup>11</sup> 북한 핵무기 개발에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한국인들이 한국이 이에 자체적으로 대응할 안보기제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과 핵억지정책을 전적으로 신뢰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북핵위협이 한반도 통일로 해소될 때, 핵보유에 대한 찬성여론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표 II-1>에서 보듯,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선호하는 국민 중 36.7%는 그 이유가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부족과 북한의 핵도발에 맞서야 하는 데 있다고 했다. 국제사회 영향력 증대와 주권국가로서의 권리행사라는 이유로 자체 핵무장을 찬성하는 의견도 일단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져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강화되고 국가주권이 완성될 경우 자연스럽게 감소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한국인이 생각하는 자체 핵무장 문제와 한반도 평화통일 후 자체 핵무장 및 보유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는 대단히 다를 것으로 보인다.

---

10. 아산정책연구원, 『연례여론조사보고서: 국민의식조사결과』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10, 2011, 2012, 2013).

11. 아산정책연구원, 『연례여론조사보고서: 국민의식조사결과』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13).

● 표 II-1 남한 핵무기 개발 찬성 이유

이유	응답비율
북핵위협에 맞대응해야 하므로	36.7%
핵보유국으로서 국제사회 영향력이 증대될 수 있으므로	35.3%
주권국가로서 핵주권 확립이 필요하므로	27.1%
기타	0.9%
<b>합계</b>	<b>100%</b>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연례여론조사보고서』, 2013.

둘째, 한반도 평화통일 후 한국이 한미 동맹관계의 재정립과 주한미군 규모 조정문제를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반하는 방향으로 제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국은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이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통일 후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안보상황에 대한 한국의 전략적 인식과 대응방향은 미국의 입장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 이후 한미동맹에 대한 범국민적 지지는 이데올로기와 연령을 떠나 확고하다. 2013년 아산정책연구원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83.3%가 통일 후에도 한미동맹이 지속돼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념성향을 놓고 볼 때 보수(89.4%), 중도(82.5%), 진보(76.7%) 계층에서 적어도 4명 중 3명 이상이 한미동맹은 한반도 통일 후에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연령별로도 이러한 의견은 고르게 나타났다. 20대에서 83.6%, 30대에서 81.2%, 40대에서 82.6%, 50대에서 82.2%, 그리고 60세 이상에서 86.7%가 찬성했다.<sup>12</sup>

한반도 통일의 결과 북한의 군사위협이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한국과 미국이 전략적 인식을 공유하고 유기적으로 정책을 조율하는 데는 큰

<sup>12</sup> 위의 책, p. 136.

I
II
III
IV
V
VI
VII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남북관계가 악화될 때마다 등장했던 ‘미국책임론’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과거에는 북한의 군사도발이 증가하거나 남북 간의 교류협력과 북핵문제협상이 중단될 경우, 미국이 자국의 안보이익을 앞세워 남북한 민족공조와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의 해결을 방해한다는 ‘미국책임론’이 국내정치에서 힘을 얻었다. 그러나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 이후 북한의 대륙간 탄도탄 실험과 제3차 핵실험을 경험한 한국 국민들은 북한의 도발행위를 미국의 강경정책의 결과로 간주하기 보다는 북한 스스로의 결정에 따른 결과로 파악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한국인은 그러한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중국에 대하여 크게 실망한 반면 굳건한 안보와 도발억지력 확보에서 비핵화가 출발한다는 자각을 했다. 다시 말해 한미동맹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됐다는 뜻이다. 2013년 여론조사에서 한국 국민의 83.5%가 현 남북관계를 “나쁘다”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현 남북관계의 악화상황에 대한 책임소재가 어느 나라에 있는가?”라는 중복질문에는 제1순위 책임국가로 북한(72.1%), 제2순위 책임국가로 중국(49.2%)을 지목했다.<sup>13</sup> 이러한 여론추세를 고려할 때, 통일과정에서 미국을 한반도 통일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비판하거나 안보상황이 악화될 때 주책임국가로 간주하는 경향은 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한미동맹의 역할확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확대되었다. 이 미 상당수의 한국인이 한미동맹을 포괄적인 동맹으로 인지하고 있고, 그 맥락에서 한국군의 역할 확대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4년 4월 여론조사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 “북한

---

<sup>13</sup> 위의 책, pp. 36~39.

의 도발 억제 역할만 해야 한다”라고 대답한 비율은 21.3%에 그친 반면, 주한미국이 “한반도 지역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41.8%로 가장 높았다. “테러 억제 등 세계평화에 기여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30.8%로 나타났다. 또한 “미국이 한국에 해외파병이나 재난구호활동을 요청할 경우 우리정부가 어떤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나라 국민의 64.5%가 “해외파병을 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보였고, “재난구호활동에 참여해야한다”라는 의견도 86.9%로 나타났다.<sup>14</sup> 특히 한국군의 해외파병에 대한 높은 지지는 과거 우리 군이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에 동참했을 때 정치적 논란과 대립이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주목할 변화는 한미관계를 불평등하게 본 국내여론에도 불구하고 통일 이후 한미동맹이 한국의 국익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한국인 사이에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표 II-2>에서 나타나듯이, 우리나라 국민의 64.9%는 한미관계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미관계가 불평등하다는 인식은 주로 20~40대 연령층,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 그리고 지지정당별 구분에서는 비여권지지 세력에서 높게 나타났다.

<sup>14</sup> 최강 외, 『한미동맹의 도전과 과제: 한미관계와 동북아 내 미국의 역할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14), p. 21.

I
II
III
IV
V
VI
VII

표 II-2 세대별 한미관계 불평등 인식

(단위: %)

구분	불평등	평등	모름/무응답	
전체	64.9	30.1	5	
연령별	20대	72	26.1	1.9
	30대	85.9	14.1	0
	40대	76.3	21.7	2
	50대	58.1	37.9	4
	60세 이상	30.4	52.6	17
이념성향별	진보	77.4	21.2	1.5
	중도	68.5	27.7	3.7
	보수	58.2	37.8	4
지지정당별	새누리당	44.2	49.4	6.3
	새정치민주연합	78.6	19.9	1.5
	무당파	79.5	13.5	7

출처: 최강 외, 『한미동맹의 도전과 과제: 한미관계와 동북아 내 미국의 역할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14), p. 26.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관계가 불평등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중 63.2%가 통일 이후에도 한미동맹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미관계가 평등하다고 응답한 국민들의 86.3%는 한미동맹이 통일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종합해볼 때, 비록 우리나라 국민들이 현 한미관계에 대해 불만이 있다고는 하나, 현재 국가안보와 미래 통일 이후 국가이익의 실현을 고려할 때 한미동맹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한미 양국은 주한 미군의 규모와 배치, 현대화에 관련있는 현안을 그동안 효과적으로 조율해왔으며, 그 결과 앞으로 통일 후 한국과 미국이 양자동맹관계를 새로운 안보환경에 걸맞게 유기적으로 재정립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은 미사일협

정 개정, 주한미국 주둔 및 운용문제, 주한미국 기지 이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군의 미사일 방어체제 한국군 동참 등 다수의 현안을 놓고 정부 간 협상을 진행해왔고, 많은 분야에서 진전을 보였다.

이미 양국은 2012년 10월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에 합의하여 한미 간 전략공조를 확인했다. 미사일 지침개정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300km에서 800km로 확대하되 탄두 중량은 현재와 같은 500kg을 유지키로 하고, 미사일의 사거리를 줄일 경우 탄두 중량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그리고 무인항공기의 탑재 중량을 현재 500kg에서 2.5t으로 5배 늘리기로 합의했다.

양국 정부는 심화되고 있는 북한의 군사위협능력으로 인한 역내 안보환경의 악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5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2020년대 중반을 목표로 재연기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2014년 2월 제9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에 최종 합의했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2018년까지 5년간 연도별 분담금 총액을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연도별 인상에 4% 상한선을 두어 총액의 과도한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했다. 특히 방위비 분담제도와 분담금 사용 관행 개선에 역점을 뒀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한미원자력협정의 경우 2013년 4월 한미 양국이 현 협정을 2016년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3개월마다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사용 후 핵폐기물 재활용,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원전시설 수출 경쟁력 확보 등도 주요 쟁점이다. 이 중 최대 쟁점은 한국의 사용 후 핵폐기물 재처

I
II
III
IV
V
VI
VII

리 권한을 미국이 승인할지 여부이다. 한국은 22기의 원전을 상업가동 중인 총전력 생산량의 35%를 원전에 의존하는 세계 5위의 원전 대국이다. 그럼에도 39년 전 체결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른 규제로 인해 평화적 목적의 농축·재처리 권한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원전에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는 모두 원전 내 임시 저장 시설에 보관 중이다.

미국의 미사일방어망(Missile Defense, MD) 구축에 한국이 참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미 양국은 의견 차이를 좁히고 있다. 한국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미국의 전략적 이해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해왔다. 주한미군은 미군기지 이전 사업계획에 따라 2016년 말까지 평택기지에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 미8군사령부와 미2사단 사령부 등 주한 미 지상군 주력부대를 집결시키기로 했다. 이로 인해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사드) 체계의 최우선 배치 장소로 평택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지휘부가 집중된 평택기지는 북한이 올 들어 동해상으로 잇달아 시험 발사한 사거리 200km 이상의 KN-09 신형 방사포와 신형 전술미사일을 휴전선 인근에서 발사했을 때 그 사정권 안에 있다.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 미국은 요격고도가 약 30km인 패트리엇(PAC-3) 미사일 수개 포대를 배치해 운용 중이다. 이에 더해 북한의 동시다발적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사드 배치로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커티스 스캐퍼로티(Curtis Scaparrotti) 주한미군사령관은 2014년 6월 사드의 한국 배치를 검토하고 있으며 미군당국에 전개요청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중국 정부는 북한 미사일의 사거리를 생각하면 한국의 미사일 방어가 PAC-2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때문에 미국주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에 가입하는 것은 한국이 중국을 적으로 삼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의 주 위협인 북한 미사일 능력은 스커드와 같은 단거리 미사일의 능력을 이미 뛰어 넘었다. 북한 노동 미사일은 사거리가 700~800km에 이르는 고고도 미사일이다. 한국의 안보현실을 고려할 때,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해 2020년까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KAMD)를 구축하며 주한미군이 도입하는 미사일방어체제 자산을 국내에 긴급 배치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미국의 방어체제자산을 임차해서라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지킬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sup>15</sup> 향후 한미 간 미사일방어체제에 대한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한미양자동맹의 장기적인 발전 가능성 역시 보다 명확해질 것이다. 또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의 원인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 증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한반도 평화통일이 이루어져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의 근본원인이 사라질 경우, 한미 간의 논란은 자연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미국 일각에서는 통일이후 한국이 중국에 한층 가까워지고 미국으로부터 멀어지는 한국의 중국경사현상을 경계하고 있다. 중국경사론의 근거는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한국과 중국은 전통적으로 유교문화권에 속한 국가들로서 역사·문화적 동질성이 강하다는 주장이며,<sup>16</sup> 또 하나는 한국의 대중경제 의존도가 증가하며 안보 측면에서도

I
II
III
IV
V
VI
VII

<sup>15</sup> -[시론] MD 체제 논란의 허실, 『문화일보』, 2014년 6월 12일,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4061201033037191002>>.

<sup>16</sup> -Samuel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New York, NY: Simon & Schuster, 2011).

한국이 중국에 가까워질 것이라는 견해이다. 이러한 우려는 중국에 대한 한국민의 최근 여론을 고려할 때 근거 없는 우려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해볼 때, 한국이 미래에 친중편향 국가가 될 확률은 대단히 낮아 보인다. 시진핑 정부 등장 이후 중국의 대한 평화공세(peace offensive) 정책의 결과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개선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대중 호감도 상승이 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했다. 여전히 다수의 한국인은 중국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 2014년 5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1.9%가 “중국의 경제성장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고 대답했고,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고 답한 비율은 66.4%로 나타났다.<sup>17</sup> 또한 <표 II-3>에서 보듯, 한국민의 대다수는 통일 이후 한국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될 국가로 중국(47.3%)을 경계하고 있다. 반면 미국을 최대 위협국가로 뽑은 응답은 9.1%에 불과했다. 이러한 중국경계론은 응답자의 정치이데올로기에 따른 차이를 크게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진보성향의 응답자가 중국의 위협을 가장 크게 우려하는 현상을 보였다.

● 표 II-3 통일 이후 한국 안보에 가장 위협이 될 국가

(단위: %)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기타	계
전체		47.3	38.4	9.1	3.1	2.1	100.0
이념 성향	보수	44.6	43.0	5.5	3.3	3.6	100.0
	중도	47.2	37.7	10.4	3.7	1.0	100.0
	진보	50.9	33.8	11.8	1.8	1.7	100.0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연례여론조사보고서』, 2013.

<sup>17</sup> 김지윤·이의철·강충구·칼 프리도프, “시진핑 방한의 성과와 과제: 일장중몽(一場中夢)과 흔들리지 않는 여론,” (아산정책연구원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14-17, 2014.7.14), p. 17, 22.

또한 국민의 대다수는 중국이 부상함에 따라 한국과 일본 간 군사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었다. 2013년 12월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3.9%가 중국의 군사적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간 군사협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목할 것은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강행하여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증가한 이후 실시한 2014년 2월 여론조사에서도 한국민의 61.7%가 같은 의견을 보였다는 점이다.<sup>18</sup>

한국의 중국경사론과 반대로, 한국인은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지역안보 공조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2014년 3월 아산정책연구원 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과 한국-중국 안보협력 프레임 중 어느 안보협력 프레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7.1%가 한미일 안보협력을, 29.8%가 한중안보협력을 지지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 중 협력을 강화해야 할 국가는 어디인가?”라는 물음에 56.9%가 미국을, 29.4%가 중국을 택했다. 이러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과 미국과의 협력강화 의견은 2014년 7월 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울을 방문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이후에도 변함이 없었다. 박근혜-시진핑의 서울 정상회담에 대해 응답자의 64.7%가 긍정적이었고, 13.6% 만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등, 전반적인 여론은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호의적이었다. 그러나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과 한국-중국 안보협력 프레임 중 어느 안보협력 프레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9.0%가 한미일 안보협력을 택하여 오히려 시진핑 방한 전 실시한 3월 여론조사 결과에 비해 비율이 소폭 상승하는 결과를 보였다(한중 안보

I
II
III
IV
V
VI
VII

<sup>18</sup> 아산정책연구원, “South Koreans and Their Neighbors 2014,” (아산정책연구원 기획조사, 2014.4.19), p. 15.

협력 프레임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26.5%). 또한 “미국과 중국 중 협력을 강화해야 할 국가는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59.6%가 미국을, 24.9%가 중국을 택해, 미국을 선호하는 의견 역시 소폭 상승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여전히 다수 한국인이 중국과의 안보협력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미국 중심의 안보협력 프레임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나타났다.<sup>19</sup>

중국과 한국의 문화·역사적 연대를 전제로 한 한국의 중국경사론과 달리, 한국민들은 중국의 문화적 영향력과 소프트파워를 별로 높게 평가하지 않고 있었다. <표 II-4>에서 나타나듯이, 중국에 대한 이미지를 물었을 때 중국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떠올린 응답자는 7.3%로 매우 적었고, 대부분의 한국인은 중국을 빠른 경제성장과 거대한 영토와 인구를 가진 나라로 연상했다.

● 표 II-4 중국의 이미지

(단위: %)

문항	빠른 경제성장	거대한 영토와 많은 인구	우리나라의 최대교역국	오랜 역사와 문화	사회주의 정치체제	기타/잘 모름/무응답
100.0	35.1	32.9	11.7	7.3	5.3	7.7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동북아 질서와 한중관계의 미래: 경쟁과 협력사이』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14), pp. 31~32.

또한 “중국인과 한국인이 가치관을 얼마나 공유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32.5%만 “비슷하다”라고 대답하고 64.4%는 “비슷하지 않다”라고 했다. 한국인은 중국의 문화 영향력 확장보다 미국의 문화

<sup>19</sup> 김지윤·이의철·강충구·칼 프리도프, “시진핑 방한의 성과와 과제: 일장중몽(一場中夢)과 흔들리지 않는 여론,” pp. 6~8.

영향력 확장을 더 환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4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의 69.8%가 미국의 문화 영향력 확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중국의 문화 영향력 확대에 긍정적인 평가를 한 비율은 보다 적은 56.2%였다.<sup>20</sup>

#### 다. 한국의 대응전략

한국과 미국은 양자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주요무역국이자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공동으로 기여하는 안보동맹국가이다. 이제 한미동맹은 한반도 지역에서 안보위협억지와 전쟁방지라는 고유의 목적에서 지역안보를 책임지고 공동의 가치를 구현하는 ‘지역동맹’이자 ‘가치동맹’으로 발전했다. 한미동맹이 지향하는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는 통일한국의 근본토대와 일치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은 미래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한국과 미국의 안보협력 프레임에 맞춰 진행하며, 동맹국인 미국의 통일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협력을 얻어내야 한다. 단기적 정책목표로는 전작권 이양 연기에 따른 후속조치, 미국미사일방어체제구축과 한미원자력협정 등 남아있는 양자협정을 성공적으로 타결하여 한미공조의 근본정신을 재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한국정부의 통일논의와 북한비핵화 노력의 병행이 결코 북한비핵화 노력에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공감대를 확보하고, 북한비핵화가 한미 양국의 공동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해야 한다. 드레스덴 선언 등 박근혜정부의 남북한 협력과 신뢰구축방안의 성공적인 이행

20. 아산정책연구원, 『동북아 질서와 한중관계의 미래: 경쟁과 협력사이』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14), pp. 30~32.

I
II
III
IV
V
VI
VII

이 궁극적으로 북핵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며, 통일논의와 비핵화 노력 어느 한 쪽 정책의 성공이 다른 정책의 성공을 촉진하는 선순환 관계에 있음을 미국 측에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sup>21</sup> 2014년 후반부터 오바마 행정부는 그 동안의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전략에서 벗어나 북한이 핵프로그램의 가동을 중단할 경우 북한과 대화를 재개할 수 있다는 6자 회담의 조건부 재개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북미 핵협상의 재개가 남북협력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한국의 통일정책의 정책효과성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통일한국이 한미안보협력의 틀을 버리고 친중노선을 택할 것이라는 오해를 사전에 불식시키는 노력이 중요하다. 한국사회의 여론을 객관적으로 분석해볼 때, 한국이 중국에 경사되었다는 시각은 근거없는 일종의 부정적인 자기충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sy)이라는 점이 드러난다.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통일한국은 한미양자 동맹과 한미일 안보공조 프레임의 지속적인 발전과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지향하는 정치·경제·문화적 토대에서 추구될 것임을 재확인하고, 그렇게 성취된 한반도 통일은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 안정, 그리고 번영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야 할 것이다.

---

<sup>21</sup> Gi-Wook Shin·David Straub, and Joyce Lee, *Tailored Engagement: Toward and Effective and Sustainable Inter-Korean Relations Policy* (Stanford: The Freeman Spogli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2014), pp. 48~49.

# Ⅲ. 중국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1. 중국의 대외전략, 지역전략, 그리고 한반도 전략

2013년 중국의 최고지도자로 부상한 시진핑은 그 전임자들과는 다른 차원의 리더십을 보이고 있다. 덩샤오핑(鄧小平)의 후광으로 최고 지도자 자리에 오른 전임자들 장쩌민(江澤民), 후진타오(胡錦濤)와는 달리, 현존 지도자들 간의 타협과 합의에 의해 선출된 시진핑은 세계적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중국의 상황에 걸맞는 지도자적 능력과 대외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그가 최고지도자로 오르자마자 제시한 중국몽(中國夢)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통하여 수퍼파워로 거듭나는 중국의 미래를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을 추월한 중국중심의 세계질서를 꿈꾸고 있다.<sup>22</sup> 이러한 시진핑의 새로운 세계건설의 꿈은 중국의 대외 관계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시진핑의 새로운 대외정책은 중국의 강대국화에 따른 위상변화를 상당부분 반영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여타 강대국과의 새로운 관계정립, 주변국과의 협력적 환경형성, 그리고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한 지역에 대한 영향력 강화 등으로 요약해 볼 수 있다.

### 가. 신형대국관계

우선 신형대국관계란 부상하는 강대국과 기존 강대국 사이에 필연적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세력전이 중심의 전통적 서구시각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현존 패

22. 張清敏, “理解十八大以來的中國外交,” 『外交評論』, 2014年 第2期; 王義桅, “中國夢 破解后崛起時代的道通性難題,” 『人民論壇·學術前沿』, 2013年 3月; 王義桅·韓雪晴, “國際關係理論的中國夢,” 『世界經濟與政治』, 2013年 第8期; 중국몽에 대한 한국에서의 연구는 다음을 참조. 조영남, 『용과 춤을 추자: 한국의 눈으로 중국 읽기』 (서울: 민음사, 2012).



권국인 미국과의 향후관계에 대한 중국적 제안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신형대국관계의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구형대국관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과거 냉전시기의 미소관계 및 전후 미일관계를 그 예로 제시하고 있다. 즉 냉전시기의 미소관계는 양국 간에 협력 없이 지속적인 대립만 있었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전후 미일관계는 협력적이고 우호적인 관계였지만, 동등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형대국관계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신형대국관계의 내용을 그려보면 협력과 대립이 공존하는 관계, 그리고 국력이나 영향력에 상관없이 양국 간의 동등성을 강조하는 관계로 요약해 볼 수 있다.<sup>23</sup>

중국은 이러한 신형대국관계를 중심으로 새로운 미중관계를 정립하고자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평화공존(和平共存)’, ‘공동발전(共同發展)’, ‘호혜상생(互惠相生)’ 등의 개념들을 들어가면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력과 윈-윈(win-win)의 관계설정, 그리고 건설적인 경쟁을 이어가면서 함께 발전하는 것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이 제시하는 신형대국관계가 미국과의 협력과 신뢰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은 신형대국관계의 주요내용으로서 상호 핵심이익의 보호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 중심개념은 ‘각자의 핵심이익과 중대관심사에 대한 존중’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원칙적으로는 서로의 핵심이익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말자는 주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익에 대해서 미국이 존중해 달라는 것이다.<sup>24</sup>

23. 김영호,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전략의 의미와 전망,” 『時代精神』, 2013년 겨울호 (시대정신, 2013).

24. 한석희, “시진핑 지도부의 대외관계 분석: 대미정책과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18권 4호 겨울호 (세종연구소, 2012), pp. 33~53.

중국이 제시하고 있는 핵심이익은 1) 중국의 기본 국가체제와 국가 안보 보존, 2) 주권 및 영토보존, 3) 중국 경제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그러나 미중관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의 주요 핵심이익은 주권 및 영토보존에 관련된 이슈들이며, 특히 대만문제, 티벳문제, 신장문제 등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최근 중국은 핵심이익의 개념을 확장해 가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2011년 오사마 빈 라덴의 사살이후 중동문제를 일단락 짓고 ‘pivot to Asia’를 중심으로 외교안보의 중심축을 동아시아로 옮겨오면서 미국의 경제·안보·군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pivot to Asia’를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세력확장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핵심이익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최근 대립이 본격화되고 있는 동중국해의 중일갈등과 남중국해의 중·아세안 갈등도 중국 핵심이익에 대한 미국의 침해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바탕 위에서 미국과의 대립을 첨예화하고 있다.<sup>25</sup>

그러나 새로운 국제질서를 향한 중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중국의 신형대국관계에 그다지 동의하는 것 같지는 않다. 시진핑이 취임 전과 후에 미국을 방문하여 신형대국관계 추진 및 이를 동반 추진 하자는 태도를 분명하게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신형대국관계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평가가 나오지 않고 있다.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오바마의 외교안보보좌관이었던 톰 도닐런(Tom Donilon)은 세력전이 이론에서 주장하는 부상하는 강대국과 기존 패권국 사이의 패권전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언급

<sup>25</sup> 중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분석은 다음을 참조. Michael D. Swaine, “China’s Assertive Behavior, Part One: On ‘Core Interests,’” *China Leadership Monitor*, Issue 34 (Winter 2011).

I
II
III
IV
V
VI
VII

함으로써 일단 신형대국관계의 전제에는 동의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즉 미국은 중국이 신형대국관계를 통하여 중국이 폭력에 의한 국제질서의 변화를 도모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는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 그러나 미국은 그 이상의 평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 의미는 중국이 아직까지 미래의 대국관계를 제시할 정도의 수준에 올라있지 않다는 나름대로의 평가를 넉넉히 보이는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sup>26</sup>

특히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 재균형 전략을 도입함으로써 신형대국관계를 통한 신뢰구축을 주장하는 중국의 입장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근본적으로 중국의 경제적 부상은 중국의 군사적 부상으로 연결될 것이고 따라서 중국의 부상은 결국 미국에게 도전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물론 미국이 중국의 부상을 아직까지 군사적 도전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을 적대시하고 봉쇄정책을 취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제시하는 신형대국관계를 수용하고 중국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것은 아니다. 그 대신 미국은 동아시아의 동맹국들과 관계강화를 구축함으로써 재균형전략을 더욱 공고하게 실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향후 미-중관계는 협력보다는 경쟁위주로 발전될 가능성이 많으며, 특히 미국의 재균형전략과 그에 대응하는 중국의 신형대국관계의 상호경쟁 및 갈등이 양국관계의 주류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sup>27</sup>

---

26. 중국의 신형대국관계에 대한 미국의 반응은 다음을 참조. David M. Lampton, "A New Type of Major-Power Relationship: Seeking a Durable Foundation for U.S.-China Ties," *Asia Policy*, Vol. 16 (July 2013); "NSA Susan Rice in China: Rethinking 'New Type Great Power Relations,'" *The Diplomat*, September 10, 2014; "Not-So-Empty Talk: The Danger of Chian's New Type of Great-Power Relations' Slogan," *Foreign Affairs*, November 11, 2014.

27. 미국의 리벨런싱에 대한 최근의 분석은 다음을 참조. Jonathan D. Pollack and

## 나. 주변국 외교

신형대국관계와 아울러 중국은 주변국 외교에도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신형대국관계가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이슈들의 상당부분을 처리해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모든 이슈들을 해결주지는 못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골칫거리라 할 수 있는 조어도(센카쿠/다오위다오) 갈등과 같은 지역 내부문제는 신형대국관계보다는 오히려 주변국 외교를 통하여 해결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시진핑 정부는 2013년 10월 ‘주변외교공작좌담회(周邊外交工作座談會)’를 개최하였으며 이는 중국외교가 주변국과의 관계증진에 역점을 두어 추진될 것이라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특히 시진핑 주석의 주재 하에 진행된 회의에 정치국 상무위원 전원 및 당 정치국원, 국무위원, 외교 관련 고위 인사 등이 대거 참석했다는 사실은 향후 중국의 대외관계에서 주변국 외교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을 반영한다.<sup>28</sup>

주변외교공작좌담회에서 제시된 중국 주변국 외교의 키워드는 ‘친(親)·성(誠)·혜(惠)·용(容)’이었으며, 그 구체적인 의미는 주변국과 더욱 친하게 지내고(親), 성의를 다해 주변국을 대하며(誠), 중국 발전의 혜택을 나누면서(惠), 주변국을 더욱 포용한다(容)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주변국 경제와 점차 상호의존적 밀착관계를 강화해 가는 중국이 안정적인 강대국화 과정을 밟아가기 위해서는 중국의 지속적인

---

Jeffrey A. Bader, “Return to the Asia Rebalance,” (Brookings Institute Memorandum to the President, January 23, 2014), <<http://www.brookings.edu/research/papers/2014/01/asia-rebalance-us-china-relationship-pollack-bader>>.

<sup>28</sup> 중국의 주변국 외교에 대한 분석은 다음을 참조. 한석희, “중국 주변국 외교의 성공전략,” 『성균차이나브리프』, 제2권 2호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2014), pp. 80~84.

I
II
III
IV
V
VI
VII

발전이 필수조건이라고 볼 수 있으며, 지속적인 발전에 핵심조건은 안정적인 주변환경을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지역안보 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은 상호신뢰·상호이익·평등의 바탕 위에서 주변국들과 중국 발전의 혜택을 나누고, 주변국들과의 상호 협력 속에서 공공외교·민간의교·인문교류를 활성화하여 중국의 대내외 정책을 주변국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sup>29</sup>

특히 주변외교공작좌담회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중국이 주변국 외교에서 ‘운명공동체(命運共同體)’라는 개념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즉 중국과 주변국들은 지리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뿔레야 뿔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모든 주변국들은 중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운명공동체의 개념 속에는 주변 국가들과 중국이 지리적·문화적·전략적 의미에서 상호의존적 관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강조하고 있으며, 따라서 중국이 운명공동체를 제기한 목표에는 이들 주변국들 사회 내에서 운명공동체라는 의식을 뿌리내리도록 하고 이러한 인식을 확산시키겠다는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 물론 중국의 주변국 외교가 이제 막 시작단계에 들어섰고, 따라서 운명공동체 개념의 구체화, 정책목표의 명료화 및 정책실행의 체계화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국 주변국 외교의 목표는 결국 동아시아 지역에서 운명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sup>30</sup>

또한 중국은 주변국과의 운명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경제협력과 안보협력의 조화를 강조하

29. 許麗平·朱鳳嵐·王曉玲, “未來5~10年周邊國家對中國認知變化趨勢,” 李向陽(主編), 『亞太藍皮書: 亞太地區發展報告(2014) 中國的周邊環境』(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4), pp. 78~87.

30. “中國與周邊關係: 命運共同體的邏輯,” 『人民網』, 2014年 2月 18日, <<http://theory.people.com.cn/n/2014/0218/c367550-24393940.html>>.

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은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주변국과의 관계 설정을 이루어왔던 반면, 주변국과의 안보협력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왔다. 특히 주변국들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은 강화되었던 반면, 주변국들에 대한 중국의 안보적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중국은 주변의 안보문제가 경제협력에 대한 제약요인으로 대두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역외 강대국이 역내 안보문제에 간섭하는 경우가 생기는 데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향후 주변국관계에서 경제협력과 함께 안보협력에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중국은 대외관계에서 평화주의 원칙을 고수하되 이를 주변국들이 무력포기로 인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 즉 중국은 자국의 평화주의 원칙이 주변국들에게 중국이 절대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인식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주변국들에게 자국의 국가이익 및 정책노선을 명확하게 전달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주변국들이 중국의 핵심이익 등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 셋째, 중국은 주변국에 대한 자국의 소프트 파워 실행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경성적 분야에 대한 협력과 함께 연성적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부외교와 더불어 공공외교를 강조하고 있다. 연성적 분야에서의 협력과 공공외교의 핵심은 문화교류 및 신뢰증진 등을 통한 이미지 제고라고 볼 수 있으며, 중국은 이를 통하여 주변국들과의 친근한 관계를 수립하고 자국 중심의 공동체 구축을 시도하고자 한다.<sup>31</sup>

31. 한석희, “중국 주변국 외교의 성공전략,” pp. 80~84.

I
II
III
IV
V
VI
VII

## 다.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변화

시진핑 리더십 하의 중국은 이러한 강대국 정책 및 주변국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한반도 정책을 구상하고 있으며, 이는 남북한 사이에서 지속적인 등거리를 유지하는 정책으로 구현되고 있다. 2013년을 기점으로 한국, 중국, 북한에서 모두 새로운 지도자에 의한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지만 이들 국가들 사이에서 근본적인 관계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대북정책 및 대한정책에 커다란 변화는 감지되지 않고 있다. 다만 북한 김정은 정권의 도발적 행위에 대한 중국의 경고성 태도변화 및 시진핑 정부의 한국정부와의 관계 강화 시도와 같은 표면적인 변화는 감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13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시진핑 정부는 김정은 정권에 대한 압박을 지속 하면서 박근혜정부에 대한 호의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몇몇 학자 및 정치가들은 이와 같은 중국의 대북 태도변화를 중북관계의 변화 내지는 중국의 전략적 비중이 북한에서 남한으로의 전이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다.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나타나고 있는 중국의 대북한 태도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중국 내 북한정권을 반대하는 시위 발생(2.20), 중국 중앙당교의 기관지인 학습시보(學習時報)의 부편집장 덩위윈(鄧聿文)의 “중국은 북한을 포기해야 한다”라는 글의 기고(Financial Times, 2.27), 대북 식량원조 차량에 대한 통행료 부과(3.3), 중국 해군소장 인취(尹卓)의 “중국과 북한은 군사동맹 관계가 아니다” 발언(3.11), 오바마의 “중국, 북한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있다”라는 북중관계 언급(3.13), 북중 간의 무역화물 검사비용 상승(1.30), 북한은행 출장소의 송금처리 업무 중단(3.25), 북한 식당들의 불법영업 단속(3.20),

북한 인력의 중국 송출 금지(4.2) 등이 포함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들은 과거와 비교해 보았을 때 확실히 지금까지는 볼 수 없었던 신선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국내의 몇몇 학자들은 이러한 중국의 대북태도변화를 대북정책 변화의 전조로 인식하기도 하고, 시진핑 정부 출범에 따른 근본적 외교전환으로 보기도 한다. 또 다른 학자들은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국제적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최근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전향적인 대북태도는 이러한 책임대국적 인식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sup>32</sup>

그러나 중국의 이러한 변화된 대북태도가 근본적인 대북정책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는 않을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중심으로 현상유지적 차원에서의 전통적인 대북인식(완충지대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나타나는 중국의 대북태도 변화의 주요 원인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에 공공연하게 도전하는 북한의 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북한은 지난 3~4년 동안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 한국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지속해오면서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해오므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비핵화에 반대되는 행동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현재 중국의 대북 태도 변화는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기 위한 외교적 압박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비롯한 향후 북한의 대남 도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및 한반도의 비핵화를 중국이 얼마나 진지하게 추구하고 있는지를 북한에게 전달하는 계기로 볼 수 있다.<sup>33</sup>

<sup>32</sup>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북중관계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이춘복, “북한 제3차 핵실험 후 중국의 대응과 북중관계: 시진핑 시대 중국의 대북정책은 진화하고 있는가,” 『JPI 정책포럼』, No. 2013-04 (제주평화연구원, 2013), <[http://www.jpi.or.kr/kor/regular/policy\\_view.sky?code=assay&id=4887](http://www.jpi.or.kr/kor/regular/policy_view.sky?code=assay&id=4887)>.

I
II
III
IV
V
VI
VII



일반적으로 한 국가의 새로운 지도자가 취임과 함께 새로운 대외정책을 펼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변화의 경향이 제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시진핑 체제에서도 출범과 함께 새로운 정책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북정책을 비롯한 한반도 정책에서의 변화는 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중국은 공산당 독재의 지속에 따른 정책의 지속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은 한반도 내부사정의 변화 또는 중국과 한반도의 관계변화에 의해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북한이 보이고 있는 도발적인 태도가 중국의 지역안보전략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러한 부담이 대북정책을 바꿀 정도의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며, 오히려 근본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는 한미동맹 및 미중관계, 그리고 한중관계에서의 변화를 동반하기 때문에 다른 세 관계의 변화없이 북중관계만 변화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다.<sup>34</sup>

2013년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의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한중관계는 새로운 밀월기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양국 정상 상호방문으로 밀착된 양국관계는 대내외에 그대로 알려지고 있으며, 특히 2014년 시진핑 주석의 한국방문 이후 국제사회에서는 한국과 중국 간의 밀착관계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가 나오고 있다. 우선 중국

---

33. 이기현,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3-06, 2013.2.25), <<http://www.kinu.or.kr/upload/neoboard/DATA01/co13-06.pdf>>.

34. 이와 같은 내용은 다음을 참조. 한석희, “중국 시진핑 정부의 출범과 북중관계 전망,” 『수은북한경제』, 2013년 여름호 (한국수출입은행, 2013), pp. 31~48.

은 2014년 이후 한국과의 관계강화에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한중관계를 좀 더 공식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중국의 노력은 한국과 그 주변국가 관계에 영향을 주는 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예를 들어 중국은 한중관계 밀착을 통해 한일 갈등을 더욱 고착화하고 궁극적으로는 한미일 3국 안보협력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나아가서 한중 간의 관계강화를 통하여 한미동맹에 균열을 만들려는 의도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접근이 북한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의 한국으로의 전환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 당시 국내 언론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평양보다 서울을 먼저 방문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북한보다 한국을 전략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반영한다고 보도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을 면밀히 관찰해 보면 중국은 오히려 북한과의 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한국으로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시도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중국이 수백 년 동안 유지해왔던 한반도에 대한 완충지대적 전략이 한국전쟁 이후 북한지역에 국한되어 시행되다가 한중관계의 밀착에 따라 다시 한반도 전역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시진핑 리더십 하에서 중국의 대한반도 전략은 한반도 전역으로의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평가를 하는 가장 핵심적 요인은 중북관계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는 점이다. 물론 2013년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이후 중국은 북한에 대하여 전례 없이 강력한 어조로 비난을 이어갔지만, 중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외교·안보적 보호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김정은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생명선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감지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은 과

I
II
III
IV
V
VI
VII

연 “중국이 기울어져가는 북한을 포기할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만약 중국이 북한을 포기하고 한국에 의한 통일을 인정한다면 그것은 중국의 대북 또는 대한반도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이 겉으로는 대북정책의 변화를 시사하면서도 근본적으로는 북한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는 이상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논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중국의 대북정책은 아직까지도 현상유지 중심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은 중국의 전통적 전략인 완충지대 전략의 한반도 전역으로의 확대라고 볼 수 있다.<sup>35</sup>

2014년 시진핑 주석의 한국방문 과정에서 구체화되었던 중국의 한국에 대한 적극적 접근은 매력공세(charm offensive)로 인식될 정도로 한국사회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중국의 전통적 우호상징인 판다를 한국에 임대하고 역대 중국의 지도자 중 처음으로 대학에서 강연을 하였으며 부인인 펑리위안(彭麗媛) 여사와 동반하여 방한하는 등 이번 방한의 준비과정에서 나타난 중국의 태도는 한중관계를 우호와 신뢰를 중심으로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세월호 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위로의 말을 전달하고 짧은 방문기간 동안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문화유적지와 전통명소를 찾는 등 한국의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한국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중국의 의지를 보여주었다.<sup>36</sup>

35. 이와 반대로 ‘중국이 북한을 포기 안 할 거라는 것은 오판’이라는 목소리도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다. 李向陽(主編), 『亞太藍皮書: 亞太地區發展報告(2014) 中國的周邊環境』, pp. 54~64; “중국이 북한 포기 안 할 거라는 건 오판,” 『중앙일보』, 2014년 2월 4일.

36. “시진핑 주석, 북한보다 먼저 한국 방문 ‘판다 선물,’” 『동아일보』, 2014년 7월 3일; Sukhee Han, “China’s Charm Offensive to Korea: A New Approach to Extend the Strategic Buffer,” *Asan Institute Open Forum*, Vol. 2, No. 6 (September/October 2014), <<http://www.theasanforum.org/chinas-charm-offensive-to-korea-a-new-approach>

그러나 중국의 매력공세가 우리에게 꼭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최근 동북아 국제정세에서 중일관계와 한일관계를 살펴보면 일본이 한국, 중국과 상당한 갈등관계를 감수하면서 미국과의 동맹관계 강화에만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이 상호관계를 밀착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에 대한 매력공세를 통하여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추구함과 동시에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일본의 역사왜곡에 대해 대응하는데 상당한 외교적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 예로 시진핑 주석은 방한 이튿날 서울대에서 가진 특별강연에서 일본의 행동에 의해 아픈 역사를 공유하고 있는 한중 양국이 일본의 우경화에 공동대응하자고 제안하면서 “400년 전 임진왜란이 발발했을 때 양국 국민은 적개심을 품고 어깨를 나란히 해서 전쟁터로 같이 향했다”, “청일전쟁이 가장 치열했을 때 생사를 다 바쳐 서로 도와줬다”, 그리고 “임시정부 유적지나 상하이 윤봉길 의사 기념관, 시안의 광복군 기념비는 잊지 못할 역사를 증명해주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본에 대한 한중의 공동대응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sup>37</sup>

이렇게 중국이 한중 사이에 적극적으로 대일본 협력전선을 구축하려는 이유는 한국에 대한 매력공세를 통하여 우선 한일 간의 외교관계를 더욱 소원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한미일 3국 협력을 근본적으로 저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 및 재균형 전략을 중국에 대한 봉쇄정책으

to-extend-the-strategic-buffer/>.

<sup>37</sup> 시진핑 주석 연설 전문은 다음을 참조. “習近平在韓國國立首爾大學的演講(全文), 『新華網』, 2014年 7月 4日, <[http://news.xinhuanet.com/world/2014-07/04/c\\_1111468087.html](http://news.xinhuanet.com/world/2014-07/04/c_1111468087.html)>.

I
II
III
IV
V
VI
VII

로 인식하고 있으며,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한미일 3국 협력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에 대한 매력공세 및 한중 밀착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한미일 3국 협력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중국 매력공세의 마지막 목표는 결국 완충지대의 확장을 통한 한미 동맹관계의 견제라고 볼 수 있다. 즉 중국은 중북관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매력공세를 통하여 한미동맹을 견제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up>38</sup>

전통적으로 중국은 한반도라는 완충지대에 대하여 ‘중국의 지배를 공고히 하든지 아니면 타 세력의 영향력을 거부(either to dominate it or deny it to another power)’하는 전략을 적용해왔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반도 자체를 중국 안보에 위협을 끼치는 요인으로 보지는 않지만 한반도가 다른 세력과 결탁하거나 다른 세력의 영향력 하에 들어간다면 이는 중국의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반도에 다른 세력이 접근하는 것에 민감하게 대응해 왔으며, 그러한 중국의 태도는 역사적으로도 입증되고 있다. 중국은 16세기의 임진왜란, 19세기의 청일전쟁, 그리고 20세기의 한국전쟁 모두를 한반도에 대한 외부세력의 접근으로 인식하였으며, 따라서 당시 국내상황의 유불리에 상관없이 한반도에 출병하여 완충지대를 보호하려고 노력하였다.<sup>39</sup>

---

38. 미국의 재균형 전략과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안보상황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다음을 참조. 黃鳳志·劉清才·張慧智 等 著, 『東北亞黃皮書: 東北亞地區政治与安全』(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4).

39. 완충지대에 대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 Robert E. Bedeski, “Sino-Korean relations: triangle of tension, or balancing a divided peninsula?,” *International Journal*, Vol. 50, No. 3 (Summer 1995), pp. 516~538.

한국전쟁의 결과 한반도가 분단되고 중국의 완충지대도 한반도의 북부에 국한되었지만, 종전 60년이 지난 지금 중국은 한반도 전체를 자국의 전략적 요충지로 재인식하기 시작하였으며,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을 향후 한중관계 발전 및 대한반도 전략에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인식할 것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전통적으로 한반도를 자국의 영향권 내의 지역으로 인식해 왔으며, 이제 중국의 국력신장과 함께 한반도 전역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 확대가 가능한 시기를 맞아 이를 시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세력을 제거하고 한반도에서 자국의 전통적인 영향력을 복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중국의 태도에 대하여 미국은 그다지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중국의 밀착에 대하여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한중 우호관계의 발전이 한미동맹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미국은 한국의 대중 경제적 의존도 증가 및 북한요인에 대한 중국의 역할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증진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존중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이러한 한중관계의 발전을 한미관계와제로섬 게임으로 만들어가지 않을 것이라는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한일관계이다. 한일관계가 개선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한중관계의 증진이 한미동맹에 부담이 되지 않지만, 한일관계가 지속적으로 갈등국면에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중 밀착관계에 대한 전략적 부담을 완전히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I
II
III
IV
V
VI
VII

## 2.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중 통일외교 전략

반목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는 북중관계와는 달리, 시진핑 정부 출범 이후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한중관계의 밀착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은 적어도 박근혜정부 5년 동안은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진다. 그 원인은 여러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우선 중국인들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호감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여성의 우아함, 말한 것은 지킨다는 원칙, 중국어·중국역사·중국철학에 대한 관심과 이해, 경제발전을 이룬 박정희의 딸로서 고도성장을 이룩한 중국과의 유사성 등의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다양한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한국인들의 시진핑 주석에 대한 호감, 변화에 대한 기대감, 한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 그리고 부인 평리위안의 매력 등 시진핑 주석도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요소를 다수 갖추고 있다고 봐야한다. 이렇게 두 지도자들은 서로에 대한 호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양국관계를 원활하게 이어가고 있다.

둘째로 과거 정부로부터의 교훈을 들 수 있다. 후진타오-이명박정부 하의 한중관계는 경쟁적·갈등적인 모습으로 일관되어 왔다. 특히 2010년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겪으면서 원만한 한중관계가 북한문제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라는 교훈을 주었고, 이에 박근혜 정부 및 시진핑 정부는 협력적 한중관계를 설정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볼 수 있다.<sup>40</sup> 특히 한국은 경제교류 및 북한문제 해결에서 중국에 대

---

<sup>40</sup> Sukhee Han, "China's Post-Cheonan and Yoenpyeong Policy toward North Korea," EAI Asia Security Initiative Working Paper, Vol. 27 (October 2012), <[http://www.eai.or.kr/data/bbs/eng\\_report/201210171549818.pdf](http://www.eai.or.kr/data/bbs/eng_report/201210171549818.pdf)>.

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원만한 대중관계 구축에 노력해 왔던 반면, 중국은 중견국으로 부상하는 한국의 위상을 바탕으로 원만한 대한관계 구축에 상당히 공을 들였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의 다양한 전략적 가치는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점과 세계 14위의 경제대국,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중견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아시아지역의 환경변화를 고려해볼 수 있다. 사실 최근 중국에게 있어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상승세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한중협력에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우선 남중국해 분쟁을 들 수 있다. 베트남, 필리핀과의 영토갈등에서 비롯된 남중국해 분쟁은 결국 미중 간의 갈등적 이슈로 전환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과의 대립 노골화, 그리고 미국의 동맹강화 전략에 따른 전략적 부담의 심화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의 한미동맹 강화는 중국의 아시아 전략에 부정적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음으로 북한의 도발을 들 수 있다. 과거와 달리 중국은 최근 북한의 도발이 동북아시아 평화·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북한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영향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혼자서 북한을 감당하기 보다는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대북한 접근을 시도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듯하며 그 대상으로 한국에 접근하는 듯하다.<sup>41</sup>

중국의 매력공세를 통한 한국과의 관계개선, 그리고 더 나아가 완충

41. 이희욱, “한중관계, 과연 무엇이 변화되었고 지속가능할 것인가?,” 『동아시아재단 정책논쟁』, 제6호 (동아시아 재단, 2014), <[http://www.keaf.org/book/EAF\\_Policy\\_Debates\\_No6\\_South\\_Korea-China\\_Relations\\_What\\_has\\_Changed\\_and\\_What\\_will\\_be\\_Sustained\\_kr](http://www.keaf.org/book/EAF_Policy_Debates_No6_South_Korea-China_Relations_What_has_Changed_and_What_will_be_Sustained_kr)>.

I
II
III
IV
V
VI
VII



지대의 확장 전략은 한반도에서 새로운 쟁점을 만들어내고 있다.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중국 완충지대 전략의 기본목표가 한반도에서 ‘중국의 지배를 공고히 하든지 아니면 타 세력의 영향력을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완충지대의 확장 전략을 지속하는 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한 도전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이후 지난 60년간 중국은 북한지역에 국한하여 자국의 영향력을 행사하였으며, 한국은 자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지역으로 인식해왔다. 따라서 중국은 그동안 한미동맹 및 미군주둔에 대한 별다른 불만을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한국과의 관계가 강화되고 한국의 중국에 대한 경제적·외교적 의존도가 높아지자 중국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한국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을 높이고 전통적 완충지대적 인식을 한국까지 확대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몇 가지 쟁점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경쟁 사이에서 한국은 새로운 전략적 인식과 대응 방향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어도(센카쿠/다오위다오) 문제에서 발단이 된 중일 간의 분쟁 또한 중국의 대한반도 접근을 강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일갈등은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주도권 경쟁으로 증폭되면서 갈등이 장기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그 해결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다. 이와 동시에 한일관계도 점차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자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강화의 필요성을 확실히 인지했다고 볼 수 있다. 독도를 중심으로 한 영토문제, 역사왜곡에 의한 갈등, 그리고 위안부 문제 등 한국과 일본은 해결되기 힘든 다양한 갈등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중국은 박근혜-아베의 갈등이 장기적인 이슈라고 인식하면서 한일 간의 갈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예측을 기반으로 정책을 펼치고 있다.<sup>42</sup>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증진이 가장 중요

한 외교적 돌파구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방문,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한국방문을 통하여 관계강화를 실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가. 주요쟁점

### (1) 한국의 사드(THAAD) 도입 문제

최근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 경쟁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있는 한국의 입장을 가장 잘 대변하고 있는 이슈가 한국의 사드 도입문제라고 볼 수 있다. 사드는 고도 40km에서 150km 사이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망 즉 MD의 핵심 무기체계이다. 사드는 미 록히드마틴 제품으로 길이 6.17m, 무게 900kg, 직경 34cm로 최대 속도는 마하 8.24에 이르며 한 발당 가격은 100~11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사드는 원래 미 MD 체계에선 미 본토를 향해 날아오는 적 대륙간탄도 미사일(Inter 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들을 상층단계에서 바다 위 이지스함에서 발사되는 SM-3 미사일로 요격하고, 탄도미사일이 대기권 밖으로 나가게 되면 알래스카 등에서 발사되는 지상배치 요격미사일(Ground Based Interceptor, GBI) 등으로 처리를 시도한 후, 그마저도 실패했을 경우 마지막 하강(종말)단계에서 요격하는 용도로 개발되었다.<sup>43</sup>

<sup>42</sup>- Laura Schwartz, "Competition and Confrontation in the East China Sea and the implications for U.S. Policy,"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NBR) Roundtable Report, February 2014), <[http://www.nbr.org/downloads/pdfs/psa/EastChinaSea\\_Roundtable\\_report.pdf](http://www.nbr.org/downloads/pdfs/psa/EastChinaSea_Roundtable_report.pdf)>; 박병광, "중·일간 조어도(센카쿠) 갈등의 배경과 파급영향,"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12-29, 2012.9.27).

<sup>43</sup>- 사드시스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을 참조. "THAAD: Terminal High-Altitude Area Defence, United States of America," *Army Technology*, <<http://www.army->

I
II
III
IV
V
VI
VII

사드의 한국배치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유는 중국의 반발 때문이다. 사실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는 아직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아직까지 미군이 한국정부에 공식적으로 제기 하지도 않았다. 그러나 공식화되기 전부터 사드문제가 미중 간 그리고 한중 간의 첨예한 이슈로 부상하는 것은 중국이 사드문제를 중국안보에 중요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2014년 5월 말 외교부 성명을 통하여 한반도에 MD를 배치하는 것은 지역 안정과 전략적 균형에 이롭지 않다고 우려를 표명했으며,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중국과의 관계를 희생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사드 배치에 대한 찬반양론이 비등하고 있지만, 한국정부의 입장은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되면 북한의 노동 또는 스커드 미사일을 좀더 높은 고도에서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방어 기회가 늘어나고 한반도 안보태세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sup>44</sup>

그렇다면 주한미군에 대한 사드배치가 중국이 주장하는대로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균형에 부정적인 역할을 할까? 즉 유사시에 사드 미사일이 중국에서 발사되어 미국으로 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을까? 실제로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 미사일이 중국에서 발사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면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

technology.com/projects/thaad/;> “MD체계의 핵심 미사일 THAAD SM-3,” 『조선일보』, 2014년 3월 19일, <[http://bemil.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3/19/2014031903111.html](http://bemil.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3/19/2014031903111.html)>.

44. “THAAD 1개 포대 평택에 배치한다,” 『동아일보』, 2014년 9월 5일, <<http://news.s.donga.com/3/00/20140905/66236542/1>>; “중국 싱크탱크, ‘중국은 한국의 사드 (THAAD) 도입 반대한다,’” 『중앙일보』, 2014년 8월 26일,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5644987&cloc=olink|article|default](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5644987&cloc=olink|article|default)>; “中國駐韓大使非常担心在韓國部署THAAD,” 『중양일보』, 2014년 10월 20일, <[http://chinese.joins.com/gb/article.do?method=detail&art\\_id=126271](http://chinese.joins.com/gb/article.do?method=detail&art_id=126271)>.

이 당연하다고 볼 수 있으며, 사드 미사일의 한반도 배치가 결국 한국의 MD 참여라는 중국 측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나온 분석들을 보면 중국의 입장은 그다지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은 대부분 중국 내륙에서 발사되는데 발사 후 불과 몇 초 만에 300km 이상의 고도로 상승되고 한반도의 동북 3성 위를 지나갈 때는 이미 500km 이상의 높이로 진입하기 때문에 최대 사거리가 150km인 사드로는 요격할 수가 없다. 따라서 미사일 자체로는 중국의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우려하는 것은 사드에 연동되어 있는 엑스밴드(X-band) 레이더의 성능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엑스밴드 레이더는 사드의 핵심 구성품으로 공식명칭은 AN/TPY-2이다. AN/TPY-2의 탐지거리는 정밀하게는 1,000km까지 최대 1,800km에 이르며 파장이 짧아(2.5cm) 적의 탄도미사일을 먼 거리에서 정밀하게 탐지하는 데 유용하다. 따라서 미사일이 날아가는 각도 뿐만 아니라 미사일의 종류가 무엇이고, 어떤 미사일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미국은 중국과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대상으로 일본 내 기지 2곳에 이미 엑스밴드 레이더를 배치해 두었으며, 일본보다 중국과 가까운 한국에도 이 레이더의 배치를 희망하고 있다. AN/TPY-2가 평택 미군기지에 배치된다면 1,000km에 달하는 탐지거리를 이용하여 베이징과 상하이, 다롄 등 주요 도시와 군사시설 밀집 지역까지 탐지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우려에 대해 엑스밴드 레이더보다 인공위성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주장을 한다. 아무리 레이더가 좋아도 지상에 설치된 레이더 보다는 공중에서 보는 인공위성이 더욱 효과적이며, 정확도도 높다고 반박하고 있다.

사드와 관련된 또 다른 쟁점은 사드가 과연 북한 핵탄두 미사일 요

I
II
III
IV
V
VI
VII

격에 효과가 있느냐는 점이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남북한 간의 거리가 짧아 북한 미사일의 비행시간이 보통 10분 미만이고 미사일 비행고도도 높지 않아 요격이 쉽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사드나 SM-3는 요격고도가 40~150km에 달하는 상층방어 요격미사일이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을 3차례나 하고 한반도에 대한 핵탄두 장착 미사일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패트리어트 PAC-2 미사일로는 탄도미사일 요격에 실패할 확률이 높다. 게다가 2016년부터 도입되는 패트리어트 PAC-3 미사일도 요격고도가 15~30km에 불과하고 또 요격가능시간도 수초에 불과해 실패확률이 높기 때문에 우리정부의 입장에서는 사드의 배치를 고려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특히 양강도 등 북한 후방지역에 배치된 노동 미사일이 남한을 향해 발사될 경우 하층 저고도 요격미사일로는 요격이 힘들고 한국방어에 구멍이 뚫린다는 분석도 사드배치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sup>45</sup>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와 관련된 논의를 볼 때,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의 안보위협 주장은 좀 더 실증적인 해설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미국을 상대로 펼치고 있는 엑스밴드 설치가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체계에 부담을 준다는 주장도, 엑스밴드 레이더가 중국의 안보체계를 노출시킨다는 분석도 또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는데 부적합하다는 인식도 모두 우리를 설득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한미 동맹관계에서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는 한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한국정부가 미군의 사드 도입에 반대해 줄 것을 넌지시 요청하고 있다. 이는 사드 자체가 중국

---

<sup>45</sup> 유용원, “사드 논란의 진실,” 『주간조선』, 2014년 10월 6일, <<http://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C02&nNewsNum=002326100002>>.

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중국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의 견고성을 시험해 보고, 한중관계를 이용하여 한미동맹을 이완시켜 보려는 전략적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

## (2) 한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Bank, AIIB) 가입 문제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에서 영향력 경쟁을 벌이는 또 하나의 이슈는 최근 중국이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AIIB(Asia Infrastructure and Investment Bank,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문제이다. 시진핑 주석은 2014년 7월 초 한국을 방문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아시아 각국의 도로, 철도, 교량 등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AIIB의 설립에 대해 설명하고 건설, 기술, 자금, 경험 등 인프라 관련 분야에서 우위가 있는 한국이 AIIB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하기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AIIB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전달하기는 했지만, 한국의 가입의사 표명은 하지 않았다. 사실 AIIB에는 인도, 싱가포르,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20개국이 이미 중국과 참여를 확정한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의사결정 권한 분배, 수석부총재 자리, 사무국 국내 유치 등의 쟁점을 두고 중국 측과 협의 중이다.<sup>46</sup>

<sup>46</sup>. “Asian Investment Bank: Realigning the status quo,” The Straits Times, September 2, 2014, <<http://www.thirdworldcentre.org/aiibankst.pdf>>; “중국,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 선언 한국 일단 ‘불참,’” 『연합뉴스』, 2014년 10월 24일,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4/10/24/0603000000AKR20141024132451083.HTML>>; “The potential role of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EASTASIAFORUM, February 11, 2014, <<http://www.eastasiaforum.org/2014/>

한국의 입장에서는 AIIB에 대한 가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AIIB에 가입하면 아시아 지역 내의 사회간접자본(SOC) 프로젝트 투자에 한국의 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이점이 있다. 미국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아시아 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과 달리 아세안, 러시아, 몽골 등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AIIB에 한국이 참여하면 한국기업들이 AIIB가 추진하는 인프라 개발사업의 핵심 수혜자가 될 수 있다. 게다가 북한의 국제화 및 개혁·개방을 선호하고 있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도 AIIB에의 참여를 저울질하고 있는 만큼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한국이 북한 내의 인프라 구축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특히 한국을 AIIB의 창립멤버로 참여시키겠다는 중국의 제의에 우리 정부는 AIIB 본부를 서울이나 송도국제도시 등 한국 내에 유치하는 것을 중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IIB 본부를 유치함으로써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중국의 독주를 저지하고, 미국의 우려도 잠식시키겠다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sup>47</sup>

그러나 한국이 AIIB에의 가입을 결정하는 데에는 해결해야 할 몇 가지 난관이 있다. 우선 AIIB의 자본금 구조와 운영의 문제이다. 중국은 AIIB 총 자본금 한도를 1천억 달러로 하되 납입자본금의 절반 가량인 500억 달러를 중국이 부담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경제력 있는 한국이 중국 다음으로 많은 자본금을 부담해줄기를 바라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지분에 비례한 차등 투표권 등을 주장하

---

02/11/the-potential-role-of-the-asian-infrastructure-investment-bank/>.

47. "Korea asks China for the AIIB headquarters," *Korea JoongAng Daily*, July 15, 2014, <<http://koreajoongangdaily.joins.com/news/article/Article.aspx?aid=2992029>>.

면서 AIIB에 대한 독점적 운영권을 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발도상국들에게 개발자금을 빌려주는 대표적인 국제개발은행은 국제부흥개발은행(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IBRD)과 아시아개발은행(Asian Development Bank, ADB), 미주개발은행(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유럽부흥개발은행(European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EBRD), 아프리카개발은행(African Development Bank, AFDB) 등 5곳이며, 이들 국제개발은행들은 참여 회원국들에 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한 자본금을 내도록 하고 자본금 크기에 비례해 지분과 투표권을 준다. 일반적으로 이들 국제개발은행들은 최대 주주국의 지분이 30%를 넘지 않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중국은 AIIB의 지분을 50% 이상 소유해 과반수의 투표권을 갖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이 경우 한국은 자칫 AIIB에 대규모의 자금을 출자하고도 중국의 ‘들러리’ 역할만 맡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sup>48</sup>

상임이사회 존재도 또 하나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개발은행들은 실제로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집행부 및 사무국과 별도로 주요 회원국의 대표들로 구성된 상임이사회를 두고 있다. 상임이사회는 주식회사의 이사회처럼 회원국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어떤 개발사업에 얼마만큼의 자금을 빌려줄 것인지를 승인·점검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중국은 AIIB에 상임이사회를 두지 않는 대신 자국이 임명한 집행부와 이들의 지휘를 받는 사무국이 사실상 사업결정권을 독차지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중국이 이런 지배구조를 원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사

<sup>48</sup> “Why China is creating a new ‘World Bank’ for Asia,” *The Economist*, November 11, 2014, <<http://www.economist.com/blogs/economist-explains/2014/11/economist-explains-6>>.

I
II
III
IV
V
VI
VII



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알려지고 있다. 사실 기존 국제기구에 서는 상임이사국 간에 거미줄처럼 얽혀져 있는 이해관계 때문에 회원국들의 다양한 인프라투자 개발 요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중국이 AIIB를 통하여 추진하려고 시도하는 대표사업인 중국 베이징-이라크 바그다드 간의 ‘신(新)실크로드’ 철도건설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ADB에서 논의됐지만 그동안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 거의 진척이 없는 상태로 있었다.<sup>49</sup>

중국이 AIIB 이사회를 비상임이사국들만으로 구성하려는 것은 AIIB를 통하여 지금까지 미국과 일본이 주도해왔던 아시아 지역 내의 국제금융질서를 중국 중심으로 재편해 보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AIIB 내에서 회원국들이 중국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서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ADB가 기존에 독점하고 있던 아시아 인프라투자시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상임이사회가 없는 조직을 만들려는 중국 측 의도에는 미국, 일본의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려는 목적이 숨어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AIIB 내에 상임이사회가 설치되지 않는다면 중국은 아무런 견제를 받지 않고 AIIB를 운영·감독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인프라 투자사업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집행부와 사무국을 중국의 영향력 하에 두고 부정기적으로 열리는 비상임이사회를 집행부의 결정을 추인하는 허수아비 역할만 하도록 만들게 된다. 게다가 AIIB에 한국이 참여한다면 2대 주주가 될 한국에 대해서도 의사결정권을 제한한 것은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

49.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빛바랜 출발,” 『한겨레』, 2014년 10월 24일,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661156.html>>.

참여 여부를 확정하기 전에 중국의 의사결정 권한배분 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중국의 AIIB 설립 움직임에 대한 미국의 견제이다. 미 백악관은 “AIIB가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가진 높은 기준을 충족할지 의문이다”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이 AIIB 가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국무부도 AIIB는 “분명히 넘어야 할 문턱(Bar)이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AIIB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 브루킹스연구소(Brookings Institute)의 조나단 폴락(Jonathan Pollack)같은 전문가들은 한국의 AIIB참여를 긍정적인 면에서 파악하고 있다. 우선 그는 AIIB가 중국과 미국 양국의 제로섬 게임으로만 인식되고 있지만, 한중관계와 미중관계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또한 동남아시아의 인프라 개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은행·ADB만으로는 불충분하기 때문에 AIIB의 설립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국이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핵잠수함 건설에 투입하는 것보다는 AIIB를 통하여 주변국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한국의 AIIB 참여를 두고 찬반양론이 갈리면서 한국의 참여결정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sup>50</sup>

---

<sup>50</sup> “China Launches AIIB to Rival World Bank Without US Allies After Pressure from Washington,” *International Business Times*, October 24, 2014, <<http://www.ibtimes.co.uk/china-launches-aiib-rival-world-bank-without-us-allies-after-pressure-washington-1471582>>.

I
II
III
IV
V
VI
VII

## 나. 한국의 대응전략

중국의 부상과 함께 한국의 대외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어떻게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적절히 조화롭게 만들어갈 것인가?”이다. 한국은 지난 20년 동안 안보문제는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해결해 온 반면, 경제발전은 중국과의 교류를 통하여 이룩해 왔다. 따라서 한국의 미래 발전에 있어서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는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쌍무관계로 인식되어 왔으며, 이 두 관계를 동시에 유지·관리해나가는 것이 한국의 가장 중요한 전략적 목표가 되었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미국과 중국 모두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했던 것이다. 이러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한국 정부는 헤징전략을 실행해 왔으며, 지난 10여 년 동안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중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수행해 왔던 헤징전략의 기본전제는 미중 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는 것이었다. 즉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중국에 대한 얘기를 기피하고 한중관계 속에서는 미국에 대한 얘기를 최소화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특히 미국에게는 한미동맹 강화만을 강조하고 중국에게는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만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완충지대를 확대해 가자, 한국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헤징전략을 사용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중국은 한반도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도전과 경쟁을 본격화해가고 있으며, 그 과정 속에서 한국은 더 이상 전략적 모호성 속에서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동시에 유지해가기 힘들게 되었다. 전략적 모호성이 양국관계를 유지하는데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전략적 선택을 해야만 한다. 즉 미국과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민감한 문제에 직면해서는 결정을 유보하거나 결정을 내리지 않는 태도에서 벗어나 한국의 국익을 결정하고 그 국익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새로운 방향으로 외교전략을 다시 구상해야 한다.

사실 한국에서는 ‘우리의 국익’에 대한 논의가 극도로 제약되어왔다. 미국과 중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우선적으로 챙기기 보다는 상황적 논리에 따라 국익을 취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국익을 먼저 정하고 그 바탕 위에서 민감한 문제들을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 만약 국익의 틀이 없으면 우리는 수많은 민감한 문제들을 놓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약소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우선 우리의 국익을 정하고 그 결정을 미국과 중국에 알려서 그 바탕 위에서 이슈들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는 것이 앞으로의 상황에 걸맞는 수순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사드의 경우, 우리의 국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안보이다. 중국이 자국의 안보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불만이 있을지라도 북한으로부터의 가능성 있는 도발을 막기 위해서 사드를 도입하는 것은 우리의 국익에 최우선적인 과제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만 중국으로서도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AIIIB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경제적 국익과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한 AIIIB의 가입은 고려해볼 만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AIIIB에 가입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가입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의 국익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국익을 연구하고 또 실제 정책에 적용해보는 과정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 국익설정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하는 또 하나의 변수는 국민적 공감대이다. 국익결정도 마찬가지지만 미래의 사활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서 외교적 결정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

I
II
III
IV
V
VI
VII

적 공감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외교행태를 분석해 볼 때, 국민적 공감대 결여로 국익을 손해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손실을 막고 좀 더 정교하고 세련된 외교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야 간의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외교적인 입장을 결정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대국민 여론 수렴과정을 시도해야 한다.

# IV. 일본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1. 일본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 가. 일본의 대외전략

### (1) 대외전략의 기초

일본은 최근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해 미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등의 국력이 증강하면서 다극화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sup>51</sup>

따라서, 중국의 G2 부상 이후,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대중국 헤징 전략(hedging strategy)을 전개하면서 동맹국과의 관계 강화, 우호국들과의 협력 증대 등을 추구하게 되자, 일본은 미국의 동맹 강화 전략에 응하여 미일동맹의 강화를 추구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전략적 역할의 분담을 지향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 호주, 인도 등과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면서 대중국 포위망의 구축 전략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일본의 대외정책의 기초는 국제 전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전략적 역할의 분담을 증대하면서, 중국 견제를 위해 대중국 포위망의 구축을 전략적으로 추구하고, 나아가 전략적 역할 및 책임 분담의 대가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위상 및 영향력의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일본의 대외전략의 기초는 아베 정권의 대외정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2006년 9월 출범한 제1기 아베 정권은 그해 11월 외교라인의 지미파

<sup>51</sup> 日本 外務省, 『外交青書2014』(2014.4.4), p. 2, <<http://www.mofa.go.jp/mofaj/gaiko/bluebook/>>.

I
II
III
IV
V
VI
VII

가 중심이 되어 수립한 ‘자유와 번영의 호(弧)’를 일본외교의 기축으로 제시하며,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인권·법의지배 등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가치외교’를 주창하였다.<sup>52</sup>

이는 가치외교를 내세워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전략인데, 2012년 12월에 출범한 제2기 아베 정권에서도 전략적으로 계승되었다.

아베는 총리취임 직후, 2013년 1월 28일에 처음으로 일본국회에서 행한 ‘소신 표명 연설’에서 주요 외교전략의 기조로 1) 미일동맹의 강화, 2) 가치외교의 전략적 전개, 3) 아세안(ASEAN)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sup>53</sup> 이후, 아베 총리는 미국의 아시아 중시정책(pivot to Asia)과 재균형(Rebalancing) 정책에 응하여 미일동맹의 강화를 추구하면서 집단적 자위권의 해석,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재개정 등을 추진하였고, 나아가 미국의 대중국 헤징 전략과의 전략적 협력을 위하여 동남아 지역에 가치외교의 확산과 더불어 중국과 갈등·대립관계에 있는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과 ‘전략적 파트너 관계’를 강화하였으며, 신흥 강대국 인도와도 대 중국 전략적 연대의 강화를 추구하였다.

그리고 아베 총리는 제2차 내각의 발족 직후, 2014년 9월 29일에 일본 국회에서 행한 ‘소신 표명 연설’에서도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 등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 등의 국가들과 연대할 것을 강조하였다.<sup>54</sup> 즉, 아베 총리는 미일동맹의 강화에 따른 일본의 역할 부담

---

52. 배정호,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7), pp. 85~88.

53. 首相官邸, “第百八十三 回國會における安倍内閣總理大臣所信表明演説,” (2013.1.28), <[http://www.kantei.go.jp/jp/96\\_abe/statement2/20130128syosin.html](http://www.kantei.go.jp/jp/96_abe/statement2/20130128syosin.html)>.

54. 首相官邸, “第百八十七 回國會における安倍内閣總理大臣所信表明演説,” (2014.9.29), <[http://www.kantei.go.jp/jp/96\\_abe/statement2/20140929shosin.html](http://www.kantei.go.jp/jp/96_abe/statement2/20140929shosin.html)>.



의 증대와 더불어 가치 연대를 통한 대중국 견제의 강화 등을 재차 표명한 것이다.

이와 같은 대외전략을 위해, 아베 정권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발족(2013.12.4), 국가안전보장전략의 수립(2013.12.17), 신방위계획대강의 수립(2013.12.17), 군사력의 질적 증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요컨대, 아베정권의 대외정책의 기조는 중국의 부상에 따른 전환기적 국제 전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1) 미일동맹의 강화와 더불어 이를 위한 일본의 전략적 역할 및 책임의 분담을 증대하면서, 2) 미국-일본-호주-인도 등의 전략적 안보연대를 통하여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고, 3) 중국 견제를 위해 동남아 지역 등에 가치외교의 확산을 통한 대중국 전략적 연대의 강화를 도모하며, 4) 이를 기반으로 미일관계에서 일본의 정책적 공간과 정책의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일본의 전략적 위상 및 영향력의 확대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 (2) 미일동맹의 강화와 일본의 안보 능력 증강

아베 정권은 미국의 재균형정책에 응하여 미일동맹의 강화를 추구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헤징전략에 협력하고 있다. 아베 정권의 미일동맹의 강화와 이를 위한 일본의 역할 및 책임 분담은 2013년 10월 3일에 발표된 ‘미일 안전보장협의회(2+2)’의 공동성명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일본은 ‘미일 공동성명’에서 미일동맹의 질적 강화를 위한 일본의 책임분담과 관련,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허용, ‘미일 방위협력지침’의 개정 및 방위예산의 증액 등을 가시화하였다.<sup>55</sup>

그리고, 아베 정권의 안보협력을 통한 미일동맹의 강화는 2014년 4월

55. 『朝日新聞』, 2013년 10월 4일; 『讀賣新聞』, 2013년 10월 4일.

24일, 도쿄에서 개최된 오바마-아베 정상회담을 통해 한층 명확하게 나타났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18년 만에 방일한 오바마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을 통하여 <표 IV-1>에 나타난 바 같이, 미일동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의 초석이며, 글로벌 협력의 기반임을 강조한 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임을 역설하였다.<sup>56</sup> 이와 관련, 오바마 대통

● 표 IV-1 오바마-아베 정상회담 공동성명의 주요내용

안 보	○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를 옹인하고, 법적 기반정비를 환영
미일동맹	○ 지역 평화와 안정의 초석이며, 글로벌 협력의 기반 ○ 아베 정권의 적극적 평화주의에 대해 미국의 재균형정책과 함께 미일동맹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긍정적 평가 ○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 라인)의 재개정을 통해 안보협력을 확대하는 방침을 확인
경 제	○ TPP 교섭의 조기 타결을 지향할 것을 확인
북한문제	○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한미일이 대응 ○ 납치자 문제의 해결에 협력을 표명하고, 납치자 가족 면담을 위해 북일 비밀교섭을 추진
중국관계	○ 센카쿠 열도(중국어명: 다오위다오)를 미일안보조약의 대상으로 첫 명기 - 제5조 적용 ○ 미일은 동지나 남지나해에서 ‘현상변경’ 반대 - 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필리핀, 베트남 등에 순시선 제공 - ASEAN 각국의 해상감시능력의 향상 지원 ○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중국과의 협력을 중시 - 중일관계의 개선을 촉구

출처: 『朝日新聞』, 2014년 4월 24일; 『讀賣新聞』, 2014년 4월 24일; 『毎日新聞』, 2014년 4월 24일; 『日本經濟新聞』, 2014년 4월 25일.

56. 『毎日新聞』, 2014년 4월 24일; 『讀賣新聞』, 2014년 4월 24일.

령은 일본의 집단자위권<sup>57</sup>의 행사를 용인하고, 이를 위해 법적 기반의 준비를 지지를 표명하였다.

또, 오바마-아베 정상회담의 공동성명에서는 일본과 중국 간에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조어도(센카쿠/다오위다오)가 미일안보조약의 대상으로 처음으로 명기되었고, ‘미군에 의한 일본 방위 의무’가 명기된 제5조가 적용되었다.<sup>58</sup>

미국은 재균형정책의 전개를 위해 미 해군함정의 60%를 아시아-태평양에 배치하는데, 미일동맹의 강화와 관련, 주일미군의 미사일 요격능력의 강화를 위해 2017년까지 이지함 2척을 증강하여 총 7척을 운용할 계획이다.

그리고, 미국의 재균형정책의 전개에 따른 미일동맹의 질적 강화, 일본의 전략적 역할 분담 등과 관련하여 아베 정권은 안보능력의 증강을 위해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신설, 국가안전보장전략의 수립, 신방위대강의 수립 등을 추진하였고, 나아가 집단자위권의 수행을 위한 법적 기반 준비를 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베 정권은 2014년 7월 1일, 헌법 해석의 변경을 통해 집단자위권의 행사를 허용하는 ‘안전보장법제정비 최종안’을 각의 결정하였다.<sup>59</sup> 핵심 내용은 일본이 1)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3국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할 경우, 2) 일본의 존립이 위협당할 경우, 3) 일본 국민의 생명과 자유 및 행복추구권이 침해당할 경우에 집단자위권을 행사한다는 것이다.<sup>60</sup>

57. 집단자위권은 일본과 동맹국이 제3국의 무력 공격을 받았을 경우,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군사개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58. 『日本經濟新聞』, 2014년 4월 25일.

59. 집단자위권의 시행은 일본 국내의 강한 반대 및 저항으로 인해 2015년으로 연기되었다.

I
II
III
IV
V
VI
VII

이어 아베 정권은 안보능력의 질적 증강을 위한 제도적 정비로서 2013년 12월에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신설하고, 국가안전보장전략과 신방위계획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을 수립, 발표하였다.

아베 정권은 2013년 11월 27일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창설 법안을 채택한 뒤,<sup>61</sup> 동년 12월 4일에 총리의 안보정책 주도권 강화를 위한 국가안전보장국을 발족시켰다.<sup>62</sup> 국가안전보장국은 총리, 관방장관, 외상, 방위상으로 구성된 ‘4인 각료회의’를 상시 보좌하는 사무국 성격으로 외교·안보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국가전략의 수립, 부처 간 조정, 위기관리의 담당 등을 주요 업무로 한다.<sup>63</sup>

이어 아베 정권은 2013년 12월 17일, 각의에서 일본의 외교·안보정책의 총괄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NSS)’을 확정한 뒤, 동일 ‘국가안전보장전략(NSS)’을 구체화하기 위해 10년 단위의 실행 프로그램인 ‘신방위계획대강’, 5년 단위의 실행 프로그램인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국가안전보장전략(NSS)’<sup>64</sup>에서는 국제협조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국가안전보장의 기본이념으로 하면서, 기술혁신의 급속한 진전과 국제테러의 위협에 대한 대응, 중국의 급속한 대두와 해양 진출에 대한 대응, 해양·우주·사이버 공간의 위협에 대한 대응,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과괴무기 능력의 증강 및 도발행위에 대응 등을 주요 과제로 거론하였다. 또한 주요 전략적 접근(approach)으로

---

60. 『朝日新聞』, 2014년 7월 2일; 『讀賣新聞』, 2014년 7월 2일.

61. 『朝日新聞』, 2013년 11월 28일.

62. 위의 글, 2013년 12월 5일.

63. 국가안전보장국의 초대 사무국장에는 야치 쇼타로 내각관방참여(전 외무성 사무차관)이 임명되었다.

64. “國方の基本方針について(1957.5.20)”을 대신하는 총괄지침이다.

표 IV-2 국가안전보장전략과 신방위계획대강 및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

국가안전 보장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이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협조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적극적 평화주의</li> </ul> </li> <li>▲ 국제안보환경과 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파워 밸런스(power balance)의 변화</li> <li>○ 중국의 해양 진출 주시</li> <li>○ 북한의 핵·미사일 등 대량파괴무기 능력의 증강 및 도발행위</li> </ul> </li> <li>▲ 주요 전략적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일동맹 강화</li> <li>○ 해양안보의 확보</li> <li>○ 정보기능의 강화</li> <li>○ 사이버 공격대책 강화</li> <li>○ 가치외교의 전개</li> <li>○ 국가안전보장의 국내적 기반 강화</li> <li>○ 애국심 강조</li> </ul> </li> </ul>
신방위 계획대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해·공 자위대 운용 일체화 등을 통한 '통합기동 방위력' 구축</li> <li>▲ 전력증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낙도 탈환 등을 위한 수륙양용부대(일본판 해병대) 창설</li> <li>○ 공중급유기 증강</li> <li>○ 무인정찰기 도입</li> <li>○ 이지스함, 6척에서 8척으로 증강</li> <li>○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 증강</li> <li>○ 육상자위대 병력의 규슈 집중 배치</li> </ul> </li> </ul>

출처: 日本 防衛省, 『國家安全保障戰略について』(2013.12.17).

서 미일동맹 강화, 사이버 공격대책 강화, 정보기능의 강화, 기술력의 전략적 활용, 가치외교의 전개, 국가안전보장의 국내적 기반 강화, 애국심 강조 등을 제시하였다.<sup>65</sup>

65- 日本 防衛省, “國家安全保障戰略について,” (2013.12.17), <<http://www.mod.go.jp/>>

I  
II  
III  
IV  
V  
VI  
VII

‘신방위계획대강’에서는 육·해·공 자위대 운용 일체화 등을 통한 ‘통합기동 방위력’의 구축을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고, 이와 관련된 전력 증강으로서는 낙도 탈환 등을 위한 수륙양용부대(일본판 해병대)의 창설, 공중급유기의 증강, 무인정찰기의 도입, 이지스 함의 6척에서 8척으로 증강,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 능력 증강, 육상자위대 병력의 규슈 집중 배치 등이 핵심 내용이다.<sup>66</sup>

이상과 같이, 미국의 재균형정책의 전개와 미일동맹의 강화, 일본의 전략적 역할 및 위상의 확대 등을 위해 증강된 일본의 안보 능력은 「미일 방위협력의 지침(가이드라인)」의 개정에도 구체적으로 투영되고 있다. 2014년 10월 8일에 발표된 「미일 방위협력의 지침(가이드라인)」의 중간보고의 핵심내용은 미일 방위협력의 지리적 제약이 없는 지역 및 글로벌 평화와 안전을 위한 협력, 평시 자위대의 미군 지원 강화, 그레이 존(Gray zone) 사태의 새로운 협력 모색,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따른 무력 사용의 허용과 협력에 대한 상술(詳述) 등이다.<sup>67</sup>

### (3)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대중국 견제전략

자민당의 고이즈미 정권이 막을 내린 후, 중일관계는 ‘전략적 호혜관계’를 지향하며 개선되어 갔다. 고이즈미 정권을 계승한 제1기 아베 정권과 후쿠다 정권은 ‘동아시아 외교의 부재’를 극복하기 한국, 중국 등과 관계 개선을 추구하였고, 그 결과 2008년 12월부터 한중일 3국 정상 이 개최되기도 하였다. 더욱이, 2009년 8.30 총선거에 의해 자민당에서

---

j/approach/agenda/guideline/security\_strategy.html>.

66. 首相官邸, “平成26年度以降に係る防衛計画の大綱について,” (2013.12.17), <<http://www.mod.go.jp/j/approach/agenda/guideline/2014/>>.

67. 『朝日新聞』, 2014년 10월 9일; 『讀賣新聞』, 2014년 10월 9일.

민주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하토야마 총리의 ‘동아시아 공동체’의 주창과 ‘우애 외교’의 전개에 의해 한중일 3국 관계는 한층 협력적이며 긴밀해졌다. 즉, 중일관계는 ‘협력과 견제’의 관계였다.

그런데, 2010년 9월 7일, 중국 저인망 어선의 일본 순시선의 충돌사건을 계기로 중일관계는 갈등관계로 전환되었다. 즉, 중국의 외교관례를 무시한 거칠고도 오만한 대응에 의해, 중일관계는 갈등과 대립의 관계로 악화되었다.<sup>68</sup>

이후, 중일관계는 조어도(센카쿠/다오위다오)의 영유권을 둘러싼 갈등과 견제의 관계가 되었고, 중국의 부상에 대한 미국의 견제와 재균형정책,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경계, 일본 내 우경화 성향의 대중국 인식에 대한 투영 등의 영향으로 갈등과 대립의 관계가 되었다.

2010년 9월의 조어도(센카쿠/다오위다오)에서의 충돌 이후, 일본은 동지나해 도서지역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상정하며, 미일동맹을 기반으로 한 공동대처를 추구하였고, 이는 미국의 재균형정책과 그에 따른 일본의 전략적 역할 및 책임 분담을 통하여 대중국 견제로 나타났다.

미국의 재균형정책은 동지나해, 남지나해 등으로 중국의 공세적인 진출에 대해 대응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일본도 이에 응해 앞에서 언급한 안보 능력의 증강과 더불어 중국 견제를 위한 호주, 인도 등과의 안보 연대 강화,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베트남, 필리핀 등에 대한 전략 지원 등을 전개하게 되었다.

따라서, 아베 총리는 미국-일본-호주-인도 4국의 안보연대를 강화하면서 동남아 중시외교를 전개하고 있다.

<sup>68</sup> 중국 정부가 새벽에 주중 일본대사를 불러서 항의하고, 특히, 중국이 ▲ 대일 수출입 제품의 통관 지연 ▲ 희토류의 대일 금수 조치 ▲ 일본인 체포 등 국익을 위해 원칙을 깨는 문제 해결방식을 취하자, 일본 국내는 중국 위협론이 급속히 확산되었으며, 중일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었다.

I
II
III
IV
V
VI
VII

아베 총리는 취임 직후인 2013년 1월 16일부터 첫 해외 순방지로 베트남, 타이, 인도네시아 등을 방문하였고, 동년 1월 18일에는 인도네시아에서 ▲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인권·법의 지배 등 ‘보편적 가치’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공동 노력, ▲ 해양 수호와 미국의 아시아 중시 환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표 IV-3>과 같은 ‘대아세안(ASEAN)외교 5원칙’을 발표하였다.<sup>69</sup>

‘대아세안(ASEAN)외교 5원칙’에서 가치외교, 법의 지배에 의한 해양수호, 미국의 아시아 중시 환영 등을 강조한 것은 동지나해, 남지나해 등에서 공세적 해양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와 이를 위한 일본·아세안의 전략적 협력 등을 지향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다.<sup>70</sup>

● 표 IV-3 일본의 ‘대아세안(ASEAN)외교 5원칙’

-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인권·법의 지배 등 ‘보편적 가치’의 정착과 확산을 위해 공동 노력을 한다.
- 힘이 아닌 법이 지배하는 자유로운 해양은 공공재이고, 아세안의 각국과 함께 전력을 다하여 수호한다. 미국의 아시아 중시를 환영한다.
- 경제연대를 통해 일본경제의 재생을 도모하고, 아세안 각국과 함께 번영을 추구한다.
- 아시아의 다양한 문화, 전통의 교류, 육성을 함께 추구한다.
- 젊은세대의 교류 활성화를 추구하고, 이를 통하여 상호이해를 촉진한다.

출처: 『東京新聞』, 2013년 1월 19일; 『朝日新聞』, 2013년 1월 19일; 『讀賣新聞』, 2013년 1월 19일; 배정호 외, 『오바마-시진핑시대의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한국의 대북 및 통일외교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 110에서 재인용.

69. 『東京新聞』, 2013년 1월 19일; 『朝日新聞』, 2013년 1월 19일; 『讀賣新聞』, 2013년 1월 19일.

70. 배정호 외, 『오바마-시진핑시대의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한국의 대북 및 통일외교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p. 108~110.



중국은 동지나해는 물론, ‘21세기 새로운 해상 실크로드’ 구상을 제창하며 남지나해, 인도양에서도 공세적 진출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인도양을 넘어 유럽과 아프리카로 가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몰디브, 파키스탄 등 인도양 국가에 대규모 항만과 해군기지 등을 건설하고, 이들 항만들을 전략적 진출 거점으로 연결하는 소위 ‘진주 목걸이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sup>71</sup>

그러므로 아베 총리는 미국-일본-호주-인도 4국의 ‘안보 다이아몬드’ 전략구상을 추구하고면서, 2013년 7월에 중국과 대립관계에 있는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을 방문하여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전략적 파트너 관계’의 구축 및 강화를 추진하였고, 캄보디아, 라오스 등을 방문하여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의 지지를 위한 안보외 교도 전개하였으며, 동년 12월에는 도쿄에서 일본-ASEAN 특별정상 회담을 개최하였다. 특히, 아베 총리는 남지나해에서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필리핀, 베트남 등에 대해 순시함 건조 등을 위한 정부 개발원조(ODA)를 제공하는 등 해상지원의 강화를 추구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의 전략적 지원 등의 영향으로 중국 견제를 위한 필리핀-베트남간의 안보연대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일본-호주-인도 4국의 ‘안보 다이아몬드’ 전략구상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맥락에서 인도와의 전략적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2012년 6월 9~10일에 인도 근해에서 첫 일본-인도 공동 해상훈련을 실시하였고, 아베 총리는 2014년 1월에 인도를 방문하여 2,089억 엔의 차관을 제공하는 대신에 중국 견제를 위한 안보 분야의 협력을 확보하였다. 그 결과, 2014년 7월

71. 『조선일보』, 2011년 5월 24일; 『조선일보』, 2014년 9월 17일.

I
II
III
IV
V
VI
VII

24~30일에 미국-일본-인도 3국의 첫 공동 해상훈련인 ‘말라바르(Malabar)’ 훈련<sup>72</sup>이 오키나와 근해에서 실시되었다. 또, 아베 총리는 동년 8월 30일부터 9월 3일까지 인도의 모디 총리를 초청하여 아베-모디 정상회담(9.1)을 개최하여, 인도 인프라금융공사(IIFFCL)에 500억 엔의 차관을 제공하는 등 5년 동안 총 320억 달러를 인도에 지원하는 것에 합의하는 한편, 일본-인도 공동 군사훈련의 정례화 등 안보협력의 강화에도 합의하였다.

이상과 같은 일본의 동남아 및 인도 중시 전략외교는 미국의 아시아 전략, 미국의 대중국 해징 전략 등과도 연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나. 일본의 대북정책과 북일관계

일본과 북한 간의 핵심 현안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이고, 일본의 대북정책의 기초는 ‘대화와 압박’이었다. 그러나,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일본의 대북정책의 기초는 ‘압박과 제재’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즉, 일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한편, <표 IV-4>와 같은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를 취하였다. 북일관계는 경직되고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따라서, 북한은 자민당 내의 총리 교체, 자민당에서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 민주당에서 자민당으로의 정권 교체 등이 이루어질 때 마다, 일본의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 대일 접근을 시도하곤 하였다.

---

<sup>72</sup> 미 해군은 원자력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 구축함 맥케인함 등을 동원하였고, 해상자위대는 ‘아지가라’, ‘구라마’ 등 호위함 2척과 구난 비행정 US-2, 초계기 P-3C 등을 훈련에 투입하였다.

표 IV-4 일본의 독자적 대북제재 조치

	독자적 제재	유엔 제재 동참
제1차 핵실험 (2006.1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북한 국적 선박의 입항금지</li> <li>▲ 북한으로부터의 수입 전면 금지</li> <li>▲ 북한 국적자의 원칙적 입국 금지</li> </ul>	‘유엔안전보장이사회 1718’ 적극 동참
제2차 핵실험 (2009.5.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북한으로 수출 전면 금지</li> <li>- 일본과 북한의 수출입 전면 금지</li> </ul>	‘유엔안전보장이사회 1874’ 적극 동참
천안함 폭침사건 (2010.3.26) 이후 추가 제재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물검사특별조치법(2010.5.28)’</li> <li>- 일본해상청이나 세관은 북한에 드나드는 선박이나 항공기가 핵 무기 및 미사일에 관련된 금수 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될 경우, 영해는 물론 공해상에서도 검사할 수 있게 됨.</li> <li>▲ ‘대북 송금 및 현금 지참액 제한’</li> <li>- 대북 송금시 보고의무 기준액을 현행 ‘1천만 엔 이상’에서 ‘300만 엔 이상’으로 하향 조정 및 강화</li> <li>- 북한 방문시, 신고해야 하는 현금 지참금을 현행 ‘30만 엔’이상에서 ‘10만 엔 이상’으로 하향 조정, 강화</li> </ul>	
제3차 핵실험 (2013.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3년 4월 13일에 만료되는 제 1차, 제2차 핵실험 이후에 취해진 일본의 대북제재 조치를 2년 연장할 것을 결정(2013.4.5)</li> </ul>	‘유엔안전보장이사회 2094’ 적극 동참

출처: 배정호 외, 『북한 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북 핵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p. 123~128; 배정호 외, 『오바마-시진핑시대의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한국의 대북 및 통일외교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p. 114~116.

그러나, 일본의 ‘압박과 제재’ 중심의 대북정책은 지속되었고, 제2기 아베정권에게도 계승되었다.

아베 내각의 발족 직후에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하자, 아베 정권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2094’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한편, 2013년

I  
II  
III  
IV  
V  
VI  
VII

4월 13일에 만료되는 제1차, 제2차 핵실험 이후에 취해진 일본의 대북 제재 조치를 2년 연장할 것을 결정하는 등 독자적 대북 제재의 조치를 지속시켰다.<sup>73</sup>

하지만, 아베 정권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접촉을 염두에 두고 극단적 대북 제재의 조치는 자제하였다. 아베 정권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의 해결을 북일 간의 최대 현안으로 삼고 북한과 접촉하며 교섭을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아베 총리는 납치문제에 대한 강한 주장을 통하여 거물 정치인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에 납치문제의 해결에 대한 정치적 채무가 있었고, 게다가 고이즈미 총리 이래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납치문제의 해결을 통하여 정국의 강한 주도력 및 정책의 추동력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총리 관저의 주도아래 대북 접촉이 전개되었다.

이시마 이사오 내각관방 참여(총리 자문역)가 2013년 5월 14~17일에 평양을 방문하여 김영일 노동당 국제비서와 회담,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등과 회담을 하였고<sup>74</sup>, 그 이후에도 중국의 선양(瀋陽)과 베이징(北京), 몽골의 울란바토르 등에서 북한과 일본 간의 비밀 교섭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2014년 5월 26~28일,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북일 국장급 회담에서 납치 피해자 조사와 대북제재의 해제에 대해 <표 IV-5>와 같은 합의가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아베총리는 2014년 5

---

73. 일본의 대북제재 조치는 북한의 제1차 핵실험 이후에 6개월마다 대북 제재의 연장 여부를 결정했는데, 2009년 5월 제2차 핵실험이후에 1년으로 조정되었고, 제3차 핵실험을 계기로 2년으로 연장되었다. 이는 제재의 강화이다. 배정호 외, 『오바마-시진핑 시대의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한국의 대북 및 통일외교 전략』, p. 115.

74. 위의 책, p. 116.

월 29일, 일북합의 문서를 승인한 후, ‘전면 해결을 위한 제일보가 될 것을 기대하고’, 합의 사항은 ‘언어 대 언어’, ‘행동 대 행동’의 방식으로 전개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표 IV-5 북일 스톡홀름 합의의 주요 내용

일본이 취할 행동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양선언에 따라 현안 사항을 해결하고, 국교정상화를 실현하는 의사를 표명</li> <li>○ 특별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는 시점에 일본은 독자적 제재를 일부 해제</li> <li>○ 일본인 유골, 묘지 참배 등에 협의</li> <li>○ 조총련계 교포들의 지위에 대해 협의</li> <li>○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검토</li> </ul>
북한이 취할 행동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든 일본인에 대한 조사를 포괄적이고 전면적으로 실시 - 조사 대상을 넓게 하여 성과 도출의 가능성을 확보</li> <li>○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가 가능한 권한을 가진 특별위원회를 설치</li> <li>○ 납치피해자, 행방불명자에 대한 조사 사항을 일본 측에 수시 통보</li> <li>○ 조사과정에서 일본인 생존자가 발견될 경우, 이들을 귀국시키는 방향에서 협의</li> </ul>

출처: 『朝日新聞』, 2014년 5월 30일; 『日本經濟新聞』, 2014년 5월 30일; 『毎日新聞』, 2014년 5월 30일; 『讀賣新聞』, 2014년 5월 30일.

‘일본인 납치자 조사 로드맵’은 ▲ 특별위원회 설치, ▲ 조사 결과 판명, ▲ 생존자 귀국 등의 순서로 진행되며, 완료기간은 1년 이내로 잡혀 있다.

이와 같은 로드맵에 따라 스톡홀름 합의의 이행 방안 논의를 위한 북일 외무성국장급 회담이 2014년 7월 1일 중국의 베이징에서 개최된 뒤, 북한은 2014년 7월 4일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모든 일본인에 관한 포괄적 조사에 착수하였다.

특별조사위원회는 서태하 국방위원회 안전담당 참사 겸 국가안전보

- I
- II
- III
- IV
- V
- VI
- VII

위부 부부장을 위원장에, 김명철 국가안전보위부 참사와 박영식 인민보안부 국장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등 국가안전보위부, 인민보위부, 인민무력부 등에서 파견된 30명으로 구성되었다. 또, 특별조사위원회에 ▲ 납치피해자, ▲ 행방불명자, ▲ 일본인 유골문제, ▲ 잔류 일본인 및 일본인 배우자 등을 조사하는 4개의 분과가 설치되었고, 지방에는 안전보위부가 포함된 지부가 설치되었다.

그리고 북한의 특별위원회가 조사를 개시하는 시점인 2014년 7월 4일에 일본도 ▲ 북한 국적자의 일본 입국 금지 등 인적 왕래의 규제 조치 해제, ▲ 인도적 목적의 북한 국적 선박의 일본 입항 금지 조치 해제, ▲ 300만 엔 이상의 송금 보고 의무, 10만 엔 이상의 현금 지참 제한 등에 대한 규제를 해제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단, 북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만경봉호’의 입항 금지는 계속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4년 9월 2번째 주로 예정되었던 북한의 납치문제 재조사의 1차 결과에 대한 북한의 통보가 연기되었고, 2014년 10월 말을 기준으로 보고시점마저도 불투명한 상태이다. 즉, 당초 기대와는 달리 일본과 북한은 납치문제 재조사 및 보고를 둘러싸고 진통을 겪게 된 것이다.

## 2.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일 통일외교 전략

한반도 통일에 대해 일본 국민들은 대체로 관심이 높지 않다. 한반도가 통일이 될 경우,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기대가 클 수 있는 반면 우려도 적지 않다.

예컨대, 일본은 통일한국의 친중화, 통일한국의 핵무장, 통일한국과 일본의 적대적 경쟁 관계 형성, 통일전후의 대량난민의 일본 유입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sup>75</sup>

그러므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일본의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한국은 일본의 우려나 경계를 가능한 극소화시키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일본의 통일한국에 대한 긍정적 기대에 부응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가. 통일한국의 친중화에 대한 경계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중국이 신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정책과 동맹 강화를 추진하고, 이에 일본은 호주, 인도 등과의 전략적 협력,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베트남, 필리핀 등에 대한 전략 지원 등을 통하여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일 대 중국’의 견제구도에서 미국의 동맹국인 한국이 통일 이후 친중국으로 기울어지는 경우, 세력균형에 상당한 전략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통일한국의 친중국화는 일본이 매우 우려하는 대외적 상황이다. 특히, 통일한국이 중국과 동맹관계를 체결하고 일본과 대치할 때, 이는 일본에게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며,<sup>76</sup> 미국의 전략적 우려마저 예상된다.

통일한국이 친중국화 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통일과정에서 일본은 물론 미국의 지지도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통일한국의 친중화에 대해 일본이 우려나 의혹을 가지지 않도록 대일 통일외교를 다음과 같이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통일과정에서 한국은 통일 이후에도 자유, 평등,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존중할 것임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한국은 통일 후에

75. 배정호 외,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 pp. 59~76, 229~286.

76. 위의 책, p. 234.

I
II
III
IV
V
VI
VII

도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국가들과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도모할 것임을 명백히 하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 한일 정책포럼이나 정책세미나 등을 통해서 통일한국의 가치에 대해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이는 통일 후에도 한국이 가치동맹인 한미동맹을 한층 성숙하게 유지할 것임을 의미하며, 아울러 일본과도 통일이전과 다름없이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둘째, 통일과정에서 한국은 한반도 통일을 일본의 국익과 조화를 이루고 통일편익의 공유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명백히 하여 통일한국의 친중화에 대한 일본의 경계나 우려를 불식시키는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한반도 통일과 한일의 편익’, ‘동아시아 평화·번영을 위한 한반도 통일과 한일 협력’ 등을 주제로 한일 양국 전문가들의 공동연구를 전개하고, 연구결과를 한일 양국에서 포럼, 세미나 등을 통하여 홍보하는 전략적 노력도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통일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에 대한 공공외교를 전개하여 일본 국민들의 한국에 대한 우호적 감정, 신뢰도 등을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한반도 통일과 한일의 편익’, ‘동아시아 평화·번영을 위한 한반도 통일과 한일 협력’ 등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관심과 우호적 기대를 높여야 할 것이다.

## 나. 통일한국의 핵무장에 대한 우려

현재,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의 개발과 도발적 언동을 일본 및 동아시아 지역의 안전보장에 최대의 리스크가 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사정권내에 일본 열도가 놓여 있



는 것을 우려하면서,<sup>77</sup> 북한의 핵무기가 소형화·경량화 되어 탄도미사일에 탑재될 경우, 동아시아 지역 및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sup>78</sup>

따라서, 일본은 통일과정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국제기구에서 관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sup>79</sup> 아울러 통일한국의 비핵화를 통일 지지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있다.<sup>80</sup>

일본이 통일한국의 핵무장을 우려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한국에서 민족주의가 고조되고, 일본을 가상 적국으로 간주할 경우, 일본에게는 최악의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sup>81</sup>

둘째, 통일한국의 핵무장은 일본의 안보체계에 근본적 수정을 가하게 되면서 일본의 핵무장을 초래할 수 있다. 동아시아에서 핵 도미노 현상을 야기하고 동아시아의 안보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일본은 통일한국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한국 주도의 통일에 지지를 보내지 않을 수 있다.

한국은 안보적 차원에서 대일 통일외교를 다음과 같이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였고, 이미 비핵보유국의 핵무기 보유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NPT(핵확산 금지 조약)의 가입

77. 首相官邸, 『新たな時代における日本の安全保障と防衛力の将来構想』(新たな時代の安全保障と防衛力に関する懇談會, 2010.8.27), p. 10, <<http://www.kantei.go.jp/jp/singi/shin-ampobouei2010/houkokusyo.pdf>>.

78. 日本 外務省, 『外交青書2014』, p. 4.

79. 배정호 외,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 p. 68.

80. 이노구치 다카시,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일본의 입장과 역할,” 배정호 외,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 및 역할』(서울: 통일연구원, 2011), p. 67.

81. 배정호 외,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 p. 233.

I
II
III
IV
V
VI
VII

국이므로, 한국이 주도한 통일한국은 핵보유를 할 수 없다는 ‘비핵 외교’를 신뢰를 구축해 가야 할 것이다. 즉, 한국은 통일 한국의 비핵무장에 관한 대일 신뢰외교를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과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의 위협에 상당히 유사한 인식을 하고 있고, 미국과의 동맹을 기반으로 확장핵억지에 의존하여 북한의 핵·미사일의 위협 등에 대해 대응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미일 안보대화, 한일 안보대화 등을 통해 통일과정에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의 처리, 통일 후 한국의 안보정책 등을 논의하면서 일본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즉, 한국은 통일에 대비한 한미일 안보대화, 한일 안보대화의 활성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한국은 한국 주도의 통일에 의해 북한 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이를 계기로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에 기여하는 안보공동체의 구축이 실현될 수 있다는 ‘통일 안보외교’를 한층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통일 안보외교’를 위해 ‘한반도 통일과 동아시아 평화구상’을 국제사회에 천명할 필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일본은 물론, 미국, 중국, 러시아 등과의 안보대화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 다. 대량 해상 난민의 발생과 일본으로의 난민 유입

북한지역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상황에 따라 대량 난민이 국경을 넘을 수 있고, 이중 일부는 해상으로 탈출할 수 있다. 특히 동해상의 난민은 조류를 타고 일본으로 유입될 수 있다. 이는 한반도 통일과 관련하여 일본이 우려하는 상황이다. 수만 명의 난민이 일본으로 갑자기 유입될 경우, 일본 사회에 치안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혼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동해상의 난민과 관련하여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 일 간의 협력방안을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해상에서 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동해상을 통해 일본으로 대량난민의 일부가 탈북할 경우에 대비하여 공해상에서 난민 구조에 대한 일본의 협력을 확보해 놓아야 하고, 공동훈련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일본 쪽에 가까운 공해상에서 북한군이 급변사태 등의 혼란기에 난민에 대해 총격을 감행하는 경우에도 대비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한일뿐 아니라, 한미일 전략적 공조에 의한 합동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한국은 해상을 통해 일본에 상륙한 탈북자들의 수용을 위하여 일본내 임시 보호소 및 수용소를 확보해 놓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일본과의 정책 협의를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 일본은 UNHCR(유엔난민기구)를 비롯하여 UNRWA(유엔팔레스타인난민구호기구), WFP(유엔세계식량계획), IOM(국제이주기구) 등에 상당한 기금을 제공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국제 인권기구의 협력과 지원을 확보하는데도 일본과의 전략적 협력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 라. 일본의 바람직한 통일한국의 미래상과 한일협력

일본이 바라는 통일한국의 미래상은 대체로 ‘동아시아의 평화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국가’이다.<sup>82</sup> 보다 구체적으로, 일본이 바라는 통일한국의 국가상은 1) 자유, 시장경제, 법의 지배 가치에 입각한 민주주의 국가, 2) 자본주의체제의 국가, 3) 지나치게 민족주의에 경도되지 않은 국가, 4) 주변국에 위협되지 않는 수준의 군사력 규모를

<sup>82</sup> 위의 책, p. 72.

I
II
III
IV
V
VI
VII

갖춘 국가 등이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과 안보대화과 협력, 경제 교류와 협력, 문화 교류와 협력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한일 간의 신뢰를 강화하고, 동아시아의 미래상에 대해 일본과 함께 논의하고,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즉,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번영을 위해 한국은 일본이 어떻게 협력하고 기여할 것인가에 대해 ‘Track 2’, ‘Track 1.5’ 수준의 미래 전략대화의 활성화를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요컨대,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 역내국가로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체제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양국이 중심이 되어 한반도 통일을 계기로 한 ‘동아시아 평화·번영’의 건설을 위해 미래 전략대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 V. 러시아의 대외전략과 한반도

---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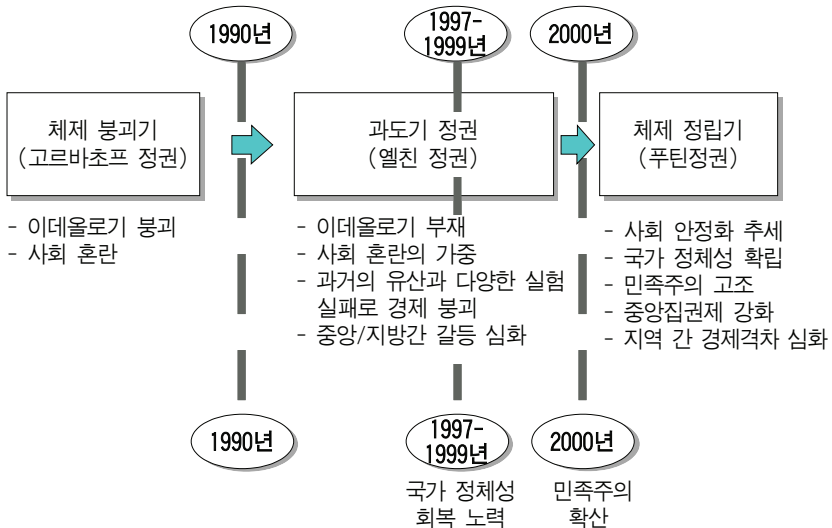
# 1. 러시아의 대외전략과 대북전략

## 가. 대외전략

### (1) 대외전략의 형성 배경

2000년 푸틴(Vladimir Putin) 집권 이후 러시아는 구소련 해체 이후 경험한 극심한 경제난과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강한 러시아의 건설’을 모토로 대내외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안보 환경 및 위협에 대해 분석하는 가운데 러시아의 대외전략의 목표를 ‘다극체제에 대비한 러시아권 블록 형성’으로 결정하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러시아의 이 같은 목표 설정에 결정적 단초를 제공한 것은 1990년대 후반에 발생한 일련의 대내외적 사건이라 분석된다.

● 그림 V-1 정권별 정치경제적 상황



I
II
III
IV
V
VI
VII

즉, 푸틴 집권 직전 1997년과 1999년 사이 러시아는 향후 러시아의 국가 정체성 및 안보관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일련의 사태를 맞이하게 된다. 1997년 NATO의 동구권 확대, 1998년 모라토리움 선언, 1999년 코소보 사태, 1999년 2차 체첸전쟁 등이 연이어 발생한 것이다. 가뜰이나 구소련 해체 이후 절망감에 빠져 있었던 러시아 국민들은 국가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서, 새로운 국가 정체성과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는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기 시작하였다. 결국 러시아 국민들은 자신들의 국가적 정서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대국주의(Bolshaya Derzhava Shovinism)에 기초한 국가 정체성 및 안보관을 민주화나 친서방 정책보다 우선순위로 선택한 것이다. 러시아 국민들의 전반적인 보수우경화 추세는 현재 푸틴의 중앙집권적 정치 체제를 수용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 표 V-1 러시아의 정책 우선순위

질문: 차기 대통령(메드베데프 이후)의 정책우선순위는 무엇인가?	
대외정책	러시아 국가이익을 위해 좀 더 강력한 정책 추진(76%)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인의 이익보호(15%)
국내 정책	사회질서확립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정책수행(68%)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책추진(26%)

출처: 러시아 중앙여론조사 연구소(2011.7)

이 같은 러시아 국민들의 보수우경화는 향후 정치적 안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즉, 러시아에서 2024년까지 푸틴의 집권을 의심하는 분위기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며, 푸틴 퇴임 이후에도 푸틴 세력의 집권 연장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러한 추세는 현재 러시아에 집권 여당을 대체할만한 다른 정치세력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 (2) 러시아의 대외전략의 요체

러시아는 대외전략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하부전략을 계획, 수행하고 있다.

첫째, 다극체제에 대비한 집단안보의 채택이다. 탈냉전기 신생 러시아연방의 안보환경의 특징은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NATO의 동진, 1999년 발생한 NATO의 세르비아 공습, 대테러 전쟁 이후 미국의 중앙아시아 진출, 미국의 동구권 MD(Missile Defence)기지 건설 등은 러시아의 안보 환경을 더욱 열악하게 하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안보환경은 러시아에게 새로운 안보전략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연방 출범 초기와는 달리 더욱 공세적인 군사전략을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구소련 시절부터 이어져 오던 집단안보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러시아의 집단안보 전략은 자국의 안보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도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 국가들과의 군사·안보 통합으로 인한 영향력 확대에 있다고 평가되며, 이는 러시아의 대외전략의 목표와도 일치한다. 러시아는 집단안보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집단안보조약기구(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CSTO)<sup>83</sup>와 상하이 협력기구(Shanghai Cooperation

<sup>83</sup> 현재 CSTO 회원국은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6개국이다.

I
II
III
IV
V
VI
VII



Organization, SCO)를 매개로 하여 지역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도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극체제에 대비하고 있다.<sup>84</sup> 그러나 러시아연방의 안보전략은 구소련과는 달리 세계적 패권을 포기하고, 자국의 안정을 최대한으로 도모하는 가운데 연방의 분리와 자원의 보호를 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둘째, 군사력 증강이다. ‘강력한 군대 없이는 강력한 러시아도 없다’라는 모토 아래 러시아는 군사력 건설에 매진하고 있으며, ‘무장계획 2020’을 통해 2011년부터 10년간 약 6천700억 달러에 이르는 전력 증강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아나톨리 세르듀코프 전 러시아 국방장관은 2010년 9월 20일 “러시아는 향후 10년간 약 6천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여 군 장비 현대화에 적극 나설 계획이며 이를 위해서는 미국 등 서방 무기체계와 관련한 기술 도입도 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 그는 이 같은 계획은 이미 국방부, 재무부, 경제부 등의 합의를 거친 사항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는 러시아 군 전력 현대화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이며, 방산 업체와 상당한 규모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러시아 측은 평가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러시아 국방부는 최신예 무기의 비율을 2020년까지 70%까지 높일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NATO 회원국, 특히 미국으로부터 첨단 기술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고 언급하여 주목을 끌고 있다. 이에 대한 세부사항으로 러시아 국방부는 무기 및 장비 현대화 계획에서 중요한 분야로 통신장비와 정밀 타격 무기체계를 중점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셋째, 극동 시베리아 개발이다. 러시아 정부는 러시아가 21세기 강국으로 다시 부상하기 위해서는 극동 시베리아 개발을 통한 경제 건설

---

<sup>84</sup> Azhdar Kurtov, “CSTO and GUAM as Element of the transformation the former USSR’s space,” *Central Azia and Kavkaz*, No. 3-4 (2008), pp. 302~304, 311~313.

이 우선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러시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극동 지역의 개발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푸틴은 3기 출범과 함께 대통령령에 의해 2012년 5월 극동개발부를 신설하고, 적극적인 극동 시베리아 개발 행보에 나서고 있다. 러시아 극동 지역은 풍부한 천연 자원 및 에너지 자

● 표 V-2 극동지역 자원 보유 현황

		매장량/보유량	지역분포	참고사항
산림자원		산림지: 2억7천 5백만 ha 총목재 보유량: 2백 8억m <sup>3</sup> ~ 2백 20억m <sup>3</sup> 로 추산	아무르주, 하바롭스크변강, 사할린주, 연해변강. 극동북부 지방은 미개발	목재외에도 모피, 버섯, 약초 등 풍부. 산림지는 구소련의 28%로 추정
수산자원		생물자원: 2,600만톤으로 추정(200해리 이내). 대구류, 청어류, 넙치류, 정어리, 연어, 꽂치, 오징어, 게 등 풍부	서베링해역 11%, 동 캄차트카 7%, 북쿠릴 18%, 오후츠크 46%, 동해 12%	담수자원: 레나강, 아무르강, 한카호(4,190km <sup>2</sup> )와 다수의 호수
에너지 자원	석탄	석탄(매장): 2백40억톤	南사하, 칸갈라스(사하공), 아무르주, 연해변강, 사할린주, 마가단주, 하바롭스크변강	고품질의 석탄이 사하공화국에 대량으로 매장
	석유/가스	석유(매장): 3억 3천만톤 가스: 1조 8천억m <sup>3</sup>	사할린주, 사하공화국	대륙붕에 상당량의 석유가스 매장 추정
광물 자원	귀금속	다이아몬드: 세계 2위 채굴량	금: 사하공, 마가단주, 아무르주, 캄차트카주, 하바롭스크변강 다이아몬드: 사하공 남부지역	하바롭스크 변강, 백금 매장
	철/비철금속	철광석: 44억톤 매장	사하공, 하바롭스크 변강, 아무르주	비철금속: 주석, 텅스텐, 안티몬, 납, 아연 등

I
II
III
IV
V
VI
VII

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넓은 면적에 비해 낮은 인구수, 지속적인 인구 유출, 열악한 인프라로 사회·경제 발전이 가장 더딘 지역이기도 하다. 러시아 중앙정부는 러시아 극동지역이 당면한 사회, 경제적 문제가 국가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연방정부 주도의 극동 시베리아 개발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sup>85</sup> 또한 러시아 극동은 한반도의 대륙진출의 관문으로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시베리아 철도(Trans Siberian Railway, TSR)-한반도 종단철도(Trans Korean Railway, TKR) 연결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러시아 극동지역은 우리의 대륙 진출 관문으로서 그 중요성을 더할 전망이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 역시 러시아 극동지역과 한반도를 연결하는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유라시아 시대의 국제협력 컨퍼런스’에서 유라시아 동부를 철도와 도로로 연결하는 복합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유럽까지 연결하자고 제안하면서 러시아 극동지역과의 협력을 강조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한 역내 전력망과 가스관, 송유관을 비롯한 에너지 인프라를 강조하였다.<sup>86</sup> 이 같은 제안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11월에 방한한 푸틴 대통령과 협의를 마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3) 러시아의 대외전략에 영향을 주는 요소

러시아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 21세기 초강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가능성은 경제문제의 해결 여부에 달려있다. 현재 러시아 지

---

<sup>85</sup> 러시아 중앙정부는 러시아 극동개발을 위해 2011년 11월 극동-바이칼 개발 기금조성법을 의결하였다.

<sup>86</sup> 『연합뉴스』, 2013년 10월 18일.

도부 역시 경제 활성화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 특히 2014년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서방의 제재가 지속될 경우 러시아 경제는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러시아 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부재하다는 것이며, 에너지 부문이 러시아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러시아 정부는 서방의 제재에 대한 대응책으로 제조업 분야, 특히 방위산업 분야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계획하고 있으나, 향후 러시아 경제가 순탄한 길을 걸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전문가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또한 미국이 셰일 가스과 오일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시작하면 러시아의 에너지 시장에서의 입지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EU 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의 에너지 영향력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V-2 러시아 석유·천연가스 매장지



출처: 러시아 연방지하자원이용청

I
II
III
IV
V
VI
VII

러시아의 경제 침체는 러시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군 전력 증강에도 차질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러시아의 경기 침체는 러시아 전력증강 계획을 수정시킬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 차질은 비단 러시아의 무장력이 발전하지 못한다는 차원을 넘어, 현재 러시아의 배타적 영향력 아래 있는 CIS 국가들에 대한 통제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 침체로 인한 군사력 증강 계획의 차질은 러시아의 대외전략 수행의 성패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러시아의 대외전략에 미칠 중요한 다른 요소로는 사회문제 해결 지연으로 인한 정권의 신뢰도 하락을 들 수 있다. 경제 침체로 인하여 연금 체계 및 사회보장 제도의 개혁이 지연되고, 부의 사회적 분배가 더욱 악화될 경우 현 정권의 정권 재창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 정부는 인구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 및 의료체계에 대한 예산을 확충하고 있으나, 출산율 증가는 여전히 완만한 상승에 그치고 있다고 러시아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경제 침체로 인해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지연될 경우 러시아의 대외전략을 지연시키는 하나의 원인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극동 시베리아 지역 개발의 난항도 러시아의 대전략 수행에 발목을 잡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전술하였듯이 러시아에게 극동 시베리아 개발은 러시아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커다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자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크림반도 정상화를 위한 예산이 책정되면서 상대적으로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 대한 투자 재원이 감소될 수밖에 없었다.

#### (4) 우크라이나 사태가 러시아의 대외전략에 미치는 영향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 결과 발생한 러시아의 크림 합병은 탈냉전 이후 미국의 일극주의에 대한 첫 도전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이 경쟁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중국조차도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의 크림 합병은 탈냉전 이후 초유의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그 이전에도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과 서방의 글로벌 정책에 대해 거부하고 반대하는 전반적인 기류는 있었으나, 이번 사태와 같은 직접적인 대응은 탈냉전 이후에는 처음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 같은 러시아의 국제 구도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은 결국 향후 지역 강국들의 배타적 영향력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가능하게 만든다. 즉, 중국, 러시아가 자국의 배타적 영향력을 인정받기 원하는 지역에서 국제사회의 결정에 강력히 반발할 경우 대응책이 미흡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CIS 지역에서의 러시아 영향력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사태를 통해 러시아는 자국의 의지를 확실히 주변국에 각인시키는 효과를 얻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CIS 국가들에 대해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면서 영향력 확대를 도모할 것으로 보인다. 구소련권 국가 중 탈러시아를 원하던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등은 조심스럽게 대러시아 정책을 재검토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더욱이 중도 노선의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은 러시아의 영향력을 절감하고, 친러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 보인다. 또한 러시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현재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EEU(Eurasian Economic Union, 유라시아경제연합)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러시아, 벨라루스, 카자흐스탄이 가입되어 있는 경제 연합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에 중도 성향의 국가들의 가입

I

II

III

IV

V

VI

VII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분석된다.

또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으로 인해 국제 현안 문제의 해결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란 핵문제 및 시리아 문제 해결에 있어 러시아가 서방과의 대립으로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문제 해결 과정에서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세르게이 라브로프(Sergei Lavrov) 러시아 외무장관은 인터뷰에서 ‘이란 핵협상을 우리의 명분 쌓기에 이용할 뜻은 없지만 미국과 EU가 우리를 그렇게 몰고 가면 여기서도 보복조치를 취할 것’이라 경고하고 있다. 특히 시리아 문제에 있어 러시아는 알 아사드(Bashar al Assad) 정권을 계속 지지하고 있어, 향후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러시아가 현재 상당히 공격적인 자세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하고 있으나, 러시아 역시 러시아가 추구하는 목표를 모두 관철시키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러시아가 굳이 미국 및 서방과의 극한 대립을 벌이면서까지 우크라이나 문제를 악화시키기에는 자국의 부담이 너무 크다고 분석된다. EU 역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자제하고 우크라이나와의 국경 부근에서 군대를 철수할 경우 러시아 측과의 화해를 도모할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은 우크라이나라는 짐 덩이를 하나 더 얹을 필요는 없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굳어진다면, 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를 EU 및 NATO에 가입시키고자 하는 의지는 상당히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은 당분간 러시아에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은 아직도 러시아의 크림 합병을 중요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단정하고 있으며, 부다페스트 양해각서를 위반하고 크림반도를 합병한 러시아를 미국이 용인할 경우 다른 악성 국가에게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 (5) 대외전략에 대한 내부 요인 분석

2013년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총리는 러시아 정부가 국내 총생산(GDP)의 5% 이상의 경제성장을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 2013년 러시아 경제는 단 1.3% 성장을 기록하였을 뿐이다. 이 같은 상황 전개에 대하여 러시아 경제 전문가들은 러시아 경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먼저 꼽고 있다. 즉, 러시아 경제 구조가 에너지 산업 분야에 편중되어 있으며, 새로운 성장 동력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경제 구조를 다각적으로 변화시키지 않으면 예상보다 경제 위기가 훨씬 빨리 도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같은 악조건 하에서 러시아 경제는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미국 및 서방의 경제제재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가뜰이나 어려움을 맞고 있는 러시아 경제가 사실상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즉,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제재가 가속화 될 경우 러시아의 경제 발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고 있어 흥미를 끌고 있다. 러시아가 비록 현재의 경제 구조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나,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없으며, 오히려 EU 국가들에게 부메랑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풍부한 자원과 천연가스를 이용하고, 특히 중국 및 남미 국가들과의 교역을 확대하면서 위기를 벗어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방의 경제제재 효과에 대해서도 포브스지(Forbes)는 러시아 경제의 성장률이 둔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상향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포브스지 칼럼니스트 마크 아도메니스는 많은 서방 정치인과 전문가들이 러시아 경제가

I

II

III

IV

V

VI

VII



‘붕괴 직전’에 있다고 믿고 있지만, 현실은 그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그는 러시아 경제가 얼마 못가 붕괴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세워진 서방의 모든 전략들은 실패로 돌아갈 수 있고, 최근의 러시아 경제 지표가 썩 훌륭하진 않지만, 결코 위기상황은 아니며 경제 전반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견해를 펴다.<sup>87</sup>

러시아 경제 전문가들은 제조업이 약한 러시아에서 수입을 대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정부가 제조업을 지원할 경우 러시아 경제 지표가 오히려 상승할 수도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이와 같은 주장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즉, 러시아에서 국내총생산(GDP)의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뜻밖에 산업 생산성이 증가하는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연초 루블화가 약간 평가절하된 것과 정부가 ‘수입대체 프로그램’ 차원에서 제조업을 지원한 덕분이다. HSBC은행의 예고르 가이다르 경제정책연구소는 벌써 3개월 연속 러시아의 산업생산량이 증가했다고 밝히고 있다. 가이다르 경제정책연구소의 연구 자료에는 “현재 수요 수준을 고려하면 이 정도 산업 생산성은 놀랍지 않으며 아직은 전반적인 경제상황과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생산량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밝혔다.<sup>88</sup> 투자회사 UFC IC의 알렉세이 코즐로프 수석 애널리스트는 8월 러시아 산업 생산량 증가는 크게 세 가지 요인에 기인했다고 지적했다. 첫째, 가스프롬과 중국이 가스공급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중국이 가스프롬에 250억 달러의 선금을 지급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중국으로 가는 가스관을 설치하려면 극동 지역 인프라에 공동으로 투자해야 하며, 이에 따라 지역 경제가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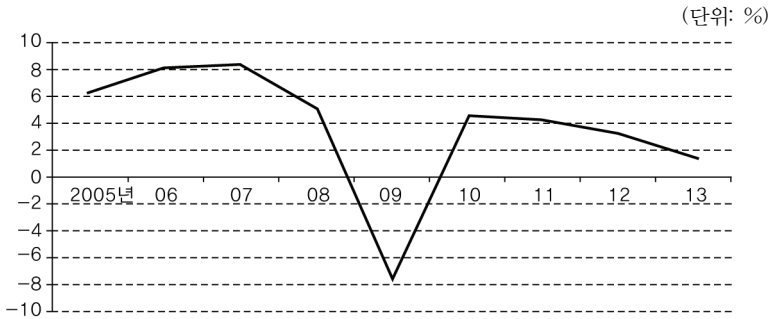
---

<sup>87</sup>- *Russiafocus*, July 2, 2014, <<http://russiafocus.ru/business/2014/07/02/44869.html>>.

<sup>88</sup>- *Russiafocus*, September 2, 2014, <[http://russiafocus.ru/society/2014/09/02/92\\_45471.html](http://russiafocus.ru/society/2014/09/02/92_45471.html)>.

화된다. 또 러시아 가스관 생산업체들이 이 초대형 프로젝트에 필요한 가스관을 제작하기로 함에 따라, 야금업(冶金業)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즐로프는 가스관 프로젝트가 GDP 성장률을 0.3~0.4% 더 끌어올리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둘째, 우크라이나가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러시아와의 계약을 거부함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우크라이나가 생산했던 군수물자를 생산할 러시아 제조업체를 모색하게 되었다. 그 결과 군수장비 수입을 대체하기 위해 국부펀드를 비롯한 많은 자금이 투입될 것이고 생산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수입품으로 대체해야만 하는 식품과 농산품의 생산량 증가 때문이다. 이로 인한 GDP 추가성장률은 0.1% 정도가 될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면 2014년 러시아 경제성장률은 0.9%가 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경제개발부는 애초 0%에 머물 것이라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9월에 상향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sup>89</sup>

● 그림 V-3 러시아의 경제성장률



출처: IMF(2013.10)

<sup>89</sup> Ibid

경제 문제와는 달리 정치적 상황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집권 3기 첫 1년 동안 푸틴의 지지율은 60%에서 52%로 하락했고, 이 같은 사실에서 미약하나마 변화를 짐작해볼 수 있다. 이는 푸틴으로 하여금 정권 강화를 위한 지지 계층의 결집과 반대 세력 및 중도 세력에 대한 새로운 정책을 실시할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푸틴 집권 3기의 위기의식은 대선 당시 반푸틴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발생하였다는 사실과, 모스크바에서는 푸틴의 지지율이 49%로 전국 최하위였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또한 모스크바에 있는 러시아 정교 성당 ‘구세주 성당’에서 푸틴 퇴진을 요구하는 노래를 공개적으로 부른 여성 핑크 그룹 ‘푸시 라이어트(Pussy Riot)’의 행량이 너무 과하다는 국내외의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와 같이 집권 1,2기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들었던 상황이 연이어 발생하자 푸틴 정부는 지지기반 강화를 위해 보수층의 결집을 시도하였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푸틴이 총리 시절 통합러시아당을 주축으로 만든 ‘전러시아 국민전선(Narod Front)’을 적극 활용한 사실을 들 수 있다. 이 단체에는 전국 1,800여 개의 사회단체가 가입하고 있으며, 2011년 총선에서 통합러시아당의 공천을 받아 국가두마(하원) 의원으로 선출된 238명 중 80명이 바로 국민전선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다. 푸틴은 향후 안정적 집권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애국심’과 ‘강한 러시아’를 갈망하는 러시아 국민들의 정서를 잘 활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향후에도 이들을 집결시킬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러시아는 서방세계에 현재보다 더 강경한 정책을 수행하는 가운데 ‘러시아의 자존심’을 부각시킬 것이며, 이는 대외정책이 바로 국내 정치로 순환하는 효과로 나타나길 바라는 러시아 집권세력의 의도로 평가된다.

푸틴에 대한 지지율이 답보상태를 보이던 시점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였고, 다시 한번 푸틴은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자신의 전략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었다. 크림 합병 이후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80%를 상회하는 가운데 일단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은 국내정치 카드로서는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러시아의 크림 합병이 단순히 크림반도가 러시아의 영토로 재귀속 되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탈냉전 이후 구축되었던 국제질서를 변화시키는 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들도 제기되고 있다. 즉, 푸틴정권은 ‘강력한 군사력 건설’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합의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군사력 건설에 매진할 수 있는 호기를 잡은 것이다.

#### (6) 러시아 대외전략 향후 전망

러시아는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현재의 대외전략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술하였듯이 푸틴을 위시한 친 푸틴 세력에 대한 지지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정치적 안정은 현재의 집권 세력이 현재의 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있다.

러시아의 극동 및 동북아 정책 역시 현재 상황을 잘 활용하면서, 향후에도 적극적인 정책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의 극동지역은 구소련 해체 이후에도 국경선이 변하지 않은 지역으로서 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보다 안보상황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북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으나, 북한 문제도 러시아에게는 외교적 카드로서 활용 가능한 외교적 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극동지역 개발을 통한 아태지역 진출 희망을 강력히 표출하며, 가스

I
II
III
IV
V
VI
VII

파이프라인 건설 등을 통한 역내 영향력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미국이 역내 헤게모니를 장악하고, 향후 점차 영향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이 현실이 된다면, 러시아는 역내 다자안보협력체 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일본이 미일동맹으로부터 점차 독자적 행보를 모색하는 시점을 다자안보협력체 구성의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향후 동북아 조정자 역할 수행을 목표로 할 것으로 분석된다. 결론적으로 러시아는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자 외교적 노력뿐만 아니라 자원을 통한 자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보인다.

## 나. 러시아의 대북전략

그간 북러관계는 2011년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김정일의 정상회담 이후 상당 기간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오히려 푸틴 대통령의 3차 집권 이후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 강화가 절실하다는 정책적 판단 아래 2013년 11월 서울에서 한러 정상 회담을 개최하였으며, 정상회담 이후 발표한 공동성명 중 북한 관련 조항들은 상당히 급진적인 것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가 북러 관계를 회복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어 흥미를 끌고 있다. 즉,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는 국제적인 제재 상황에 봉착하고 있으며, 북한은 시진핑 집권 이후 북중 관계가 과거와 같지 않자 이를 만회하기 위한 러시아와 북한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 측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북러 접근에 대해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는 기존의 대한반도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 (1) 러시아의 대북 전략적 목표

구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는 급격하게 하락한 영향력을 회복하기 위해 연방 출범 초기 ‘친서방 정책’을 포기하고 ‘전방위 외교’ 혹은 ‘실용 외교’를 추진하였다. 이 전략의 목표는 서구와의 관계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국제관계의 확장을 통해 다변화된 자율적 강대국 외교정책을 추구하고자 하는데 있었다. 따라서 러시아의 대북 전략 목표는 연방 출범 초기 급격히 약화된 영향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푸틴 집권 이후 2000년부터는 북러 간 실질적인 관계회복을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영향력 회복을 시도하였다. 러시아는 대북한 전략적 목표를 첫째,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상실한 자국의 영향력 확보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대북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둘째, 북한 급변사태시 러시아의 이익을 일정 정도 확보하는 정책적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나진항을 북한으로부터 50년간 임차하였으며, 러시아는 이를 통해 북한 급변시 한반도에 직접적인 개입 구실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러시아는 북한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통해 러시아의 아태 지역 진출 및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을 위한 교두보로 활용하고자 한다. 한반도 종단 철도 연결 및 북한 경유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 등은 러시아 극동지역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 정부의 이해관계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 (2) 러시아의 대북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러시아의 대북 전략을 결정하고 변화를 가져 올 수 있는 동인으로는 첫째, 러시아가 서방과의 대립으로 인해 외교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즉, 러시아가 미국 및 서방과의 관계가 악화되었을 경우 미국과 대

I

II

III

IV

V

VI

VII

립하고 있는 북한을 옹호하면서 자연스럽게 북한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둘째, 러시아의 보수 우경화 강화 요인이다. 러시아 국민들은 자신들의 국가적 정서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대국주의에 기초한 국가 대전략을 민주화나 친서방정책보다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 발생한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목도되었으며, 이는 북한에게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여 줄 수 있다. 셋째, 러시아가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는 상황이다. 그 동안 러시아는 한국을 경제적인 파트너로, 북한은 동북아에서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외교적 카드로 활용하는 정책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러시아는 최근 한국을 매력적인 국가라고 인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되며, 동북아에서 북한을 활용한 영향력 확대는 사실상 비효율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러시아의 인식 변화는 우리에게 유리한 국면을 제고하여 줄 수 있다.

### (3) 러시아의 대북전략의 변화

메드베데프 집권 이후 푸틴의 3기 집권 시기인 현재까지 러시아의 전향적인 대한반도 정책 변화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 2013년 11월 한러정상 공동성명에서 러시아가 평양의 독자적인 핵 및 미사일 구축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화학무기 금지 협정(Chemical Weapons Convention, CWC)에 대한 북한의 가입을 직접 촉구함으로써 중요한 정책 변화를 노정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2011년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 산하 세계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는 2020년경 북한은 내전을 겪으며, 2030년경 한국 주도의 한반도 통일이 달성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여 주목을 끌었다. 2010년경부터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한 러시아의 대한반도 안보관은 한러 정상회담 공동

성명과 한중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의 북한 핵문제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비교해보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2013년 6월의 한중 공동성명 중 북한 핵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보면 양측은 ‘유관(有關)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 안정에 심각한 위협’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이번 한러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을 직접 지칭하여 ‘평양의 독자적인 핵·미사일 능력 구축 노선용인 불가’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는 북한 및 북한 핵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은 중국의 입장과는 차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변화 조짐은 북한에 대한 회의와 러시아의 아·태지역 진출 및 극동 시베리아 발전을 위한 현실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스카야 가제타’는 2013년 11월 11일자 사설에서 러시아의 극동 및 시베리아 지역 개발과 아·태지역 진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러시아는 중국과의 협력을 유지하는 한편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야 한다는 사실을 게재 눈길을 끌고 있다.

● 표 V-3 한·러, 한·중 공동성명 내용

2013년 11월의 한·러 공동성명 일부 내용	2013년 6월의 한·중 공동성명 일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양의 독자적인 핵·미사일 능력 구축 노선 용인 불가</li> <li>•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획득 불가 강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관(有關)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 안정에 심각한 위협</li> </ul>

#### (4)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대북 접근

크림합병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는 미국 및 서방으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으며, 이에 러시아는 국제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자 한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이 미

I
II
III
IV
V
VI
VII



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대러 제재에 동참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러시아가 제한적으로 북한과의 관계 강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미국 및 서방의 대러 제재에 대한 여파로 한국을 압박하기 위한 외교적 카드로 북한으로의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 또한 시진핑 집권 이후 소원해진 북중관계를 다소나마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러시아로의 전략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즉, 러시아는 외교적 카드로서 북한을 활용하고, 북한은 경제적 실리와 국제사회에서의 지위 회복을 보장받기 위한 것으로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북러관계 개선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최근 경제협력을 포함한 북러 간 협력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하나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즉, 우크라이나 사태와 시진핑 집권 이후 변화하는 북러 간 협력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분야는 역시 경제협력 부분이라는 것이다. 러시아와 북한은 올 6월 양측 정부 간 ‘무역, 경제 및 과학기술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극동개발부 장관 갈루쉬카는 기자회견을 통해 2020년까지 양측 무역량이 현재의 10배인 10억 달러 정도로 확대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또 그는 현재 북한이 착수한 비즈니스 환경 조성에 러시아 투자자들이 실질적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단기간에 무역 거래량이 4~5억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최종 목표 거래량을 10억 달러까지 바라보고 있다고 공개하였다.<sup>90</sup> 뿐만 아니라 갈루쉬카 장관은 북한이 러시아 기업투자자들에게 장기 복수비자를 제공할 것과 핸드폰 및 인터넷 사용을 허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와 북한은 무역결제를 루블화로 하기로 결정하였다.<sup>91</sup> 올 6월부터 러시아 은행에 북한의 첫 계좌가 개설되었으며, 이는 양측의 무역에 있어서

<sup>90</sup>- *The Voice of Russia*, June 5, 2014.

<sup>91</sup>- *The Voice of Russia*, September 8, 2014.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직접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평가되며, 러시아 역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분석된다. 이와 함께 2014년 9월 4일 미하일 본다렌코 러시아연방 무역대표부 대표가 개성공단을 방문한 가운데 러시아 기업의 개성공단 진출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이타르 타스(ITAR TAS) 통신이 보도했다. 러시아가 개성공단 진출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초기 투자비가 상대적으로 북한의 다른 지역보다 높다 하더라도 한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수 있으며, 좋은 인프라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라 분석된다.

2014년 5월 5일 푸틴 대통령은 구소련 시절 북한의 채무 약 100억 달러를 탕감해주는 협약에 관련된 비준서에 서명했다. 서명된 비준서 내용에 따르면 전체 차관액 중 90%를 탕감하고 나머지 10%인 10억 9천만 달러는 향후 20년간 40회에 걸쳐 러시아 대외은행 계좌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렇게 탕감된 재정규모를 기반으로 향후 북한은 공식적으로 러시아의 원조 아래 보건, 교육, 에너지 분야 협력에 대한 지원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북러관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일은 역시 이수영 북한 외무상이 2014년 9월 30일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북한 외무상이 모스크바를 방문한 것은 4년 만의 일이며, 북한 외무상이 입각하면서 중국보다 러시아를 먼저 방문한 것 역시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되고 있다. 북러 외무상 간 회의에서 핵문제를 포함한 경제, 사회, 철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다수 러시아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한과의 관계는 통상적인 것일 뿐 러시아의 대북 전략이 수정된 것이 아니라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I
II
III
IV
V
VI
VII

이해관계가 그리 깊지 않으며, 현재 유럽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형성되고 있는 위협이 중차대하여 북한의 전략적 순위는 상당히 낮다는 것이다. 2010년부터 변화한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을 고려하여 볼 때, 향후에도 러시아는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대북 전략을 수립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 러시아는 북한과 안보 및 군사 협력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김정은의 초청 설도 사실무근이라고 최근 러시아 외교부는 밝히고 있다. 따라서 다수의 러시아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극동 시베리아 개발과 아태지역 진출을 고려한다면 북한과의 관계 개선보다는 한국과의 협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2. 주요 쟁점과 한국의 대러 통일외교 전략

러시아는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이 자국의 국익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러시아는 한국과 역사, 영토 등의 문제로 인한 불화의 가능성이 없으며, 경제적으로도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평가된다. 러시아는 한반도에서 한국 주도의 평화적 통일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가 21세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극동 시베리아 개발에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양질의 노동력과 기술 및 자본을 보유한 통일한국은 극동 시베리아 개발의 가장 이상적인 파트너가 될 수 있다.

### 가. 정상회담 후속 조치

미국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여파로 한러관계가 전반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크림 합병에 대해 정부 차원

의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또 미국의 대러시아 제재안에 대해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당분간 한러관계는 퇴보할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철도, 가스, 북한 지역 전력망 건설 사업 등 러시아의 절대적 협력이 필요한 박근혜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역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와 같은 환경 속에서 한러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난해 개최된 한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실행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13년 한러 정상회담은 그 어느 정상회담보다도 성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 러시아 외교관들에게도 확인되었다. 또한 러시아 외교관들은 한러 간의 관계를 정상회담 시점으로 되돌리기 위해서는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는 과거 한러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사항이 원활히 이행되지 않았으며, 3차 불곰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한러관계는 작년 정상회담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약간의 어려움은 겪고 있으나, 현재 한러관계는 러시아연방 출범 초기를 제외하고는 가장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분석된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점은 현재 한러관계가 상당한 진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현재 양국 간 좋은 분위기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대러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이에 따른 대응책도 함께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것이다.

#### 나. 6자 회담 재개에 대한 대비

이른 시간 내 6자 회담이 재개될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되고 있으나,

I
II
III
IV
V
VI
VII

러시아의 압박과 중국의 중재로 북한을 설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자 회담이 재개되고 러시아가 과거와 같은 행보를 보이지 않는다면 한국에게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나 러시아가 북한 정권에 위협이 되는 제재에는 반대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는 과거와 같이 북한을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전개될 경우 러시아의 국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러시아의 현실적인 판단이기 때문이다.<sup>92</sup> 러시아는 극동 시베리아 개발과 함께 국가 발전전략을 수행하는 가운데 한반도에서의 돌발 상황이 자국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가지고 있다. 러시아의 6자 회담에 대한 열망은 아직도 유효하며, 6자 회담에서 러시아의 합리적 판단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난 정상회담 공동 선언문의 합의를 준수하도록 하는 한편 북한 핵이 러시아에도 위협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시켜야 한다. 실제 러시아는 북한의 은하 3호 발사 이후 북한의 탄도 미사일이 극동지역에 추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를 대비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다. 한러 군사협력 강화

군사협력은 고도의 정치적 관계를 수반하는 동시에 국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국방부 및 합참, 각 군은 큰 틀에서 군사협력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방부, 합참, 각 군의 대러시아 정책 수행에 필요한 네트워크 형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또한 한러 국방부 간의 이견이 발생하였을 때 군사분야에 대한 대러 설득이나 이해 조정 등에 합참이나 예하 각 군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검토해 볼 필요

---

<sup>92</sup> *Russiafocus*, November 21, 2013.

가 있다. 또한 대러시아 군사협력의 당위성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에 따라 대러 군사협력의 목표와 수준을 설정해야 한다. 러시아연방과의 군사협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러시아 측이 제시하는 요구의 일부를 우리 측이 선제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도 필요하다. 단순히 러시아연방이 주변 열강이기 때문에 군사협력이 필요하다는 논리에서 벗어나, 국방부 입장에서 러시아연방의 중요성을 중장기적으로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2014년 상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연기된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의 방한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러시아 측 군 관계자들은 쇼이구 장관의 방한 연기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대러제제의 일환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불식도 필요한 상황이다. 또 2013년 10월 한러 국방차관 회담에서 가서명 된 ‘한러 군사협력 협정’의 체결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어 쇼이구 장관의 방한을 우리 측이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라. 북한 핵문제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러시아의 협조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실리적 차원에서 한반도 정책 변화를 조심스럽게 모색하고 있던 러시아가 미국과의 갈등이 깊어질 경우 북핵 문제 해결과정에서 정치적 고려를 할 가능성도 있다. 러시아는 그간 정치적 고려에 의해 북한을 옹호하는 자세를 취하여 왔으나 최근 실리주의에 입각한 한반도 정책을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러시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미 간 공조를 구실 삼아 이전과 같은 북한 옹호 정책으로 회귀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

I
II
III
IV
V
VI
VII

핵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러시아가 북한의 입장을 옹호한다고 보기 어렵다. 일례로 2014년 10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북러 외무상 회의에서 라브로프 외무상은 “핵문제에 대해 서로 상이한 입장을 확인하였다”라고 밝혔다.<sup>93</sup>

오히려 한국이 유의하여야 할 점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북한의 핵 폐기에 대해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원만히 해결되지 못할 경우 북한의 핵 폐기를 위한 대북 협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구소련 해체시 핵 폐기 대신 안전보장을 담보 받았던 우크라이나가 결국 안전보장을 받지 못한다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안전보장을 결코 신뢰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북한은 이번 사례를 보면서 핵을 포기할 경우 오히려 자국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핵 폐기를 대가로 한 안전보장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줄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 마. MD 체제 편입

우리가 미국 및 일본의 MD계획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러시아는 미국의 MD계획에 가장 심하게 반발했던 국가이며, 미러관계가 가장 악화되었던 시기 역시 미국이 동구권에 MD 기지를 설치하였을 때였다. MD계획은 미국이나 일본의 입장에서 방위체계지만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공격적인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MD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고수할 뿐 아니라, 선불리 미국과 일본의 MD 구축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된다.

---

<sup>93</sup> *Russiafocus*, October 1, 2014, <[http://russiafocus.co.kr/news/2014/10/01/1\\_45705.html](http://russiafocus.co.kr/news/2014/10/01/1_45705.html)>.

주한미군 기지에 사드를 배치하는 문제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 러시아 정부는 이미 공식적으로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또 러시아 정부는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이 “북한의 미사일 요격을 위해 사드를 배치할 계획은 없지만 주한미군이 자체적으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고려할 수 있다”라고 한 발언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2014년 7월 24일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한반도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이는 한국이 미국의 MD체제에 참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필연적으로 동북아 군비경쟁을 가속화 시키며 역내 안정을 해칠 것이라고 밝혔다.<sup>94</sup> 비록 한국과 주한미군이 북한 미사일에 대한 방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러시아는 크게 수긍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러시아의 군사적 대응도 한국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러시아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러시아는 동구권 MD시스템 배치에 대한 대응으로 칼리닌그라드에 단거리 전술 미사일 복합체 ‘이스칸데르-M’을 배치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스칸데르-M은 사거리가 480km로 레지코보 미군 기지까지 요격할 수 있으며, 정밀유도 미사일로서 어떤 대공방어 및 미사일방어 무기로도 요격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다.<sup>95</sup>

또 다른 억지책으로는 2018년 실전 배치 예정인 ‘사르마트(Sarmat)’ 개발을 들 수 있다. ‘사르마트’는 핵탄두 10개를 탑재할 수 있고 북극점

<sup>94</sup> *The Voice of Russia*, October 18, 2014, <<http://korean.ruvr.ru/news/2014-10-18/2788600072/>>.

<sup>95</sup> 이스칸데르는 러시아로 알렉산더 대왕을 뜻하며, 비행 궤도를 예측할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I
II
III
IV
V
VI
VII



뿐만 아니라 남극점도 통과해 목표물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 이 미사일이 시베리아에 배치되면 요격 미사일 SM-3을 탑재한 지상 및 해상 이지스 시스템 등 어떤 MD시스템도 붕괴시킬 수 있다고 러시아 언론은 분석하고 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진행된다면 러시아는 한국에 배치된 사드를 목표로 위와 같은 무기체계를 극동지역에도 배치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따라서 사드의 한국 배치는 우리가 더욱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 바. 남북러 3각 경제 협력 추진

러시아는 남북한 및 러시아 간 3각 경제협력이 러시아의 경제·통상 이익의 확대는 물론 대한반도 외교 및 안보 이익의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남북한 지도자와의 회합 때마다 3각 경제협력의 실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러시아의 이 같은 주장을 적극 수용하고, 수차례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3각 경제협력 방안을 본격적으로 러시아와 협의하는 한편 북한에게도 당위성을 인식하도록 노력했다. 그러나 북한은 3각 경제협력이 경제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나 체제 유지에는 악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고 이를 수용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은 북한 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고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있을 경우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즉, 북한에 대한 전력 및 가스 공급 등에 대해 러시아는 상당히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의지가 반영될 경우 그 효율성은 더욱 증대할 것으로 분석된다.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의 가장 좋은 예로 ‘철도 연결 사업’<sup>96</sup>과 ‘가스

관 연결 사업'을 들 수 있다. 현재 러시아는 북한의 '철도 현대화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총 3,500km 길이의 철도 건설로서, 기존의 철도 복원 및 새 철도를 건설하게 되며, 사전 평가에 따르면 총 250억 달러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한국에서 유럽으로 운송 시간을 현격히 단축시키게 될 TSR-TKR 사업 실현의 가능성을 한층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러시아 측은 기대하고 있다. 북한과 러시아는 이미 러시아 하산에서 북한 나진까지 연결하는 철도 복구 사업을 완성했으며, 동시에 나진항에 다기능 터미널을 설립했다. 이는 러시아-북한 경제무역뿐만 아니라, 북한-남한 경제무역에 있어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러시아는 분석하고 있다.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실행될 경우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의 현실성도 더욱 증가할 것이다. 한반도를 통과하는 가스관 건설 사업과 전력망 구축 사업 등은 현재 중단되어 있으나, 철도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다시 회담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러시아 측은 보고 있다.<sup>97</sup>

<sup>96.</sup> *The Voice of Russia*, October 21, 2014. 10월 21일 평양에서 프로젝트 실행 준공식이 거행되었으며, 사전 평가에 따르면 전체 250억 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sup>97.</sup> *Ibid*.

# VI. 한반도 통일 편익과 우려: 아·태지역 군사·안보적 세력균형의 관점에서

---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1. 아·태지역 군사·안보 질서 개황

냉전이 종식된 지 25년이 지났지만 아·태지역은 여전히 냉전의 유산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과 달리 동 지역에는 효율적인 다자 안보 협력체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지역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과 경제적·군사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간의 지정학적 대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냉전 시대 미국과 소련의 글로벌 차원의 양극 대립이 냉전 종식 후 아·태지역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양극 대립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공간이다.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자국이 주도하고 있는 안보질서(security order)를 유지하기 위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양 동맹의 연계를 시도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유지하고 있는 이른바 ‘중심축과 바퀴살 동맹체제(hub and spoke alliance network)’의 북방축(northern anchor)이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아·태지역 동맹 체제 강화를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봉쇄정책의 일환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같은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대립의 맥락에서 중국은 북한을 해양세력의 대륙공략에 대한 ‘완충지역(buffer zone)’의 역할을 감당하는 ‘전략적 자산(strategic asset)’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중국에게 ‘책무(liability)’로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안보적 측면에서 북한 편향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이로써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 대 북중 간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동북아에서의 미중 양국 간 지정학적 대립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양국 간 세력 대결과 맞물리면서 한층 심화되고 있다. 최근 중국이

I

II

III

IV

V

VI

VII

동남아시아 일부 국가와 남중국해에서 영토 분쟁을 재점화하고, 이에 대응하여 미국이 해당 국가들과 군사·안보 협력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특히 미국은 필리핀 및 태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있고, 싱가포르 등 기존의 미국에 우호적인 국가들과의 군사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 미얀마 등 과거 적대적이었던 국가와도 안보 관계를 개선하고자 적극적인 행보를 취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캄보디아, 라오스 등 저개발 국가에 대한 대규모 경제 원조를 통해 이들 국가들이 동남아 지역에서 중국의 이익을 대변하도록 유인하고 있다. 한편 러시아는 자국의 경제발전 및 중앙아시아에서의 영토분쟁에 천착하면서, 아·태지역에서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복원하고 있다. 일례로 양국은 2003년부터 SCO의 틀 속에서 수행해오고 있는 다자 군사훈련 외에, 2012년부터는 ‘해상연합’이라 명명된 대규모 군사훈련을 매년 서해, 동중국해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한반도를 위시한 아·태지역 전반에서 미중 간 대립구도가 공고화된다면, 아·태지역 안보 질서는 역내 경쟁이 심화되는 ‘도구적(instrumental)’ 질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반도 통일은 동 지역에서 ‘규범-계약적(normative-contractual)’ 질서를 태동시킬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sup>98</sup> 통일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건설적, 비판적, 미래 지향적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면, 동북아 지역

---

98. ‘도구적 질서’는 역내 국가 간 대립적 경쟁으로 특징되어지는 질서를 지칭하는 반면, ‘규범-계약적’ 질서는 분쟁 해결 및 예방에 제도적 기제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질서를 지칭한다. ‘도구적 질서’와 ‘규범-계약적 질서’에 관해서는 Muthiah Alagappa, “The Study of International Order: An Analytical Framework,” M. Alagappa (eds.), *Asian Security Order: Instrumental and Normative Featur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3), pp. 33~69 참조.

에서는 한미일 대 북중 간의 ‘적대적 세력균형(adversarial balance of power)’ 구도가 완화될 수 있다.<sup>99</sup>

그러나 한반도 통일이 역내 안보 질서의 발전적 공진을 견인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시각도 상존한다.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반도 통일은 한국의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를 낮추게 되어, 한국이 중국에 안보적으로 경도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계속 주둔하게 될 미군과 국경선을 맞대어야 하고, 주한미군이 미국의 최첨단 무기체계로 무장한다면 중국의 안보는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 양국의 이러한 우려가 불식되지 않는 한, 양국은 한반도 통일에 유보적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통일한국이 가져올 편익을 강조하는 한편, 주변국들의 통일비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이에 부합하게 통일외교의 정책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고는 먼저 아태지역의 군사·안보 세력균형과 관련하여 한반도 분단이 초래하고 있는 분단 비용과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편익을 제시한다. 이어 예상되는 통일편익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 등 역내 ‘이해 상관자(stake-holders)’들이 세력균형의 관점에서 한국 주도 통일에 대해 우려하는 바를 검토하고, 이를 대한 대응 논리를 전개한다.

---

<sup>99</sup> ‘적대적 세력균형’에 관해서는 Richard Little, “Decembonstructing the Balance of Power: Two Traditions of Thought,”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5, No. 2 (April, 1989), p. 88 참조.

I
II
III
IV
V
VI
VII

## 2. 아·태지역 군사·안보적 세력균형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 분단 비용과 통일편익

### 가. 분단 비용

한반도 분단의 고착은 미국과 소련 간 지정학적 대립의 부산물이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이 체결된 1953년 직후, 한국의 이승만 정부는 통일을 위해 한국전쟁의 재개도 불사하고자 하였다. 다시 한국전쟁에 연루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미국은 한국을 만류하기 위해 한국에 안전보장을 공약해야 했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북한의 군사적 침략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이 절실하였던 바, 한미동맹의 체결은 양국의 실익을 충족시키기 위한 접점이었다.<sup>100</sup> 한편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분쟁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1961년 7월 소련과 「조-소 우호협조 및 호상 원조조약」, 중국과 「조-중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동북아 지역에서는 한미일 대 북중러 간의 군사·안보적 대결 구도가 형성되었다. 물론 중국과 소련 간 분쟁이 노골화되고 미국과 중국이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북중러의 북방 삼각 체제가 완화되지만, 냉전 기간 양 진영 간 ‘적대적 세력균형’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냉전의 종식 후에도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 간의 지정학적 대립은 지속되고 있다. 미국은 아·태지역에서 자국 주도 동맹 네트워크를 강화시키고 있는데, 동북아 지역도 예외가 아니다. 특히 미국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 및 핵 개발에 대항하여 한국에 확장역지(extended

---

<sup>100</sup>- Victor Cha, "Powerplay: Origins of the U. S. Alliance System in Asia," *International Security*, Vol. 34, No. 3 (Winter 2009/2010), pp. 158~196.

deterrence)를 제공하고 있다. 한반도에는 2만 8천여 명의 미군이 상주하고 있으며, 한미 간 정기적 군사훈련, 긴밀한 정보교류 등 안보협력이 공고하다. 한편 미국은 한미동맹의 영역에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의 역할을 추가하려 하고 있다.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 역내 비전통 안보 의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용성(strategic flexibility)’ 확보가 필요하다. 미국은 대 테러전, 중동 지역에서의 연루, 자국의 재정난 등으로 인해 동맹국이 특정위협에 대한 대응에 있어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미국이 지원하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분업구조(division of labor)가 확립된다면, 미국은 아태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미군의 자산을 비전통안보 의제에 대한 대응에 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전략은 미일동맹의 강화에도 투영되고 있다. 일본은 자국의 ‘보통국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위대의 집단안보 차원의 무력 사용을 허용하였고, 일본이 역내안보 의제에 있어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미국은 이를 환영하였다. 아울러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연계를 추구하고 있다. 현재 일본 정책결정자들의 국수주의적 행위로 인해 양국의 민족감정이 고조되어 있기 때문에 동맹의 연계가 담보상태에 있으나, 미국은 이를 지속적으로 추동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동맹 강화 및 연계 시도가 북한에 대한 억지력 강화 및 비전통안보에 대한 대응만을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 미국이 동북아뿐만 아니라 동남아 및 오세아니아 지역에서도 역내 국가와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호주 북부 다윈(Darwin) 지역의 미 해병대 순환 배치가 상징하는 것처럼 미국과 호주의 동맹은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기존의 모호성 유지

I
II
III
IV
V
VI
VII



전략에서 벗어나 남사군도 영토 분쟁지역이 미국과 필리핀 동맹조약의 관할 범위에 속함을 명확히 하였다. 미국은 필리핀 및 태국과 동맹의 테두리 안에서 정규적 군사훈련을 실시해 왔는데 최근에는 이를 다자가 참여하는 대규모의 군사훈련으로 확장하여 수행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동북아에서의 동맹 강화가 타 지역에서의 동맹 강화와 연동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중국을 포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한다. 즉, 미국의 아·태지역 재균형 전략의 핵심에 미국 주도 동맹 체제의 강화가 있는데, 미국 주도 동맹들은 비전통안보에 대한 대응을 명분으로 점증적으로 ‘지역화’되고 있다. 중국은 미국이 ‘지역화’를 표면적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중국에 대한 봉쇄의 동맹 네트워크를 강화시키고 있다고 판단한다.<sup>101</sup>

종합하자면 미국 주도 동맹체제의 강화 및 지역화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인식 차가 심화되고 있는데, 그 중심에 한미동맹이 자리 잡고 있다. 즉, 한반도 분단은 동북아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에서 ‘적대적 세력균형’ 구도가 해소되는데 있어 장애요인이다.

한편 한반도 분단은 아·태지역에서 효율적인 다자주의가 태동하기 위한 신뢰의 규범 및 지역 정체성이 형성되는데도 제약요인이다. 아·태지역은 다자안보협력체가 발전되어 있는 유럽과 달리 효율적인 다자협의체가 부재하다. 이는 무엇보다 아·태지역 국가들이 유럽 국가들에 비해 국력, 문화, 경제력 등에서 이질성이 높고, 역내 국가들 사이에서 역사적 갈등의 앙금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부 국가들은 영토분쟁에 휩쓸려 있기도 하다. 아울러 중국과 미국이

---

<sup>101</sup> 박재적·김동수, “비전통안보의 부상과 아·태지역 미국 주도 동맹 체제 강화: 한미동맹의 함의,” 『국제문제연구』, 제14권 1호 여름호 (국가안보전략연구소, 2014), p. 68.

아·태지역 다자안보 협력에 관해 상이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점도 동 지역에서 효과적인 다자안보 협력체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미국은 호주, 뉴질랜드, 인도와 같은 동아시아 역외 국가도 포함되는 포괄적 다자주의를 주창하고 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이 배제되고 동아시아 국가만 참여하는 제한적 다자주의를 선호해오다가, 최근에는 ‘신 아시아 안보관(New Asian Security)’을 주창하면서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국가 등이 포함되는 범 아시아 지역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물론 중국의 새로운 다자안보 구상에서도 미국은 배제되어 있다.

역내에서 효율적인 다자협의체가 태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이 ‘영합(zero-sum) 관계’에 입각한 안보관을 지양하여야 한다. 이에 착안하여 중국은 ‘신형대국관계’를 제안하고 있다. 중국의 신형대국관계는 강대국과 차상위 도전국의 국력차가 좁혀지면 양국이 전쟁에 휩쓸리게 된다는 서구 세력전이이론을 부정하면서, 패권국 미국과 도전국 중국이 서로의 이익을 존중하며 협력적 질서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북한의 핵문제와 인권탄압은 중국이 역내에서 신형대국관계와 같은 협력적 담론을 주도하는데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북한은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으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고, 2013년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제3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북한의 일련의 공세적 행위에 대응하여 한국과 미국은 한미동맹의 테두리 안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는데, 중국은 미국의 항공모함이 훈련 차 서해 또는 동해에 배치되는 것을 강력히 비판하였다. 미국과 중국의 지정학적 대립의 관점에서 북한을 여전히 자국의 ‘전략적 자산(strategic asset)’으로 인식하는 중국은 북한의 공세적 행위에 대한 편향적 두둔 또는 방관의 태도를 견지하였다. 또한 중국은 중국으

I
II
III
IV
V
VI
VII

로 탈출한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에 침묵함으로써 인류 보편적 규범을 수호하는 대국의 이미지를 창출해내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후원국으로서 중국의 이미지는 아태지역에서 중국이 역내 규범 및 다자 정체성 형성을 주도해나가는데 있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효율적인 다자주의가 태동하기에는 척박한 아태지역 안보환경을 고려할 때 소다자주의가 양자와 다자주의 사이에서 교량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소다자주의는 ‘소수의 국가가 일정 수준의 제도화의 틀 속에서 특정 이슈를 다루기 위해 연계되는 것’으로 정의된다.<sup>102</sup> 소다자협력을 통해 역내 국가들은 효율적인 다자안보협력이 태동하는데 필수적인 신뢰를 구축해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소다자주의는 기존 동맹이나 상당 수준의 안보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들 간에 결성되는 경향이 큰 바, 아태지역에서는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sup>103</sup> 그러므로 중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소다자협력을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전선의 구축으로 인식한다.

한반도 분단은 소다자주의가 활성화되는데 있어 장애요인이다. 무엇보다도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 회담의 정체는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남기고 있다. 2003년 6자 회담이 결성될 당시에는 6자 회담이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토대로 아태지역의 다양한 안보 의제를 다루는 확장된 다자협력체로 발전하리라는 기대가 팽배했었다. 그러나 6자 회담은 부침을 거듭하다가 현재는 정체 상태에 있으며 북핵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6자 회담 자체를 정체시킬뿐만 아니라 한미중 소다자협력의 발전도 가로막고 있다. 의장국으로서 6

---

<sup>102</sup> 박재적,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최진욱 외,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13), p. 80.

<sup>103</sup> 위의 글.

자 회담을 회생시키려는 중국이 한미중 삼자 협의체가 6자 회담의 영역과 중첩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국의 참여한 지정학적 대립으로 인해 미국 주도 동맹국들만의 소 다자적 연계뿐만 아니라, 점증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역내 국가들만의 소다자주의도 효율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조합의 소 다자협의체에서 미국의 동맹국들은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고 중국은 북한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고, 양 진영이 서로에 대해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sup>104</sup>

## 나. 통일편익

한반도 통일이 역내 안보 질서의 측면에서 초래할 편익과 비용은 통일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가에 지대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다. 논의의 전개를 위해 본고는 한국이 주도하는 평화 통일을 상정한다.

한국 주도의 통일은 아-태지역 안보 질서가 ‘영합’의 관계로 특징지어지는 ‘도구적 질서’에서 ‘규범·계약적 질서’로 변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반도 분단은 동북아에서 미국 주도 세력과 중국 주도 세력 간의 ‘적대적 세력균형’ 구도를 형성해 가고 있다. 통일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건설적, 비판적, 미래 지향적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면, 한반도 통일로 인해 적어도 동북아 지역에서는 한미일 대 북중 간의 ‘적대적 세력균형(adversarial balance of power)’ 구도가 완화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근거 제시는 다음 절에서 전개한다.

<sup>104</sup> 위의 글.

또한 한반도 통일은 역내 다자 안보 협력의 증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 군사 대치의 해소와 통일과정에서 축적될 관련국 간의 신뢰가 다자안보협력을 추동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소 다자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다. 앞서 한미중 간의 소 다자협약이 6자 회담이 유명무실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중국의 소극적 태도로 활성화되지 못함을 지적한 바 있다.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동아시아 다자협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한미중, 한중일, 미일중 같은 다양한 조합의 소다자주의 협력이 지정학적 고려에 구애받지 않고 탄력을 받을 수 있다. 소 다자협력을 통해 역내 국가가 협력의 경험을 축적하고 신뢰를 쌓아 간다면 아·태지역에서도 ‘규범·계약적 국제 질서’가 형성될 수 있다.

한반도 통일은 글로벌 차원에서 핵 비확산 체제가 유지되는데 기여할 것이다. 북한의 핵 개발은 핵 비확산 체제에 대한 확연한 도전이다. 만약 통일의 협상 단계나 통일과정 또는 통일 후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된다면, 통일한국은 국제사회가 ‘핵 없는 세계(nuclear-free world)’를 향해 나아가는데 있어 모범적 선례가 된다.

물론 통일한국이 북한이 보유하고 있던 핵무기를 계승하여 핵보유 국가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반도 통일로 민족감정이 지나치게 고취되어 한국에서 핵무장 주장이 일시적으로 주목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주도 통일은 미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면밀한 협력과정에서 이루어질 것이 자명하기에, 통일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 특히 한국 주도 한반도 통일이 앞서 언급한 통일편익을 발생시켜 역내에 ‘규범·계약적 국제 질서’가 형성된다면, 아·태지역에서의 핵확산을 반대하는 역내 국가들이 핵 비확산과 반확산을 위한 예방적 제도를 가동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 3. 한국주도 통일에 대한 세력균형 차원에서의 우려와 대응 논리

앞 절에서 분단된 한반도를 중심으로 미국 주도 세력과 중국 주도 세력 간의 ‘적대적 세력균형’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데, 한국주도로 통일이 이루어지면 북한-중국-러시아와 미국-한국-일본의 ‘영합적’ 대립이 완화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동북아시아 군사-안보적 세력균형의 차원에서 한국 주도 한반도 통일이 가져올 편익에 대한 의구심도 존재한다.

첫째, 통일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함에 따라 중국-러시아 대 통일한국-미국-일본의 ‘적대적 세력균형’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만약 첨단무기로 무장한 주한 미군이 중국과의 국경지역에 배치된다면 통일한국이 중국 봉쇄의 전초 기지가 된다.

둘째, 미국은 북한 붕괴로 인해 직접적 안보위협이 사라진 통일한국이 중국에 경도되어 한미동맹이 문서상의 동맹으로만 존재하거나 해체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미국과 일본을 한 축으로 하고 통일한국-중국-러시아를 다른 축으로 하는 또 다른 형태의 ‘적대적 세력균형’ 구도가 태동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우려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 논리를 제시한다.

#### 가. 통일한국-미국-일본 대(對) 중국-러시아?

통일한국과 미국이 동맹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통일한국-미국-일본을 한 축으로 하고, 중국-러시아를 다른 한 축으로 하는 ‘적대적 세력

I
II
III
IV
V
VI
VII

균형' 구도가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는 기우에 지나칠 공산이 크다. 지속되는 한미동맹의 주 기능이 양국이 공통으로 인식하는 위협국에 대한 '균형(balancing)'에 맞추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군사 동맹은 일반적으로 균형을 목적으로 체결된다. 그러나 동맹은 균형 외의 다른 목적으로도 체결될 수 있으며, 균형을 목적으로 체결된 동맹도 상당 기간 지속되면서 균형이외의 기능을 창출해 내기도 한다. 일례로 제임스 마로우(James Morrow) 교수는 '비대칭동맹(asymmetrical alliance)'의 상당수는 상위 동맹국(senior ally)이 하위 동맹국에게 '안보(security)'를 제공하고 '자율성(autonomy)'을 담보받기 위해 체결된다고 주장한다.<sup>105</sup> 또 다른 예로, 제도주의의 관점에서 냉전의 종식 후 'NATO'의 존속을 연구하고 있는 학자들은 NATO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제도적 및 관념적 특성을 지닌 독립된 기구(institution)로 기능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NATO가 냉전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존속하고 있는 이유는 유럽 국가들이 역내 안보 의제를 다루는데 있어 새로운 안보협력기구를 창설하기보다는 검증된 기구인 NATO를 활용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sup>106</sup>

학계에서는 유럽의 맥락에서 전개된 NATO의 존속에 관한 연구에 기반을 두어, 탈 냉전기 아·태지역에서 미국주도 동맹의 존속에 관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동북아의 경우 현재 북한의 위협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에 '존재이성'을 제공하고 있지만,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

<sup>105</sup>- James Morrow, "Alliances and Asymmetry: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 Aggression Model of Allia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5, No. 4 (November 1991), p. 912.

<sup>106</sup>- John Duffied, "NATO's Functions after the Cold War,"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09, No. 5 (Winter 1994/1995), pp. 763~787.

유지하고 있는 거대한 동맹 체제 자체의 존속은 ‘위협 중심적(threat-centric)’ 설명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물론 현실주의자들은 미국 주도 동맹체제는 여전이 위협 중심이며 실질적 위협국이었던 소련이 잠재적 위협국인 중국으로 대체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즉, 미국 주도 동맹체제는 중국의 부상이 초래할 잠재적 위협을 ‘헤징(hedging)’하기 위해서 존속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잠재적 위협국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선호하는 역내 질서를 유지하는데 동맹이 주요한 수단으로 기능한다면, 동맹국들은 기존의 동맹을 일종의 ‘안보보험(order insurance)’을 목적으로 지속시킨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다.<sup>107</sup>

한편 냉전 초 동맹 형성의 ‘존재이성’이 되었던 소련이 붕괴했음에도 미국 주도 동맹 네트워크가 존속하는 이유를 동맹의 제도적 및 관념적 요인에서 찾는 연구도 활발하다.<sup>108</sup> 다자주의가 태동하기 어려운 척박한 안보 환경에서 기존의 동맹 네트워크가 발전시켜온 제도적 및 관념적 요소들이 아-태지역 안보 의제를 다루는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한국이 미국과 유지하게 될 동맹은 중국이 우려하듯이 균형 또는 헤징을 위한 동맹이라기보다는, 한반도 통일 후 초래될 수 있는 불확실성(uncertainty)에 대비하기 위한 ‘안보보험’적 성격을 띠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도 통일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북한의 붕괴로 인

---

<sup>107</sup>- Jae Jeok Park, “The Persistence of the US-led Alliances in the Asia-Pacific: an order insurance explanation,” *International Relations of Asia-Pacific*, Vol. 13, No. 3 (July 2013), pp. 346~348.

<sup>108</sup>- Peter Katzenstein and Rudra Sil, “Rethinking Asian Security: A Case for Analytical Eclecticism,” J.J. Suh, Peter Katzenstein and Allen Carlson (eds.), *Rethinking Security in East Asi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pp. 1~33.

I
II
III
IV
V
VI
VII



해 비대칭성이 상당부분 교정될 것이고, 이로 인해 미국이 자국의 전략적 이익에 부합하게 통일한국의 '자율성'을 제어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것이다. 통일한국과 중국 간 경제적 상호 연계성이 심화되는 것을 고려할 때, 통일한국-미국 동맹의 운영 형태는 현재와 같은 '위협 중심'에 맞추어지기 보다는, 동북아시아 안보 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질서 중심(order centric)'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다. 즉, 공통의 위협인 북한이 사라진 상황에서 한미동맹이 중국이라는 잠재적 위협에 대항하여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도구로 기능하기 보다는, 현재 유럽에서 NATO가 그러하듯이 역내 제반 안보 의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구'로 기능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통일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대규모의 미군이 중국과의 국경지역에 배치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음 절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통일한국은 미국과 굳건한 동맹관계를 유지할 것이나, 상위 동맹국의 군대가 하위 동맹국의 영토에 대규모로 주둔하지 않고도 굳건한 동맹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

한반도 통일 후 주한미군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상정할 수 있다. 이 중 몇 가지를 예로 든다면, 첫째, 주한미군이 현재처럼 휴전선 이남에만 주둔할 수 있다. 둘째, 호주처럼 상시적 미군기지 없이 일정 수의 미군만 한반도에 순환배치 될 수도 있다. 셋째, 필리핀이나 태국처럼 상시적 미군기지 없이 미군이 한반도 내 일정 군사시설에 대한 접근·사용권을 허용 받을 수 있다. 한국과 미국은 통일과정에서 위의 세 경우를 포함하여 통일 후 주한미군의 규모와 배치에 관해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것이다. 그러한 협의과정에서 한국은 한국 주도 통일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견인하기 위해 중국의 입장을 고려할 것이다.

## 나. 통일한국이 안보적으로 중국에 경도?

북한 붕괴로 인해 직접적 안보위협이 사라진 통일한국이 안보적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국에 경도될 것이라는 일부의 우려도 지나치다. 중국과 한국의 잠재적 영토분쟁, 중국의 지리적 근접성, 미국의 역외 균형자로서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하며 중국에 안보적으로 경도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비록 한국이 지난 수천 년간 중국 주도의 계층적 아시아 질서에 순응했던 경험이 있지만, 통일한국이 지향하는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 등의 가치를 중국이 단시일 내에 전면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중국이 한국의 궁극적 안보협력 파트너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중국의 일각에서 한국 주도로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중국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거세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를 방증한다.

사실 통일한국이 취할 수 있는 안보 정책 기조는 그리 다양하지 않다. 통일한국이 ‘고립주의(isolation)’를 취할 수는 없다. 이는 이미 19세기 한반도의 경험을 통해 한국에게는 적합하지 않음이 판명되었다. 고립주의를 택했던 북한의 붕괴를 고려하면 더욱 자명하다. 군비확장 등 ‘내적균형(internal balancing)’을 통하여 강대국들과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으나, 이는 천문학적 비용이 들 것이기에 가능한 선택사항이 아니다. 더군다나 한국의 급격한 군비증강은 일본을 위시한 타 국가의 군비증강을 불러일으켜 동북아에 ‘무기경쟁(arms race)’을 초래할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한국은 국방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액되어야 한다. ‘중립주의(neutrality)’ 또한 통일한국이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교차하는 반도국가라는 점에서 실용적인 노선이 아니다. 그렇다면 통일

I

II

III

IV

V

VI

VII

한국이 취해야 하는 합리적 안보 정책 기조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동맹 정치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이다.<sup>109</sup>

그런데 통일한국은 중국보다는 미국을 보다 바람직한 동맹국으로 인식할 것이다. 중국에 비해 미국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영토적 야심이 없다. 이에 반해 통일한국과 중국 사이에는 잠재적 영토분쟁 지역도 있고, 양국의 역사인식에도 간극이 있다. 또한 미국은 지리적으로 역외 균형자이지만, 중국은 통일한국과 국경을 맞대게 된다. 아울러 중국의 정치체제와 경제체제는 미국에 비해 민주성과 투명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통일한국의 가치관은 중국보다는 미국의 가치관과 더 유사하다.

통일한국이 안보적 측면에서 중국에 경도될 수 있다는 우려는 일정 부분 과거 노무현 정부 시 한국이 ‘동북아 균형자론’을 주창했던 것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동북아 균형자론’도 한미동맹의 굳건한 기반을 토대로 제기되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만약 한국이 안보적 측면에서 중국에 경도된다면, 일본은 더욱 미국에 경도될 것이다. 결국 통일한국-중국-러시아 대 미국-일본의 ‘적대적 균형관계’가 형성될 것인데, 이는 통일한국의 국익에 배치된다. 통일한국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사이에서 균형자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한미동맹의 테두리 안에서 시도될 것이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대로 통일한국 안보의 주축이 되는 한미동맹은 현재와 같이 특정위협에 대한 ‘균형’이나 ‘헤징’을 ‘존재이성’으로 하기보다는, 역내 안보질서 전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주요한 방점을 두며 운영될 것이다.

---

<sup>109</sup>- Jae Jeok Park and Sang Bok Moon, “Perception of Order as a Source of Alliance Cohesion,” *Pacific Review*, Vol. 27, No. 2 (February 2014), pp. 153~154.

#### 4. 친화적 세력균형으로의 공진

한국 주도 한반도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한국이 건설되는 것을 의미한다. 통일한국은 비핵을 지향하며 민주주의, 인권 등 인류 보편적 규범을 준수한다. 통일한국은 안보적 측면에서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지속시킬 것이다. 미국의 역외 균형자로서의 특성과 미국의 정치 및 시장경제의 가치 체계가 통일한국이 지향하는 바와 부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일한국과 미국의 동맹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균형’ 또는 중국의 부상이 초래할 잠재적 위협에 대한 ‘헤징’을 주된 목표로 운영되기보다는,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이 동의하는 ‘자유주의 질서(liberal order)’를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친화적 세력균형(associative balance of power)’의 도구로 기능할 가능성이 농후하다.<sup>110</sup>

한국은 현재 한반도 분단의 상황에서도 한미동맹과 한중 동반자 관계의 조화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즉,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심화, 발전시키면서 동시에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통일은 약 7천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안보적, 경제적 중견국의 출현을 의미한다. 통일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조화로운 외교를 전개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성립되는 것이다. 통일한국은 역내 안보 질서가 대립적 경합으로 점철되지 않고, 해양세력과 대륙세력이 상호 보완적으로 공진하도록 역내 국가들 사이에서 건설적, 비판적, 미래 지향적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 나갈 것이다.

<sup>110</sup> ‘친화적 세력균형’에 관해서는 Richard Little, “Deconstructing the Balance of Power: Two Traditions of Thought,” p. 88.

# VII. 한반도 통일과 아·태지역 경제협력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 1. 한반도 통일과 아·태지역 경제협력

한반도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져 남북한 경제가 통합된다면 아·태지역 경제협력의 향후 발전 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아·태지역의 역내 경제협력을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의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를 통한 지역 내 시장 통합 노력이 2000년대 중반이후 심화되어 왔고, 그 결과 동아시아 국가들은 이전에 비해 상당한 시장통합을 이루었다. 하지만, FTA를 통한 동아시아 시장통합은 지역통합적 성격보다는 지역분절적 성격이 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아·태지역은 역내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특히,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물류 인프라의 단절성은 아·태지역 경제협력에 매우 큰 비용을 야기하고 있다. 셋째,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이 한중일 동북아 3국을 축으로 주로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북한을 포함한 몽골, 중국 동북지역,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지역 등은 동아시아 지역 경제협력에서 소외되어 왔다. 동북아 지역이 역내 경제협력에서 소외되어 온 것은 한반도 분단이라는 동북아 안보딜레마의 ‘경제적 외부효과’에 기인한다.

한반도 통일이 아·태지역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는 것은 한반도 통일의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고 통일 후 한국의 정치경제적·안보적 위상이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높은 불확실성을 수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한국이 현실화된

I
II
III
IV
V
VI
VII

다면 아·태지역 경제협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점 또한 명확해 보인다. 먼저 아·태지역 경제협력의 관점에서 한반도 통일이 발생시키는 비용의 측면을 살펴보면, 첫째, 북한경제의 재건 및 중국 동북지역 및 극동 시베리아 지역 개발에 필요한 경제적 자원 마련은 역내 국가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통일 이후 아·태지역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 등 역내 국가들의 대립과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의 조율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정치적·외교적 비용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셋째, 통일한국의 경제적 위상 강화에 따라 역내 국가, 특히 중국 등과의 경제적 경쟁이 격화될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아·태지역 경제협력의 정치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다음으로 아·태지역 경제협력의 관점에서 한반도 통일이 발생시키는 편익을 살펴보면, 첫째, 한반도 통일은 아·태지역의 경제적 개발이 안보논리가 아닌 경제적 고려에 의해 진행되는 조건을 형성하여 아·태지역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는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통일한국이 8천만 인구를 가진 거대시장으로 재탄생함으로써, 동북아 지역에서 자유무역지대를 확대하는 주요 행위자로서 기능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 통일한국이 아·태지역에서 차지하는 지경학적 위치로 인해서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 지역의 경제적 연계성(connectivity)을 강화하여 새로운 동북아 경제협력을 촉진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통일은 아·태지역 경제협력의 안보적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역내 국가 간 경제논리에 입각한 지역협력을 추동함으로써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 장에서는 먼저, 아·태지역의 경제협력 현황을 무역, FTA와

같은 경제통합 노력, 생산네트워크 및 교통물류 인프라의 연계성의 측면에서 살펴본다. 다음으로 아·태지역 경제협력의 관점에서 한반도 통일이 발생시키는 비용과 편익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아·태지역의 경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통일 이후의 외교적 과제를 검토하고 한반도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2. 아·태지역 경제협력의 현황

아시아·태평양은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다. 지난 50년간 동아시아 지역은 수출주도 산업화를 통해 유래 없는 경제 성장을 달성했다. 처음에는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신흥공업국이 역내 경제성장을 주도했고, 1990년대 이후에는 중국과 인도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이 고도 경제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함께 교육과 보건 상황의 개선이 이루어지면서 동아시아와 태평양 지역은 빈곤 퇴치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었다. 최근 20년 동안 아·태지역의 인구가 약 9억 명 정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절대빈곤 인구는 1990년의 16억 명에서 2011년 7억5천명으로 감소했다.<sup>111</sup>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무역, 투자(FDI)와 생산네트워크(production network), 그리고 교통물류 인프라의 연계성(connectivity) 확대를 기반으로 지역 내 경제협력의 활성화 및 이에 따른 경제적 역동성의 유지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개별국가 내에서 뿐만 아니라 역내국가 간 교통물류, 에너지 및 통신 분야의 인프라 네트워크의 확대는 역내 국가들이 보다 많은 자원과 시장에 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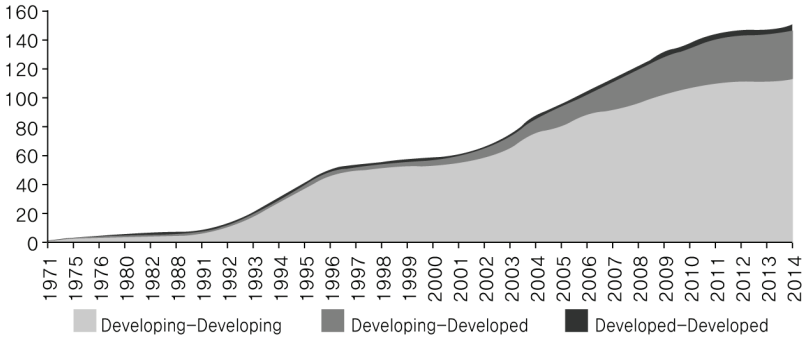
<sup>111</sup>- UN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Statistical Yearbook for Asia and the Pacific 2013* (Bangkok: UN ESCAP, 2013).

I
II
III
IV
V
VI
VII



접근할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역내 경제협력의 활성화와 이에 따른 경제적 생산성 및 소득의 향상을 가능하게 하였다.<sup>112</sup>

● 그림 VII-1 아·태지역 FTA 증가 추세



출처: UN ESCAP, *Economic and Social Survey of Asia and the Pacific 2014: Regional Connectivity For Shared Prosperity* (Bangkok: UN ESCAP, 2014), p. 130, Figure 4.1.

동아시아 지역의 역내 무역량은 2000년 이후 급속히 증가해왔는데 그 주요한 원인은 정부 간 정치적 협상을 통한 시장통합 즉, 역내 FTA의 폭발적인 증가에 힘입은 바가 크다. 1997~1998년 동아시아 금융위기를 계기로 동아시아 국가들은 지역 내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ASEAN+3 차원의 지역협력체를 출범시키고 다양한 지역경제협력을 추진해왔다. 특히, ASEAN과 동북아 지역의 한국, 중국, 일본과의 양자 FTA를 통한 지역경제통합 노력이 경쟁적으로 확대되어 왔고, 이를 통해서 역내 무역자유화가 매우 급속하게 진전되었다.

2014년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체에는 약 149개의 양자 및 다

<sup>112</sup>- UN ESCAP, *Economic and Social Survey of Asia and the Pacific 2014: Regional Connectivity For Shared Prosperity* (Bangkok: UN ESCAP, 2014), p. 128.

자 간 FTA가 체결되었으며, 약 73개의 FTA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아·태지역 경제통합의 구도(architecture)는 최근까지 미국이 주도하는 TPP와 중국이 참여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egional Comprehensive Partnership, RCEP)의 경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최근 중국이 2014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향후 아·태지역의 경제통합의 틀(framework)로서 아시아·태평양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the Asia-Pacific, FTAAP)를 적극적으로 제시하면서 아·태지역의 향후 경제통합의 국제정치적 지형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중국은 2014년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FTAAP의 실질적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고자 하였고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 ‘베이징 로드맵’으로 불리는 ‘FTAAP 구축 로드맵’이 이번 회의를 계기로 정식으로 채택되었고 FTAAP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하였다.

FTAAP은 1994년 보고르 선언 이후 APEC 차원의 경제통합을 위해 미국이 가장 주도적으로 제시해 온 개념이다. 가장 최근으로는 2006년 베트남 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 주도로 FTAAP를 APEC의 장기과제로 설정하기도 하였다. FTAAP의 조기실현을 주창하던 미국은 TPP 협상으로 방향을 선화하였고, 초기에 FTAAP에 별 관심을 나타내지 않던 중국이 미국이 주창해오던 FTAAP 구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의 FTAAP 구상의 실현에 대한 적극적 태도에 대해 미국은 미온적이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TPP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이다. 중국은 ‘TPP의 등장은 동아시아 통합에 대한 중대한 장애요소’로서 TPP와 경쟁하기 위해 형성된 다른 소규모의 여러 FTA를 양산하는 메기효과(catfish effect)를

I
II
III
IV
V
VI
VII

야기하였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sup>113</sup> 즉, TPP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경쟁적 자유화(competitive liberalization)의 논리에 따라 TPP의 등장에 불안을 느끼는 아·태지역의 국가들이 TPP에 대항하는 FTA 형성에 돌입했다는 것이다. 한중 FTA, RCEP, 그리고 한중일 FTA가 그것이다. 이에 따라 아·태지역은 역동적 경제발전에 따라 경제통합의 정도가 이전에 비해 많이 진전되었으나, 수많은 양자 및 다자 FTA로 인해 이전에 비해 더 분절적(fragmented)이 되었다는 것이다.

이 관점에 의하면 TPP는 서비스 산업과 IPR 보호 등 주로 선진국이 비교우위를 갖고 있는 분야에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이익을 확대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아·태지역의 신흥국의 경제적 이해와 일치하지 않는다. 선진국의 필요에 부합하는 TPP 협정은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고 있어서, 그 성격이 폐쇄적이고 투명성이 낮으며 유연성과 편안함을 결여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중국이 참여하고 있는 RCEP은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와 협력정신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RCEP은 개방성, 유연성, 점진주의의 특징을 가지며 참여하는 모든 당사국들이 편안함을 느끼도록 협상이 추진되고 있으며, 아·태지역의 신흥국들이 필요로 하는 개발협력을 강조하고 있다.<sup>114</sup>

중국이 FTAAP를 주창하고 나선 것은 미국이 TPP를 통해 아·태지역의 향후 무역규범과 경제통합 구도(architecture)를 주도하려는 것에 대한 대항적 성격이 강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의 FTAAP 제안은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로의 전략적 재균형정책의

---

<sup>113</sup>- Tang Guoqiang and Wang Zhenyu, "Prospects for Asia Pacific Economic Integration," *China International Studies* (March 2014), pp. 63~87.

<sup>114</sup>- Tang Guoqiang & Wang Zhenyu, "Pathways to Asia Pacific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China US Focus*, March 7, 2014.

경제적 축(economic pillar)인 TPP에 대한 화답의 성격이 강하다. 즉, 중국의 FTAAP 제안은 TPP보다 지역적으로 보다 더 크고, 통합된 경제통합의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TPP의 정치적 모멘텀을 축소하고, 향후 아·태지역 경제통합에 대한 미국의 주도권을 희석시키려는 전략적 의도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마이크 프로만(Mike Froman)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최근 FTAAP를 향한 경로는 APEC의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APEC의 외부, 즉 TPP, RCEP 및 다른 협상포럼에 있다고 언급하였듯이, 미국은 APEC을 FTAAP 구상의 실현을 위한 기제(mechanism)로 활용하지는 중국의 제안에 부정적이다. 월 스트리트 저널(Wall Street Journal)에 보도된 미국 Peterson Institute of International Economics(PIIE)의 추정에 따르면, FTAAP는 중국과 미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무역 협정이다. PIIE는 FTAAP가 실현된다면 2025년까지 미국의 수출은 6,260억 달러가 증가하고, 중국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많은 14조 달러의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반면, TPP 협정하에서는 미국은 이보다 훨씬 적은 1,910억 달러의 수출증대가 예상되고, 중국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중국의 TPP 회원국 시장에 대한 수출에 무역전환 효과가 발생하여 중국의 수출 손실이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즉, 미국이 FTAAP를 거부하고 TPP를 선택한다면, 이는 중국의 경제적 손실을 최대화하기 위해서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선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sup>115</sup>

물론 이러한 논리는 순수한 경제학적 가정에 근거한 단순 논리이지만, 미국이 아시아 재균형정책의 경제적 축으로 추진하고 있

<sup>115</sup> "US Pressures China to Kill Asia-Pacific Free Trade Talks," *The Diplomat*, November 4, 2014.

I
II
III
IV
V
VI
VII

는 TPP에 대한 동력이 중국이 제기한 FTAAP 논의로 인해 희석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미국은 아·태지역의 다양한 국가들과 서로 상충되는 경제적 이해로 인해 그 실현 가능성이 매우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FTAAP보다는 몇몇 핵심쟁점들에 대한 이견만 해소되면 곧 협상의 타결이 임박한 TPP 협상에 집중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가 2014년 11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양국 정상회담에서 타결됨으로써 한중일 FTA 및 RCEP의 추진동력에 새로운 모멘텀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중 FTA의 타결을 계기로 단기적으로는 RCEP과 TPP의 경쟁구도는 보다 선명해졌으며, 아울러 ‘RCEP+a’의 장기비전으로 중국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FTAAP에 대한 논의도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계기로 장기비전으로서 FTAAP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경로로 TPP와 RCEP이 당분간 가장 유효한 대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며, 향후 이 두 경쟁적 FTA 간의 수렴 또는 통합 가능성에 대한 논의도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sup>116</sup> 이에 따라 미국 주도의 TPP, 그리고 중국이 선호하는 RCEP를 중심으로 한 아·태지역의 시장통합노력 및 무역자유화의 추세는 더욱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역내 무역자유화의 진전과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 및 산업생산 공정의 글로벌화에 따라 역내 생산 네트워크(production network)도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1990년대 말 이후 중국, 동남아 특히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에 FDI가 집중적으로

---

<sup>116</sup> Peter A. Petri, Michael G. Plummer and Fan Zhai, “The TPP, China and the FTAAP: The Case for Convergence,” Peter A. Petri, Michael G. Plummer and Fan Zhai (eds.), *Asia-Pacific Economic Integration* (Honolulu: East-West Center, 2014), <<http://ssrn.com/abstract=2438725>>.

흘러들어갔고, 최근에는 베트남이 신흥 투자처로 각광받고 있다.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 아시아 생산네트워크의 중심이 이동함으로써 2009년부터 지역 내 무역(intra-regional trade)량의 증가율이 전통적 수출시장인 북미와 유럽과의 지역 간 무역(inter-regional trade)량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2년의 경우, 한중일 등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 동남아 국가들 간 무역량은 아-태지역의 지역 내 무역량의 7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역내 생산 네트워크의 확대에 따른 중간재(intermediate goods)의 교역 증가에 기인한 바 크다. 동아시아 생산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중국이 자리하고 있는데, 중국은 한국, 일본, 동남아 등 역내 국가들과의 부품생산, 조립, 그리고 북미 및 유럽 소비시장으로의 수출하는데 있어 핵심적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2011년의 경우, 중국 중간재 수입의 50%가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로부터 유입되었다.<sup>117</sup>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의 경제성장은 육상 및 해상 교통물류 인프라 네트워크의 확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아-태지역 국가들은 총 30만km의 도로망을 확장하였으며, 철도망의 확장 및 업그레이드가 진행되었다.<sup>118</sup> 트랜스-아시아 철도 네트워크는 143,000km의 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117,500km의 철도 수송로는 국제적 물류수송에서 매우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트랜스-아시아 철도 네트워크의 상당 부분인 약 11,000km의 구간은 아직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sup>117</sup>- UN ESCAP, *Economic and Social Survey of Asia and the Pacific 2014: Regional Connectivity For Shared Prosperity*, p. 131.

<sup>118</sup>- UN ESCAP, *Review of Developments in Transport in Asia and the Pacific 2013* (Bangkok: UN ESCAP, 2013).

I
II
III
IV
V
VI
VII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동아시아 지역 교통물류 인프라 네트워크의 연계성(connectivity)은 아직 그리 높다고 할 수 없으며, 여전히 상당한 공백들(missing links)이 있다. 중앙아시아, 몽골 등 내륙국가(landlocked)들의 경우 태평양 연안 지역의 주요 해양수송로 상의 항만 및 항공수송로 상의 주요 공항들과의 연계성이 상당히 낮은 것이 현실이다. 철도 네트워크는 도로를 통한 운송보다 화물수송비 절감효과가 높다는 점에서 역내 무역 및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확충되어야 하는 물리적 인프라이다. 유엔 아태경제이사회(ESCAP) 연구에 의하면 2020년 까지 교통물류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어 아·태 지역 교통물류 네트워크의 연결성이 제고되면 이 지역의 실질소득이

● 그림 VII-2 Trans-Asia 철도 네트워크



출처: UN ESCAP, *Economic and Social Survey of Asia and the Pacific 2014: Regional Connectivity For Shared Prosperity*, p. 155, Figure 5.2.

1,000억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sup>119</sup>

동아시아 국가들의 에너지 네트워크의 연결성 또한 아직은 보완해야 할 측면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아·태지역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이다. 2011년 아·태지역 전체로 보면, 이 지역은 세계 석유 및 가스 소비량의 40%, 석탄 소비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sup>120</sup>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 내의 몇몇 국가들은 순 에너지 수출국이지만, 아시아 전체적으로는 에너지 수출량보다는 수입량이 많은 순 수입지역이다. 특히, 한중일 3국은 국제 에너지 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순 에너지 수입국이다.

한중일 3국은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있으나, 그동안 실질적인 협력은 크게 진전되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sup>121</sup> 에너지 분야의 한중일 3국 협력은 주요 에너지 소비국들이 참가하는 ‘5자 에너지장관회의’, ASEAN+3 회의를 계기로 개최되는 ‘에너지관련 정부고위관료회의’, APEC 회의를 계기로 ‘에너지장관회의’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sup>122</sup> ‘5자 에너지장관 회의’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인도가 참여하고 있으며, 에너지안보를 위한 공조체제 구축, 석유비축 확대, 위기 시 비축유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방안 마련, 공동석유 정보체계 참여, 에너지 다변화 및 대체에너지 개발 확대 등의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또한 에너지 안보 확보를 위한 동북아 국가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

119- UN ESCAP, *Economic and Social Survey of Asia and the Pacific 2014: Regional Connectivity For Shared Prosperity*, p. 153.

120-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World Energy Statistics and Balances Database, 2013* (Bangkok: UN ESCAP, 2014), p. 168에서 재인용.

121- 전홍택·박명호 공편, 『동아시아 통합전략(II): 한중일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1).

122- 외교부, 『한중일 협력개황』 (서울: 외교부, 2013).

I
II
III
IV
V
VI
VII



한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주도로 한국, 러시아, 중국, 일본, 몽골, 북한 등 동북아 6개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에너지협력체’ 구축 노력도 한 때 의욕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역내 핵심국가인 일본과 중국이 이에 대해 적극적 자세를 보이지 않음으로써 현실화되지 못했다. 에너지 분야에서 동북아 지역협력이 진전되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는 역내 에너지 다소비 국가인 한중일 3국이 모두 에너지 자원 확보의 측면에서 경쟁적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이 경제논리 보다는 안보논리의 관점에서 에너지 협력문제에 접근해 왔다는 점에 기인한 바 크다.<sup>123</sup>

위에서 간략히 살펴 본 아태지역의 역내 경제협력을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의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크게 세 가지 점이 특징적이다.

첫째,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FTA를 통한 지역 내 시장 통합 노력이 2000년대 중반이후 심화되어 왔고, 그 결과 아시아 국가들은 이전에 비해 상당한 시장통합을 이루었다. 하지만, FTA를 통한 동아시아 시장통합은 지역통합적 성격보다는 지역분절적 성격이 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중일 3국은 2000년 초반 이후 경쟁적으로 아세안과의 양자 FTA를 추진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은 중첩적 FTA로 인한 스파게티 보울(Spaghetti Bowl) 현상이 보다 강화되었다.

둘째,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앙아시아를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은 역내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특히, 한반도 분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물류 인프라의 단절성은 매우 큰 비용을 야기하고 있다. 남북러 가스관 사업, 시베리아 철도(Trans Siberian Railway, TSR)-한반도 종단철도(Trans Korean Railway, TKR) 철도망 연결 사업 등은 북한 리스크로 인해 현재로서

---

<sup>123</sup> 전홍택·박명호 공편, 『동아시아 통합전략(II): 한중일을 중심으로』.

는 추진가능성이 낮다. 북한은 폐쇄적 경제체제로 인해 동북아에서 경제적으로 고립된 하나의 섬과 같은 존재이며, 이로 인해 중국 동북지역 및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셋째, 동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이 한중일 동북아 3국을 축으로 주로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북한을 포함한 몽골, 중국 동북지역,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지역 등은 동아시아 지역 경제협력에서 소외되어 왔다. 이는 동아시아 경제협력이 지리적으로 매우 편중되고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아시아 경제협력이 지리적으로 편중된 것은 한반도 분단이라는 동북아 안보딜레마의 ‘경제적 외부효과’의 결과로 볼 수 있는 바, 향후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이러한 지역 경제협력의 지리적 편중현상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 3. 아·태지역 경제협력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 통일의 비용과 편익

한반도 통일은 그 자체가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통일에 따르는 비용과 편익에 대한 확실한 전망을 도출하기는 매우 어렵다.<sup>124</sup> 마찬가지로 한반도 통일이 아·태지역 경제협력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는 것 또한 한반도 통일의 과정이 어떻게 전개되고, 통일 후 한국의 정치경제적·안보적 위상이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높은 불확실성을 수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한국이 현실화된다면 아·태지역 경제협력에 증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변수

<sup>124</sup> 김석진, “통일비용·편익 논의의 재조명,” 『KDI 북한경제리뷰』, 3월호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4), p. 52.

I
II
III
IV
V
VI
VII

가 될 것이라는 점 또한 명확해 보인다.<sup>125</sup> 따라서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에서 유의미한 역할을 하고, 지역협력 차원에서 야기하는 비용과 편익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전제가 필요하다.

첫째, 한반도 통일이 아·태지역 경제협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려면 통일과정 자체가 무력에 의한 분쟁방식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설사 북한의 내부 붕괴로 인한 급변사태가 발생하더라도 무력분쟁 내지 충돌로 이어지지 않고, 효과적인 위기관리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남북한이 통합하는 과정으로 연결되어야만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 및 동북아 지역경제 협력과정에서 새로운 변수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둘째, 통일과정이 한국 주도로 이루어져 통일된 한반도의 경제 및 정치체제가 북한식의 폐쇄적 계획경제가 아니라, 개방적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정체를 가져야 한다. 이는 가능성은 낮지만, 통일한국의 경제가 외생적 변수에 의해서 폐쇄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말아야 함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중국이 현재 북한경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독점적·배타적 경제적 이권이 통일한국에서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만을 놓고 볼 때, 현재 중국은 대외적으로 단절된 북한경제의 유일한 지원자이며, 북한 광물자원에 채취에 거의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등 북한경제에 대해 특수한 경제적 이권을 가지고 있다. 물론 중국은 북한에서 가지고 있는 경제적 이권을 통일 이후에도 보장하거나 승계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으며, 이는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중국과 해결해야 할 문제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통일한국이 아·태지역, 보다 좁

---

<sup>125</sup> 배정호 외,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

계는 동북아 경제협력에 새로운 촉매가 되기 위해서는 중국경제에 일방적으로 의존적이 되거나, 중국이 통일한국의 경제에 대해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현재와 같이 매우 비대칭적인 중국-북한경제관계가 통일 이후에 그대로 지속된다면, 통일한국의 대외경제 관계는 매우 제약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통일한국의 대외경제관계가 현재와 같이 한반도 분단으로부터 발생하는 안보적 제약을 받지 않고 경제적 논리에 입각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즉, 통일한국의 대외경제 관계가 안보적 논리가 아니라 아태지역의 경제적 논리에 의해 추진될 때 지역차원의 경제협력의 새로운 촉매가 될 수 있다. 통일한국의 안보적 위상이 어떻게 귀결되는가는 통일 이후의 아태지역 경제협력, 보다 좁게는 동북아 국가들 간 경제적 분업구조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에 매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변수가 될 것이다. 현재와 같은 한반도 분단구조에서 발생하는 안보 딜레마는 한국과 북한 모두에게 대외경제 관계 형성에 있어서 심각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통일 이후에 한국을 둘러싼 미중 간 안보적 대립구도가 형성된다면, 통일한국의 대외경제 관계는 심각한 안보적 제약 하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 즉, 통일한국을 둘러싼 미중 간 새로운 안보딜레마가 발생한다면 통일한국의 대외경제는 경제적 논리보다는 안보적 논리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 중국은 통일한국이 친중 또는 최소한 한미동맹을 벗어나 비동맹 중립국이 되기를 원하며, 만약 통일한국이 중국과 적대적이거나 최소한 비우호적 관계를 형성한다면 중국 동북지역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인식한다.<sup>126</sup>

<sup>126</sup> 위의 책, pp. 197~198.

중국은 통일한국이 미국과의 군사동맹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한반도에 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것을 자국에 대한 직접적 안보위협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미국은 통일한국이 한미동맹을 그대로 유지한 채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계속하기를 원한다. 통일한국에 대한 이러한 미중의 상반된 안보적 기대가 효과적으로 조정되지 않을 경우, 통일한국을 둘러싼 미중 간 안보적 대립구도가 격화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통일한국이 아-태지역 경제협력에 긍정적 변수로서 작용하기 위해서는 통일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미중 간 안보적 타협이 이루어지거나, 최소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대립이 존재하지 않아야만 한다.

## 가. 한반도 통일의 비용

### (1) 북한 재건을 위한 경제적 비용

북한경제의 재건 및 중국 동북지역 및 극동 시베리아 지역 개발에 필요한 경제적 자원 마련은 역내 국가들에게 막대한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의 경제개건을 위해서는 엄청난 자원과 개발원조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물론 북한경제 재건에 소요되는 단기적 ‘비용’은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면에서 ‘투자’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sup>127</sup> 북한에 대한 국제원조 및 경제적 지원은 역내 국가들 간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북한의 경제재건을 위한 사회간접자본 건설, 자원개발 그리고 점진적인 상업화에 엄청난 비용이 소모될

127. 김규륜 외, 『통일 비용-편익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 모색』 (서울: 통일연구원, 2011), pp. 9~38.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경제재건과 개발을 통일한국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이 소모될 것이다. 이는 필연적으로 넓게는 아태지역, 좁게는 동북아 역내 국가들 간 경제협력을 통해 수행해야 하는 과제가 될 것이다. 북한의 경제재건과 개발 그 자체가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새로운 지역경제협력을 촉발시키는 강력한 유인이 될 것이다. 하지만 북한경제 재건에 대한 국제지원은 동북아 지역협력 차원에서는 새로운 추가적 비용분담을 의미한다.

아울러, 한반도 통일이 북한의 급격한 붕괴를 계기로 시작되고 이후의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과정을 수반할 경우, 통일비용의 규모는 매우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북한의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관련국들의 경제협력 비용은 매우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통일이 북한의 갑작스런 붕괴가 아니라 점진적이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에 따르는 경제적 비용은 매우 축소될 것이다.

특히, 통일초기 동독에 대한 대규모 경제지원에 막대한 재원이 소모됨으로써 장기간 경기침체를 겪은 독일과 같이 통일 초기에 필요한 북한의 인프라 재건 등에 통일한국의 경제적 역량이 과도하게 소모되는 경우, 통일한국의 국제경제적 역할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북한경제의 재건과정이 장기적으로 지연되고 국제협력을 통해 추진되기 보다는 한국의 독자적 부담으로 진행된다면, 아태지역 경제협력, 특히 동북아 경제협력은 한반도 통일 이후 활성화되기 보다는 위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I
II
III
IV
V
VI
VII

## (2) 동북아 개발협력을 위한 정책조정 비용

북한을 비롯한 동북아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는 역내국가들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나, 역내 국가들의 한반도 통일 이후 동북아 경제개발에 대한 정책적 선호(policy preference)는 매우 다르다.

중국은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특수한 경제적 지위가 유지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에 대한 자국의 경제적 권리가 통일 이후에 약화될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통일한국에 대한 중국의 우월한 경제적 접근이 계속되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128</sup> 아울러 중국은 북한의 경제재건에 지출해야 하는 비용보다는 한반도의 통일이 가져다줄 수 있는 동북 3성 지역의 경제개발에서 오는 편익을 더욱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프라 건설 등 북한경제 재건과 중국의 중공업 기지인 동북 3성의 경제개발이 정책적으로 충돌하는 경우 중국은 후자를 우선시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통일에 수반되는 경제적 효과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최대 목표는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개발과 아·태지역으로의 경제적 진출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는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아·태지역의 경제통합을 주요한 정책적 목표로 추진해 왔다. 러시아는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개발을 통해 아·태지역에서 견고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자국의 정치경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것을 대외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경제의 개방 및 한반도 통일을 자국의 극동지역 개발 및 아·태지역 진출의 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반도 통일 이후의 동북아 지역의 경제개발

---

<sup>128</sup> 배정호 외,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 p. 198.

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 등 주요국의 전략적 목표와 정책적 접근은 매우 상이하다고 할 수 있다. 통일 이후 북한 및 동북아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들 역내 국가들의 대립과 충돌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우선순위의 조율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정치적·외교적 비용은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 (3) 경제적 경쟁의 격화 가능성

통일한국이 인접국인 중국 및 일본과의 새로운 경제적·산업적 경쟁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 동북아 지역차원의 경제협력은 순탄치 않을 수도 있다. 특히, 통일한국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기술적 경쟁력에 더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북한의 노동력을 확보하게 되면 중국에 대한 통일 한국의 산업경쟁력은 보다 강화될 것이다. 1991년 수교 이후 한중 경제관계는 경제적 상호보완성을 기반으로 폭발적으로 발전해왔다. 중국은 값싼 노동력을 기반으로 기술적 우위에 있는 한국 기업들을 유치함으로써 한중 간에는 중간재 교역을 중심으로 한 가공무역에 기초한 상호 ‘윈-윈(win-win)’의 분업구조를 형성하였다. 하지만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한중간 산업격차는 점차 줄어들고 양국의 산업구조는 상호보완적 성격보다는 상호경쟁적 성격이 보다 강해져왔다. 한반도 통일에 따라 북한의 양질의 저가 노동력이 더해진다면 이러한 한중간 산업구조의 상호경쟁적 성격은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북한지역의 운송 및 물류망의 복구는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지만, 남북한경제가 단일한 물류망으로 통합된다면 통일한국이 대중 물류 운송비는 획기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일한국이 남북경제 통합을 통해서 분단으로 인해 끊어졌던 운송과 물류망을 복구하게 되면, 중국에 대한 경제적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I
II
III
IV
V
VI
VII



요컨대 통일한국이 중국의 보다 강력한 산업적 경쟁자로 부상할 경우, 양국 간 경쟁구도는 격화되고, 이는 양국 간 경제협력의 강화가 아니라 경제적 마찰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동북아 경제협력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 나. 한반도 통일의 편익

### (1) 동북아 경제협력의 안보적 제약요인 해소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 지역의 경제적 개발이 안보논리가 아닌 경제적 고려에 의해 진행되는 조건을 형성하여 동북아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는 촉매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가 통일이 되면 남북한 분단 상황에서 발생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로 인한 제약요인이 약화되고, 한반도에 대한 안보 리스크가 현저히 감소되어 북한, 중국 동북지역 및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경제개발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 분단은 중국이 역점을 기울이고 있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중국 동북지역의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것은 한반도 안보 불안이 그 주요한 원인이었던 바, 중국의 국내 투자는 물론 해외투자도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반도 통일은 중국 동북 3성을 비롯한 동북지역 개발을 위한 새로운 동북아 지역 경제협력을 촉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한반도 정세의 불안, 즉 북한 리스크는 러시아의 아태지역에 대한 경제적 진출을 가로 막는 최대의 장애물 역할을 해왔다.<sup>129</sup> 극동

---

<sup>129</sup> 위의 책, pp. 80~81.

시베리아 지역의 개발 및 경제협력에 러시아는 매우 강력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러시아의 극동 시베리아 개발 및 아·태지역 진출은 러시아의 핵심 정책목표이다. 한반도 통일을 계기로 한반도 정세가 안정화 된다면 러시아의 극동 시베리아 개발 및 아·태지역에 대한 경제적 진출이 가시화될 것이며, 이를 계기로 한·역내 경제협력 활성화가 매우 촉발될 것이다.

## (2) 통일한국이라는 거대시장의 등장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에서 인구 8천만의 통일한국이라는 새로운 거대시장의 탄생을 의미한다. 역내 경제협력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경제적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세계 14위 경제규모를 가진 한국의 경제적 위상은 세계 10위권 내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며,<sup>130</sup>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핵심시장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중국에서 개최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양국은 2012년부터 진행해 온 FTA 협상을 전격적으로 타결하였다. 한·중 FTA의 타결은 한국에게는 13억의 경제대국인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최우선적 접근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으로 떠오르는 중국에 대한 무역장벽을 낮춤으로써 경쟁 상대국에 비해 보다 우월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내수 시장의 신장세가 매우 높다. 지난해 4조 7천억 달러이던 내수 시장이 2020년 9조 9천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이미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지난해 교역규모가

<sup>130</sup>- Gooheon Kwon, "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 (Part I)," *Global Economic Papers*, No. 188 (September 21, 2009).

2,289억 달러로 우리 총교역의 21.3%를 차지하고 있다.

통일한국이 8천만 인구를 가진 거대시장으로 재탄생한다면, 한중 FTA로 확대된 자유무역지대가 더욱 확대되고, 한일 간 자유무역지대의 형성 및 러시아와 몽골을 포함한 거대한 아시아 경제지대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sup>131</sup> 거대시장으로서의 통일 한국의 부상은 북한지역, 중국의 동북지역, 그리고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지역을 연결함으로써 동북아 지역개발을 본격화하는 계기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으며, 역내 국가인 중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역외국가인 미국 및 EU 등은 새로운 상품시장과 투자처로서 동북아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보다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그림 VII-3 통일 한국의 교통물류 인프라



출처: 오창섭, “향후 남북통일에 따른 한국경제 및 금융시장 파급효과,” (메리츠증권 Meritz Economic Insights, 2014.3.6).

<sup>131</sup>- 배정호 외,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

### (3) 아·태지역의 경제적 연계성 강화

통일한국이 아·태지역 및 동북아에서 차지하는 지경학적 위치로 인해서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 지역의 경제적 연계성(connectivity)을 강화하여 새로운 동북아 경제협력의 촉매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통일한국은 향후에 형성될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지리적 중심에 위치해 있다. 동북아 지역은 그동안 북한이라는 역내의 경제적 연계성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인해 지리적으로 분절되어 있었다.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 지역에서 북한이라는 지리적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통일한국이 동북아 주요지역을 잇는 지리적 허브(hub) 역할을 하는 것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반도 통일을 계기로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경제적 연계성 확보는 역내 경제협력 활성화의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러시아는 한반도 통일을 통해 남북한의 운송물류 인프라 등 경제적 연계성의 복구를 발판으로 아·태지역에 대한 경제적 진출을 강화하고, 극동 시베리아 지역의 개발을 추진하는데 최대의 목표를 두고 있다. 통일된 한반도는 러시아에게 있어서는 아·태지역과의 경제적 연계를 강화하는 핵심적인 ‘통로’로 기능할 수 있다.<sup>132</sup> 이러한 측면에서 한반도 통일은 남북러 가스관, TSR-TKR 철도망 및 전력망 그리드 연결 등을 통해 교통물류 및 자원 에너지 등의 영역에서 대륙과 해양의 연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동북아 지역협력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새로운 발판으로 기능할 수 있다.

<sup>132</sup> 위의 책, p. 289.

#### (4)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의 기반

통일한국은 장기적으로는 한·중·일·러 및 몽골 등을 포괄하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북한의 인프라 건설 등 통일 초기에 수반되는 북한경제의 재건 작업은 한국을 비롯한 역내 국가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지역협력의 촉매로서 기능할 수 있다. 아울러 교통물류, 운송, 에너지 인프라 네트워크 등 경제적 연계성의 강화는 중국의 동북 3성 및 러시아의 극동 시베리아 개발을 위한 지역협력의 기반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통일은 그동안 동북아 지역의 경제협력을 가로막아왔던 안보적 제약요인을 제거하고, 동북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경제적 기회와 모멘텀을 제공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동북아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물질적 토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통일이 창출하는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경제협력이 추진되려면 역내 참여국들의 정책적 선호의 차이를 극복하고 정책적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정치적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곧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역내 참여국 간 정치적 협상을 통한 새로운 지역 경제협력 모델의 형성을 의미하며, 중장기적으로는 FTA와 같은 역내 국가 간 경제통합을 추동하는 제도적 협력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요컨대,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 경제협력의 안보적 장애물을 제거하고 역내 국가간 경제논리에 입각한 지역협력을 추동함으로써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 4. 아·태지역 경제협력과 한반도 통일외교의 과제

### 가. 이행기 북한경제 안정적 관리를 위한 외교적 노력

한반도 통일이 아·태지역 경제협력의 측면에서 긍정적 변수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통일과정에서 이행기 북한경제의 안정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통일과정이 평화적이고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북한경제의 전환에 필요한 각종 법적·제도적 경제기반을 안정적으로 형성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통일 이후 북한경제체제의 전환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 한국에게 한반도 경제의 리스크 요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과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의 독자적인 노력보다는 주변 핵심국과의 면밀한 외교적 조율이 필요하다. 통일 이후 북한 내부의 경제적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이행기 경제가 가질 수 있는 각종 경제적 리스크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변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이 한반도 통일 이후 통일한국에 대해 어떠한 경제정책을 취할 것인가는 북한경제의 체제전환 및 한반도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다. 따라서 주변국과의 면밀한 외교적 조율을 통해서 이행기 북한경제의 안정적 관리에 외교적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 나. 북한경제의 재건을 위한 역내 경제협력의 활성화

북한경제의 재건과 지원을 위해서 단기적으로 동북아 역내국가들 간의 협력을 어떻게 조직하고 추진할 것인가의 과제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경제의 재건을 위한 국제 컨소시엄의 형성, 북한 인프라 개발을 위한 ‘동북아 개발은행(가칭)’ 등 기존에

I

II

III

IV

V

VI

VII

제시된 다양한 방식을 모색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참여국들의 정치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역내 경제협력의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바, 이는 통일한국이 직면하는 새로운 외교적 과제가 될 것이다.

북한경제의 재건 작업은 비용의 측면에서 커다란 재원이 소요될 것이지만, 통일한국에게는 역내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추동하는 새로운 동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앞서 지적하였듯이 통일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지역경제 협력에 대한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정책적 선호와 우선순위는 상이하다. 한반도 통일 이후 역내 국가들과의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상이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효과적으로 조율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 다. 새로운 지역 경제협력 모델의 형성

한반도가 통일되면 중장기적으로 북한지역을 포함한 동북아의 경제 개발을 위해서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지역협력 모델이 필요하다. 한반도 통일 이후의 통일한국 및 동북아의 경제지형은 한반도 분단 상황과는 상이할 것이며, 새로운 경제적 조건에서 동북아 지역협력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는 중요한 과제이다. 특히, 통일한국은 확대된 국내시장, 북한의 저렴한 양질의 노동력, 북한의 풍부한 지하자원, 그리고 남북 물류교통망의 복구 등 새로운 경제적 기반을 갖추게 될 것이며, 이는 한중일 동북아 3국 간 새로운 경제적 분업구조 및 협력모델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한반도 통일의 관점에서 보면, 남북한 분단 및 대치구도로 인한 안보적 제약요인으로 인해 동북아 지역의 기존 경제협력 모델은 지리적으로 편중되고, 물류 인프라의 단절로 인해 매우 왜곡되어 진행

되어 왔다. 한반도 통일은 역내 경제협력에 대한 안보적 제약요인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경제적 기반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모델을 필요로 하며, 이는 통일 이후 한국이 풀어야 할 지역경제협력의 핵심적 외교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5. 통일외교 전략의 시사점

이 장에서는 동북아 경제협력의 관점에서 본 한반도 통일이 발생시키는 비용과 편익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통일외교 전략의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한반도 통일은 단기적으로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막대한 경제적 비용, 역내 참여국들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위한 정치적 정책조정 비용, 통일 이후 통일한국을 포함한 역내 주요국 간 경제적 경쟁의 격화 가능성 등의 경제적·정치적 비용을 발생시킨다.

하지만,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 경제협력의 안보적 제약요인의 해소, 통일한국이라는 거대시장의 탄생, 동북아 지역의 인프라 및 경제적 연계성의 강화,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기반 제공 등 비용에 비해 비교할 수 없는 정치적·경제적 편익을 제공한다.

이러한 한반도 통일이 동북아 경제협력의 관점에서 제공하는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행기 북한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외교적 노력, 북한경제 재건을 위한 역내 경제협력의 활성화, 그리고 통일 이후 변화된 한반도의 경제적 여건에 맞는 새로운 동북아 지역협력 모델의 구축 등과 같은 향후 통일외교의 과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I

II

III

IV

V

VI

VII



# 참고문헌

## 1. 단행본

- 김규륜 외. 『통일 비용·편익의 새로운 접근: 포괄적 연구요소의 도입과 대안의 모색』.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배정호 외. 『북한 핵의 국제정치와 한국의 대북 핵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_\_\_\_\_. 『오바마-시진핑 시대의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한국의 대북 및 통일외교 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_\_\_\_\_.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배정호. 『아베정권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서울: 통일연구원, 2007.
- 아산정책연구원. 『동북아 질서와 한중관계의 미래: 경쟁과 협력사이』.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14.
- \_\_\_\_\_. 『연례여론조사보고서: 국민의식조사결과』.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10, 2011, 2012, 2013.
- 외교부. 『한중일 협력개황』. 2013.
- 전홍택·박명호 공편. 『동아시아 통합전략(II): 한중일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2011.
- 조영남. 『용과 춤을 추자: 한국의 눈으로 중국 읽기』. 서울: 민음사, 2012.
- 최 강 외. 『한미동맹의 도전과 과제: 한미관계와 동북아 내 미국의 역할에 대한 한국인의 의식』. 서울: 아산정책연구원, 2014.

Huntington, Samuel. *The Clash of Civilizations and the Remaking of World Order*. New York, N.Y.: Simon & Schuster, 2011.

UN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Regional Connectivity For Shared Prosperity*. Bangkok: UN ESCAP. 2014.

\_\_\_\_\_. *Review of Developments in Transport in Asia and the Pacific 2013*. Bangkok: UN ESCAP, 2013.

\_\_\_\_\_. *Statistical Yearbook for Asia and the Pacific 2013*. Bangkok: UN ESCAP, 2013.

\_\_\_\_\_. *Economic and Social Survey of Asia and the Pacific*. Bangkok: UN ESCAP, 2014.

黃鳳志·劉清才·張慧智 等 著. 『東北亞黃皮書: 東北亞地區政治与安全』.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4.

日本 外務省. 『外交青書 2014』. 2014.

## 2. 논문

김석진. “통일비용·편익 논의의 재조명.” 『KDI 북한경제리뷰』. 3월호 (한국개발연구원), 2014.

김영호. “중국의 ‘신형대국관계’ 전략의 의미와 전망.” 『時代精神』. 2013년 겨울호 (시대정신), 2013.

김현수. “미국의 신국방전략과 한국의 대비 전략.” 『국가전략』. 제18권 2호 (세종연구소), 2012.

박재적.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최진욱 외.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서울: 통일연구원, 2013.

- 박재적·김동수. “비전통안보의 부상과 아·태지역 미국 주도 동맹 체제 강화: 한미동맹에의 함의.” 『국제문제연구』. 제14권 1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14.
- 이노구치 다카시. “중국 시진핑 정부의 출범과 북중관계 전망.” 『수은북한경제』. 2013년 여름호 (한국수출입은행), 2013.
- \_\_\_\_\_. “한반도 통일에 관한 일본의 입장과 역할.”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4국의 입장 및 역할』. 서울: 통일연구원, 2011.
- 이춘복. “북한 3차 핵실험 후 중국의 대응과 북중관계: 시진핑 시대 중국의 대북정책은 진화하고 있는가.” 『JPI 정책포럼』. No. 2013-04 (제주평화연구원), 2013.
- 한석희. “시진핑 지도부의 대외관계 분석: 대미정책과 대북정책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제18권 4호 겨울호 (세종연구소), 2012.
- \_\_\_\_\_. “중국 시진핑 정부의 출범과 북중관계 전망.” 『수은북한경제』. 2013년 여름호 (한국수출입은행), 2013.
- \_\_\_\_\_. “중국 주변국 외교의 성공전략.” 『성균차이나브리프』. 제2권 2호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2014.
- Alagappa, Muthiah. “The Study of International Order: An Analytical Framework.” M. Alagappa (eds.). *Asian Security Order: Instrumental and Normative Featur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3.
- Bedeski, Robert E. “Sino-Korean relations: triangle of tension, or balancing a divided peninsula?.” *International Journal*. Vol. 50, No. 3, Summer 1995.
- Duffied, John. “NATO’s Functions after the Cold War.” *Political Science Quarterly*. Vol. 109, No. 5, 1994-1995.

- Guoqiang, Tang and Wang Zhenyu. "Prospects for Asia Pacific Economic Integration." *China International Studies*. January/February 2014.
- Han, Sukhee. "China's Charm Offensive to Korea: A New Approach to Extend the Strategic Buffer." *Asan Institute Open Forum*. Vol. 2, No. 6, 2014.
- \_\_\_\_\_. "China's Post-Cheonan and Yoenpyeong Policy toward North Korea." *EAI Asia Security Initiative Working Paper 27*. October 2012.
- Katzenstein, Peter and Rudra Sil. "Rethinking Asian Security: A Case for Analytical Eclecticism." J.J. Suh, Peter Katzenstein and Allen Carlson (eds.). *Rethinking Security in East Asi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 Kurtov, Azhdar. "CSTO and GUAM as Element of the transformation the former USSR's space." *Central Azia and Kabkaz*. No. 3-4, 2008.
- Kwon, Goohoon. "A United Korea? Reassessing North Korea Risks (Part I)." *Global Economic Papers*. No. 188, September 2009.
- Lampton, David M. "A New Type of Major-Power Relationship: Seeking a Durable Foundation for U.S.-China Ties." *Asia Policy*. Vol. 16, July 2013.
- Little, Richard. "Decembronstructing the Balance of Power: Two Traditions of Thought." *Review of International Studies*. Vol. 15, No. 2, April 1989.
- Morrow, James. "Alliances and Asymmetry: An Alternative to the Capability Aggression Model of Allianc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5, No. 4, November 1991.

- Park, Jae Jeok and Sang Bok Moon. "Perception of Order as a Source of Alliance Cohesion." *Pacific Review*. Vol. 27, No. 2, February 2014.
- Park, Jae Jeok. "The Persistence of the US-led alliances in the Asia-Pacific: an order insurance explanation." *International Relations of Asia-Pacific*. Vol. 13, No. 3, July 2013.
- Petri, Peter A., Michael G. Plummer and Fan Zhai. "The TPP, China and the FTAAP: The Case for Convergence." Petri, Peter A., Michael G. Plummer and Fan Zhai (eds.). *New Directions in Asia-Pacific Economic Integration*. Honolulu: East-West Center, 2014.
- Swaine, Michael D. "China's Assertive Behavior, Part One: On 'Core Interests'." *China Leadership Monitor*. Issue 34, Winter 2011.
- Victor Cha. "Powerplay: Origins of the U. S. Alliance System in Asia." *International Security*. Vol. 34, No. 3, Winter 2009/2010.
- 李向陽 主編. "未來5~10年, 中國的周邊安全环境: 主要影響因素与發展趨勢." 『亞太藍皮書: 亞太地區發展報告(2014)中國的周邊环境』.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4.
- 王義桅. "中國夢: 破解后崛起時代的道通性難題." 『人民論壇·學術前沿』. 2013年.
- 王義桅·韓雪晴. "國際關係理論的中國夢." 『世界經濟与政治』. 2013年第8期.
- 張蘊嶠. "中國与周邊關係: 命運共同体的邏輯." 『人民網-人民論壇』. 2014年 2月 18日.
- \_\_\_\_\_. "理解十八大以來的中國外交." 『外交評論』. 2014年 第2期.

### 3. 기타자료

『동아일보』.

『매일신문』.

『문화일보』.

『연합뉴스』.

『조선닷컴』.

『조선일보』.

『주간조선』.

『중앙데일리』.

『중앙일보』.

『한겨레』.

『한경닷컴』.

*China US Focus.*

*East Asia Forum.*

*IBTimes UK.*

*The Diplomat Magazine.*

*The Economist.*

*The Foreign Affairs.*

*The Straits Times.*

『讀賣新聞』.

『東京新聞』.

『新華网』.

『日本經濟新聞』.

『朝日新聞』.

러시아 연방지하자원이용청.

러시아 중앙여론조사 연구소.

러시아의 소리. <<http://korean.ruvr.ru>>.

러시아포커스. <<http://russiafocus.co.kr>>.

일본 수상관저. <<http://www.kantei.go.jp>>.

일본 외무성. <<http://www.mofa.go.jp>>.

일본 방위성. <<http://www.mod.go.jp>>.

제주평화연구원. <<http://www.jpi.or.kr>>.

Army Technology. <<http://www.army-technology.com>>.

EAI 동아시아연구원. <<http://www.eai.or.kr>>.

East Asia Forum. <<http://www.eastasiaforum.org>>.

IMF. <<http://www.imf.org>>.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http://www.nbr.org>>.

The ASAN FORUM. <<http://www.theasanforum.org>>.

中國人民大學歐洲問題研究中心. <<http://www.cesruc.org>>.

中國社會科學院世界經濟政治研究所. <<http://ejournal.iwep.org.cn>>.

香港中文大學. <<http://www.usc.cuhk.edu.hk>>.

김지윤·이의철·강충구·칼 프리도프. “시진핑 방한의 성과와 과제:  
일장중몽(一場中夢)과 흔들리지 않는 여론.” 아산정책연구  
원 이슈브리프 2014-17, 2014.7.14.

- 아산정책연구원. “South Koreans and Their Neighbors 2014.” 아산정책연구원 기획조사, 2014.4.19.
- 오창섭. “향후 남북통일에 따른 한국경제 및 금융시장 파급효과.” 메리츠증권 Meritz Economic Insights, 2014.3.6.
- 이기현.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중국의 대북정책 변화 가능성.” 통일연구원 Online Series CO 13-06, 2013.2.25.
- 박병광. “중·일간 조어도(센카쿠) 갈등의 배경과 파급영향.” 아산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2012-29, 2012.9.27.
- Pollack, Jonathan D. and Jeffrey A. Bader, “Return to the Asia Rebalance.” Brookings Institute, Memorandum to the President. January 23, 2014.
- Schwartz, Laura. “Competition and Confrontation in the East China Sea and the implications for U.S. Policy.” The National Bureau of Asian, Research Roundtable Report. February 2014.
- \_\_\_\_\_. “NSA Susan Rice in China: Rethinking ‘New Type Great Power Relations.’” *The Diplomat*. September 10, 2014.
- Shin, Gi-Wook, David Straub, and Joyce Lee. *Tailored Engagement: Toward and Effective and Sustainable Inter-Korean Relations Policy*. The Freeman Spogli Institute for International Studies, September 2014.
- 日本 外務省. 『國家安全保障戰略について』. 2013.12.17
- 首相官邸. 『新たな時代における日本の安全保障と防衛力の将来構想』. 新たな時代の安全保障と防衛力に関する懇談會. 2010. 8.27.



연구총서

2012-01	미국의 對韓 핵우산정책에 관한 연구	전성훈	14,000원
2012-02	북한부패와 인권의 상관성	김수암 외	11,000원
2012-03	보호책임(R2P) 이행에 관한 연구	이규창 외	11,000원
2012-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유럽공동체 형성기를 중심으로	손기웅 외	14,000원
2012-05	김정은체제의 권력엘리트 연구	이교덕 외	13,000원
2012-06	독재정권의 성격과 정치변동: 북한 관련 시사점	박형중 외	11,000원
2012-07	북방삼각관계 변화와 지속: 북한의 균형화 전략을 중심으로	허문영, 유동원, 심승우	10,000원
2012-08	북한 핵문제의 전망과 대응책: 정책결정모델(Decision Making Model)을 이용한 전략 분석	홍우택	8,000원
2012-09	중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연구기관 및 전문가 현황분석	전병곤, 양갑웅	6,000원
2012-10	2000년대 대북정책 평가와 정책대안: '동시병행 선순환 모델'의 원칙과 과제	박종철 외	12,500원
2012-11	리더십교체기의 동북아 4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 변화와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외	11,500원
2012-12	김정은 정권의 정책전망: 정권 초기의 권력구조와 리더십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최진욱, 한기범, 장용석	7,500원
2012-13	신정부 '국가전략 DMZ 평화적 이용'	손기웅 외	8,000원
2013-01	남북러 가스관과 동북아 에너지 협력의 지정학	이기현 외	6,000원
2013-02	한국의 FTA전략과 한반도	김규륜 외	8,500원
2013-03	김정은 체제의 변화 전망과 우리의 대책	박종철 외	10,000원
2013-04	EC/EU사례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 EC기 분석을 중심으로 -	손기웅 외	12,000원
2013-05	오바마 시진핑 시대의 동북아 국가들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한국의 대북 및 통일외교	배정호 외	11,000원
2013-06	북한사회 위기구조와 사회변동전망: 비교사회론적 관점	조한범, 황선영	6,000원
2013-07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연구	이규창 외	12,500원
2013-08	새로운 세대의 탄생: 북한 청소년의 세대경험과 특성	조정아 외	15,000원
2013-09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책 연구	홍우택	6,000원
2013-10	북한에서 국가재정의 분열과 조세 및 재정체계	박형중, 최사현	7,000원
2013-11	북한경제의 비공식(시장)부문 실태 분석: 기업활동을 중심으로	임강택	11,000원
2014-01	북-중 간 인적 교류 및 네트워크 연구	이교덕 외	7,500원
2014-02	북한변화 촉진 및 남북친화성 증대: 이론발굴과 적용모색	박형중, 박영자	7,500원
2014-03	북한 비공식 경제 성장요인 연구	김석진, 양문수	9,000원
2014-04	신동북아질서 시대의 중장기 통일전략	성기영 외	7,000원
2014-05	'행복한 통일'로 가는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합정책:		

	EC/EU 사례 분석을 통한 남북 및 동북아공동체 추진방안	손기웅 외	6,000원
2014-06	탈북청소년의 경제 경험과 정체성 재구성	조정아, 홍민, 이희영, 이항규, 조영주	14,000원
2014-07	한국의 대북 인권정책 연구	한동호	6,000원
2014-08	법치지원과 인권 증진: 이론과 실제	이금순, 도경옥	8,000원
2014-09	신뢰정책의 과제와 추진전략	박영호, 정성철 외	11,000원
2014-10	대미(對美)·대중(對中) 조화외교: 국내 및 해외 사례연구	김규륜 외	10,500원
2014-11	북한의 핵전략과 한국의 대응전략	정영태, 홍우택 외	12,000원
2014-12	중국의 주변외교 전략 연구: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대한 함의	이기현, 김애경, 이영학	7,000원

### 학술회의총서

2012-01	The Outlook for the North Korean Situation & Prospects for U.S.-ROK Cooperation After the Death of Kim Jong-il		6,000원
2012-02	김정은 체제의 북한 인권문제와 국제협력		19,000원
2012-03	해외 이주·난민 지원제도의 시사점		12,000원
2013-01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증진방안		20,000원
2013-02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추진전략		19,000원

### 협동연구총서

2012-11-01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프로그램 실행방안(총괄보고서)	임강택 외	11,000원
2012-11-02	북한 부패실태와 반부패 전략: 국제협력의 모색	박형중 외	10,000원
2012-11-03	북한 경제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체계 구축 및 개발지원전략 수립 방안	장형수 외	8,000원
2012-11-04	북한의 역량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	이종무 외	8,000원
2012-11-05	북한의 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 프로그램 추진방안	이상준 외	8,000원
2012-12-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I) -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한반도 주변4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3,500원
2012-12-02	공공외교의 이론적 조명과 주변4국의 한반도통일 공공외교 분석틀	김규륜 외	8,500원
2012-12-03	미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9,500원
2012-12-04	중국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교덕 외	7,500원
2012-12-05	일본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진원 외	8,000원
2012-12-06	러시아의 對한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여인곤 외	7,500원
2013-26-01	한반도 통일 공공외교 추진전략(II) - 한국의 주변4국 통일공공외교의 실태 연구(총괄보고서)	황병덕 외	14,000원
2013-26-02	한국의 對미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박영호 외	8,000원

2013-26-03	한국의 對중국 통일 공공외교 실태	전병곤 외	7,500원
2013-26-04	한국의 對일본 통일 공공외교 실태	이기태 외	8,000원
2013-26-05	한국의 對러시아 통일 공공외교 실태	조한범 외	6,000원

## 논총

통일정책연구, 제21권 1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1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1권 2호 (2012)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1, No. 2 (2012)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2권 1호 (201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1 (201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2권 2호 (201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2, No. 2 (201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3권 1호 (201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3, No. 1 (201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23권 2호 (201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23, No. 2 (2014)	10,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12	김수암 외	1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2</i>	손기웅 외	23,500원
북한인권백서 2013	조정현 외	24,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3</i>	조정현 외	23,000원
북한인권백서 2014	한동호 외	24,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14</i>	한동호 외	23,000원

## 기타

2012	탈북자 관련 국제조약 및 법령	이규창 외	19,500원
2012	북한인권 이해의 새로운 지평	북한인권연구센터 편	20,500원
2012	알기쉬운 통일교육: 해외한인용	허문영 외	30,000원
2012	통일대비를 위한 대북통일정책 모색(통일대계연구 12-01)	박형중 외	15,000원
2012	통일한국에 대한 국제적 우려해소와 편약: 지역 및 주변국 차원 (통일대계연구 12-02)	박종철 외	14,000원
2012	Korean Unification and a New East Asian Order (Grand Plan for Korean Unification 12-03)	최진욱 편저	6,000원

2012	Korean Peninsula Division/Unification: From the International Perspective Kim Kyuryoon, Park Jae-Jeok	13,000원
2012	중국의 국내정치 및 대외정책과 주요 국가들의 대중국 전략	배정호, 구재희 편 22,000원
2012	China's Domestic Politics and Foreign Policies and Major Countries' Strategies toward China Bae Jung-Ho, Ku Jae H.	22,500원
2012	통일 비용·편익의 분석모형 구축(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2-1)	김규륜 외 11,500원
2012	'선도형 통일'의 경로와 과제(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2-2)	김규륜 외 9,000원
2013	유엔 인권메커니즘과 북한인권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편 18,000원
2013	중국 시진핑 지도부의 구성 및 특징 연구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정책협력방안 2013)	전병곤 외 9,000원
2013	통일 이후 통합을 위한 갈등해소 방안: 사례연구 및 분야별 갈등해소의 기본방향	박종철 외 13,000원
2013	한반도 통일에 대한 동북아 4국의 인식 (통일외교 콘텐츠 생산(1))	배정호 외 16,5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조정아 외 11,000원
2013	알기 쉬운 통일교육III: 북한이탈주민용 수업지침서	조정아 외 6,000원
2013	민주화 및 양질의 거버넌스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 (통일대계연구 13-01)	박형중 외 13,500원
2013	시장화 및 민권감소형 경제질서 수립: 북한 변화와 통일을 위한 시사점 (통일대계연구 13-02)	임강택 외 12,500원
2014	The Trust-building Process and Korean Unification (통일대계연구 13-03)	최진욱 편저 8,000원
2013	통일대계연구: 4년 연구 종합논의 (통일대계연구 13-04)	박형중 외 8,000원
2013	정치·사회·경제 분야 통일 비용·편익 연구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1)	조한범 외 17,500원
2013	The Attraction of Korean Unification: Inter-Korean and International Costs and Benefits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2)	김규륜 외 15,500원
2013	한반도 통일의 미래와 주변 4국의 기대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3-3)	김규륜 외 10,500원
2013	전환기 중국의 정치경제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1)	배정호 외 15,500원
2013	China's Internal and External Relations and Lessons for Korea and Asia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2)	Bae Jung-Ho, Ku Jae H. 17,500원
2013	중국의 대내외 관계와 한국의 전략적 교훈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통일시대 한중관계 전망 2013-3)	배정호, 구재희 편 16,500원
2014	중국 권력엘리트와 한중교류 네트워크 분석 및 DB화 (중국 지도부의 리더십 분석과 한중 정책협력방안 2014)	전병곤, 홍우택, 신중호 외 9,000원

2014	북한의 시장화와 인권의 상관성 (『북한인권정책연구』 2014)	북한인권연구센터	11,000원
2014	동북아 4국의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과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배정호, 봉영식, 한석희 외	9,500원
2014	2014 통일에측시계	박영호, 김형기 편	9,500원
2014	통일한국의 국가상과 한중협력 (통일대비 중국에 대한 종합적 전략 연구 2014-01)	배정호 외	15,500원
2014	China's Strategic Environment and External Relations in the Transition Period (A Comprehensive Strategic Study on China in Preparation for Korean Unification 2014-02)	Bae, Jung-Ho et al.	18,000원
2014	Global Expectations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1)	Kyuryoon Kim et al.	19,000원
2014	Lessons of Transformation for Korean Unification (Research on Unification Costs and Benefits 2014-02)	Kyuryoon Kim et al.	15,500원
2014	한반도 통일의 효과 (통일 비용·편익 종합연구 2014-3 )	김규륜 외	14,500원
2014	2014 남북통합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박종철, 허문영, 송영훈, 김갑식, 이상신, 조원빈	12,000원

### 연례정보보고서

2012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2~2013	7,000원
201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13~2014	7,000원

### KINU 정책연구시리즈

비매출

2012-01	통일재원 마련 및 통일인지 결집 관련 국민의 인식	김규륜, 김형기
2012-02	2012년 상반기, 북한 정책동향 분석: 북한 매체의 논조를 중심으로	박형중 외
2012-03	러시아의 극동개발과 북한 노동자	이영형
2012-04	오바마 2기 행정부의 대 한반도 정책 전망	김장호 외
2012-04(E)	The Second Term Obama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the Korean Peninsula	Jangho kim
2012-05	중국 18차 당대회 분석과 대내외정책 전망	이기현 외
2013-01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한 DMZ/접경지역 남북 산업단지 조성방안	손기웅 외
2013-02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 추진 방향	최진욱 외
2013-03	박근혜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비전과 추진 과제	최진욱 외
2013-04	유엔조사위원회(COI) 운영 사례 연구	김수익 외
2013-05	Trustpolitik: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전략 - 이론과 실제 탐색연구 -	박형중 외
2013-06	서독의 대동독 인권정책	안지호 외
2013-07	2013년 북한 정책 논조 분석과 평가	박형중 외

2013-09	김정은 정권의 대남 긴장조성: 2013년과 향후 전망	박영자 외
2013-10	국내불안과 대외도발: 북한에 대한 적용 가능성 탐색	정성철
2013-11	2013년 북한 핵프로그램 및 능력 평가	김동수 외
2013-14	유라시아이니셔티브 구현을 위한 한러 협력 방안	조한범 외
2014-01	농업분야의 지속가능한 대북지원 및 남북 협력방안 모색	임강택, 권태진

###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비매출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1호	손기웅 외
2012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7권 2호	손기웅 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1호	이금순 외
2013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8권 2호	이금순 외
2014	북한인권: 국제사회 동향과 북한의 대응, 제9권 1호	이금순 외

### Study Series

비매출

2012-01	Study of Disciplinary Problems in the North Korean Army	Lee Kyo Duk, Chung Kyu Sup
2012-02	The Quality of Life of North Korean: Current Status and Understanding	Kim Soo Am et al.
2012-03	Basic Reading on Korean Unification	Huh Moon Young et al.
2013-01	Study on the Power Elite of the Kim Jong Un Regim	Lee Kyo Duk et al.
2013-02	Relations between Corruption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Kim Soo Am et al.
2013-03	Easing International Concerns over a Unified Korea and Regional Benefits of Korean Unification	Park Jong Chul et al.
2013-04	'Peaceful Utilization of the DMZ' as a National Strategy	Son Gi Woong et al.
2014-01	Korea's FTA Strategy and the Korean Peninsula	Kim, Kyuroon et al.
2014-02	The Perceptions of Northeast Asia's Four States on Korean Unification	Bae, Jung-Ho et al.
2014-03	The Emergence of a New Generation: The Generational Experience and Characteristics of Young North Koreans	Cho, Jeong-ah et al.
2014-04	Geopolitics of the Russo-Korean Gas Pipeline Project and Energ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Lee, Kihyun et al.
2014-05	Fiscal Segmentation and Economic Changes in North Korea	Park Hyeong Jung, Choi Sahyun

### 기타

2014	북핵일지 1955~2014	조민, 김진하
------	----------------	---------

##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한 국민 역량을 축적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적극적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통일문제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자 연간 회원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회원에게는 간행물을 우편으로 우송해 드리며 각종 학술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혜택을 드립니다.

### 1. 회원 구분

- 가)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나)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소속 연구 종사자
- 다)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 2. 가입방법

- 가) 「회원 가입신청서」 작성
- 나) 신한은행 140-002-389681(예금주: 통일연구원)으로 계좌입금
- 다) 연회비: 학생회원 7만원, 일반회원 10만원, 기관회원 20만원

### 3. 회원 특전

- 가)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
- 나) 연구원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인 『통일정책연구』,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 단행본 시리즈인 연구총서, 학술회의총서, 협동연구총서 등 우송
- 다) 도서관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
- 라) 구간자료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


### 4. 회원가입 문의

- 가)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출판자료팀 도서회원 담당자(books@kinu.or.kr)
- 나) 전화: (02)901-2679, FAX: (02)901-2545
- 다)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 가입기간 중 주소변경 시에는 즉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 4국의 대외전략 및  
대북전략과 **한국**의  
**통일외교 전략**

 통일연구원



ISBN 978-89-8479-782-6